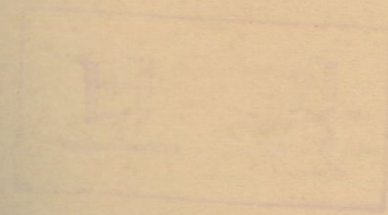


“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

평양토론회 자료집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토론회 자료집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한국실행위원회

보관

평화강제회

차 례

* 대표단 소개	1
* 남측대표단 평양체류 일정	3
* 도착성명	4
* 개회사	5
* 토론회 I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	7
* 토론회 II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책임”	23
* 토론회 III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	44
* 고별성명	62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토론회 대표단 소개

<북측>

려연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 부의장(단장)
 강관선 - 중앙여맹 부위원장
 김선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영접부 부부장
 정명순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참사(대변인)
 홍선옥 - 군축 및 평화연구소 실장

<일본측>

미키무즈코 - 아세아부인우호회 회장(명예단장)
 시미즈스미코 - 참의원 의원, 일본부인회 의장(단장)
 야마야신코 -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 회장
 시게토미야코 - 조선녀성과련대하는일본부인련락회 보좌원
 오키자키히로미 - 중의원 의원

<남측>

이우정 - 국회의원(공동대표)
 이효재 -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윤정옥 -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공동대표)
 안상남 - 아세아여성신학교육원 원장
 김운옥 -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원장
 윤영애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이미경 - 여성단체연합 부회장
 한명숙 - 한국여성민우회 회장
 강성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남측참관인>

조아라 - 광주YWCA 명예회장	이경숙 - 숙명여대 정치학과교수
이태영 - 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강경숙 - 통일원
조화순 -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최신덕 - 정부제2장관실
조 형 -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장공자 - 충북대 정치학과 교수
권영자 - 여성개발원 원장	한영구 - 외교안보연구원
이은숙 - 서울대 국민윤리 교수	안인혜 - 민족통일연구원

남측대표단 평양체류 일정

일 자	시 간	일 정
9월 1일 (화)	오전 10시 오 후 저 녀	* 판문전 통과 * 고려호텔 도착 * 평양산원, 타아소 참관 * 연회(북측 준비위원회 주최)
9월 2일 (수)	오 전 오 후 저 녀	* 토론회 * 토론회 * 학생소년궁전 방문
9월 3일 (목)	오전 6:30 오 후	* 금강산 출발 * 금강산 등반(구룡폭포, 옥류담)
9월 4일 (금)	오 전 오 후 2:30	* 금강산 등산(삼선대, 만물상, 삼일포) * 금강산 출발 평양도착 * 평양 지하철 참관
9월 5일 (토)	오 전 오 후 저 녀	* 서커스 관람 * 창작사 방문 * 정신대 보고회 * 연회
9월 6일 (일)	오 전 오 후 2:30 5:00	* 김일성 주석궁 방문 점심식사 * 평양 출발 * 판문점 통과

도 착 성 명

친애하는 북녘 동포여러분, 우리는 분단 47년만에 처음으로 북녘 동포들을 찾아온 남측 민간 여성대표입니다. 제 3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토론회에 참석하고자 이곳에 온 우리 일행을 뜨겁게 맞아주신 북녘동포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분단의 높은 장벽과 상호 불신의 깊은 굴을 뛰어 넘어 우리여성은 오로지 생명을 낳아보려고 생명의 터전이 이 땅을 지키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남북여성의 만남을 이루어 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여성들의 만남은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이루고 평화로운 우리 조국의 앞날을 여는 새 역사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제1차 동경토론회에서 남북여성들은 처음으로 열싸 안았으며, 이제는 서로 만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제2차 서울 토론회를 성사시켰습니다. 서울 토론회에서 우리들은 남북 남북민간 여성간의 대화와 괴로움고 외롭고 서로 무엇이 다르며 서로 무엇이 같은가를 확인하고 역시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변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하나되는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남북여성들은 우리여성의 단결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차 평양토론회같은 이 소중한 기회에 우리 남의 대표들은 북녘 여성들을 만나 서로간의 이해와 우정을 돈독히 하고 남북여성문제를 토론하며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앞으로 다양한 여성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평양토론회 동안 반세기 동안 만나지 못했던 북녘여성들과의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여성들의 만남이 조국 통일의 큰 길에 빛나는 이정표가 되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남북여성대표들은 제1차토론회와 제2차 서울토론회에서 쌓은 신뢰와 성과를 딛고 이번 3차 평양토론회가 칠천만 우리겨레의 기대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를 따듯이 맞이해 주신 북녘여성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남쪽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모든 남측여성들이 북측 여성들에게 보내는 평화의 인사를 함께 전합니다. 감사합니다.(이효재 대표 낭독)

개 회 사

이제 평양에서 세번째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의 막을 열려 합니다. (먼저 역사적인 북남 행사로 칠십만인의 가슴 속에서 평화와 통일의 열기가 넘치고 있는데)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양토론회에 참석하러 오신 이효재 선생을 포함한 남조선 모든 여성대표들과 멀리서도 달려와 이 토론회에 참석한 시게오 미야코 선생님과 시미즈 스미코 선생을 비롯한 일본대표들, 그리고 해양, 만, 대륙을 넘어 이 회의장을 찾아오신 해외동포 여러분을 (통일국방부의 선채선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아울러 나는 평양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남조선 여성과 해외동포 여성단체들과 일본의 진보적 여성단체들의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도쿄와 서울에서 행한 두 토론회를 통하여 우리 북남여성들은 서로 오랫동안 품어 왔던 오해와 불신을 부시고 우의를 다지면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대한 뜻을 같이하고 연대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겨레이면서도 분단되어 살아왔고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멀리해 온 북과 남의 여성들과 일본여성들이 울타리를 대담하게 무너뜨리고 접촉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것 뿐만 아니라 진실한 의견 투합을 통하여 (공정이을 위한 해소한 것은) 커다란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미 해놓은 일에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냉전이 끝나고 완화의 기운이 만연하나 우리가 사는 아시아의 세계에서는 냉전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으며 전쟁의 위험도 좀처럼 가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반도에서는 서로 화해하고 긴장을 말해도 민족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약속한 북남합의서가 발효되었으나 전혀 그렇게 되지 않으며 북남관계는 오히려 (최소기간이 재개되어)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이번에 평양에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제 3차 토론회가 가장 큰 평화의 분위기 속에서 남북 통일하게 개최된 것은 참으로 그 의의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북과 남 일본 여성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평화에 대한 여론을 제기하며 가장 진실하게 후천적인 평화적인 목소리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전쟁 세력의 성과를 울궤매고 조선반도 아시아의 우리여성들과 함께 있을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는 데 훌륭히 기여하리라 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로 (...에 ... 영광에 부합되게) 조국 통일 노력하는 일을 함께 모색하고 그 실천문제를 온 민족 앞에 다시 되물어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힘과 용기와 슬기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여성들은 또한 과거 제2 대전 시기 우리 조선여성들이 일본으로부터 당한 불행한 사례

에 대한 온당한 사죄와 보상에 대한 대책을 진지하게 토의함으로써 지난 날에 기록된 역사는 선불리 잊혀져가도 진정으로써 보람지게 살아갈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토론회는 서로가 우열과 승패를 겨루는 마당도 아니고 분석하는 논쟁의 마당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없는 이해의 정신으로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는 데 노력하고 그리고 이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유익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세대와 역사적인 중대한 사명과 의식을 가지고 이번의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데 아낌 없는 노력을 보내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나는 이토록 역사적인 이 토론회가 아세아의 강구한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 하며 인간된 우리 조국의 비극을 하루빨리 이 땅의 사회조국을 해결해 나가는 데 크게 이바지 하는 뜻깊은 토론회가 되리라 확신을 하면서, 역사적인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토론회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토론회 I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

■ 기조보고 ■

강춘금(북한 사회과학원 실장)

여러분 !

나는 남조선과 해외의 우리 자매들 그리고 일본의 여성들이 함께 참가한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이번 토론회의 첫째 의제인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조보고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언어와 피부색, 풍습을 달리하는 수백 수천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민족이란 피줄과 언어, 령토와 문화, 심리적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사회적 집단입니다. 이렇게 정의되는 민족은 고립무원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존하게 되는 것으로 하여 어느 민족이든지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단합을 도모하고 민족 전체의 재능과 슬기를 한데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기에 지나간 인류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소의 차이를 막론하고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의 존엄과 발전을 위해 민족의 단합을 자기의 생존적 요구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더우기 이러저러한 요인으로 하여 수난과 극절을 겪는 민족일수록 민족의 단합을 특별히 강조하고 절절히 호소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나라 력사의 갈피 속에서도 오늘 우리 민족에게서처럼 민족의 대단결이 초미의 시대적 중대사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제기되어 본 적이 없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사실상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대단결을 이룩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민족의 존망을 좌우하는 절박하고도 중대한 문제로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인만큼 북과 남, 해외의 여성대표들이 자리를 같이 한 이번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참으로 의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

반만년의 력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20세기의 마지막 분단민족으로 되어

민족의 대단결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자체가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타고 태어나 같은 언어와 같은 풍습을 이어오면서 대대손손 화목하게 살아온 세상에 보기도문 순결한 단일민족입니다. 지난날 우리 민족은 외세의 거듭되는 침략을 받아왔고 그 과정에 일부 지역이 일시적으로 강점된 때도 있었지만 언제 한번도 하나의 모습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유구한 세월 우리 민족은 한산의 세모시와 길주의 마포, 녕변의 약산단과 전주의 창호지를 바꾸고 함경도 처녀와 서울 총각, 전라도 처녀와 평안도 총각이 서로 시집장가를 오고가면서 의좋게 살아왔습니다. 임진왜란 때에는 부산의 동래산에서 봉화를 올리면 련이어 함경도의 무산과 웅기에서 타올라 온 겨레가 왜적치는 싸움에 떨쳐나서군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은 외세에게 국권이 강탈당한 이후 일제의 간악한 민족리간책동에 의하여 민족 안에는 친일매국세력이 생겨나 민족의 단합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으며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열된 이후 57년 동안이나 격폐되어 남남처럼 살아오는 과정에 불행하게도 우리 민족 안에는 서로 오해하고 불신하는 풍조가 생겨나고 심지어는 피줄을 같이한 겨레이면서도 적대시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분열시켜 통치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 수법입니다. 미국이 남조선에 들어온 이후 시종일관 우리나라의 통일을 가로막아 왔으며 이른바 '공산주의 위협'이라는 허위적인 선전으로 민족내부를 리간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는 데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외세에 명줄을 건 민족 안의 일부 세력이 미국의 민족리간정책에 편승하여 민족내부에 반목과 대결을 고취하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외세에 의해 강요되고 외세와 그에 추종하는 일부 세력 때문에 오래 지속되고 있는 나라의 분열을 끝장내고 통일을 이룩하지 위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이 그처럼 절박하고도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민족대단결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조국통일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립해 보면 민족대단결이란 근 반세기 동안의 민족분열과정에 생긴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한 피줄을 나눈 겨레로서 사상과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화해하고 단합하여 단일민족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대단결은 사상, 리념보다 전 민족적 리익과 요구를 더 우선시하며 사상과 리념을 민족공동의 리익에 복종시켜 나가는 풍조가 민족 안에 지배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민족간에 오래동안 쌓이고 쌓인 오해와 불신, 갈등과 대립을 없애고 서로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며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어 우리 민족

을 본래의 상태, 즉 하나의 유기체로 되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숭고한 의미를 가지는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과 뗄 수 없이 밀접히 련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모두가 입을 모아 한결같이 민족지상의 과제라고 하는 조국통일은 반드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해야 하며 그러자면 조국통일이 외세의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조건에서 7천만 겨레가 서로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이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통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외세와의 관계에서 북과 남을 포괄하는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며 민족 내부적 측면에서 보면 북남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근본전제이자 곧 그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자면 반드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야 하며 그것을 떠나서 조국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대표 여러분 !

지금 북과 남 사이에는 력사적인 북남합의 문건들이 채택발효됨으로써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길에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습니다. 북남합의서는 본질에 있어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하고 협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서약할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남합의서의 구절구절 마다에는 민족대단결의 사상이 관통되어 있으며 매조항들은 민족대단결과 직결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남합의서에 밝혀진 화해조항은 그 자체가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불가침조항과 협력, 교류조항도 민족내부에 존재하는 '남침'과 북침에 대한 위구심을 없애고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은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 문제와 직결된 것입니다. 이처럼 북남합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민족대단결 사상이 관통된 력사적인 합의문건으로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서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지 그 자체가 현실이 아닌 것처럼 가능성이 조성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저절로 현실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이제부터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현시기 우리 녀성들 앞에 나선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의견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통일의 주체는 7천만 우리 민족이며 여기서 녀성이 그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우리 녀성들은 응당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 데서 앞장서야 하며 우리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녀성이 남성과 다른 것은 체질적으로 부드럽고 다감하며 리해심과 동정심이 많은 것으로 하여 서로 싸우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녀성의 이러한 타고난 성품은 가정과 이웃, 나아가서 북남 사이에서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합을 지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

는 데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민족의 분열로 인하여 남자들보다 더 가슴아픈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누구보다도 절절히 바라며 그 실현을 위한 실천투쟁에 적극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여성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관계 없이 모든 여성들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북과 남의 여성들의 경우를 놓고보더라도 신봉하는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이 같지 않으며 각자 그것을 귀중히 여기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상과 리념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그것은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형성되고 공고화된 우리 민족의 리념보다 귀중할 수는 없습니다.

민족은 사상, 리념, 이전의 존재이기 때문에 민족이 있고서야 사상, 리념이 있을 수 있으며 또 사상과 리념은 반드시 민족의 리념을 위해 복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리념을 저버린 그 어떤 사상과 리념이 있다면 엄격히 말해서 그것은 존재가치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상과 리념은 선택할 수 있지만 민족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여 리념은 달라도 형제는 여전히 형제이듯이 리념을 같이 한다고 다름 민족이 같은 민족으로 될 수 없고 리념이 다르다고 하여 하나의 민족이 다른 민족으로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민족은 이렇게 사상, 리념 이전의 존재이고 그보다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상과 리념의 차이를 반드시 민족의 리념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현시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문제는 다름 아닌 조국통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보다 더 중요한 민족적 과업은 없으며 조국을 통일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이제 더이상 하루도 지체시킬 수 없는 가장 절박한 민족적 과제이며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과 직결된 최대의 과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구성원으로 살려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사상과 리념 그리고 정견과 신앙을 신봉하던 관계 없이 그 차이를 덮어놓고 서로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만일 그 어떤 사람이나 세력이 자기들이 신봉하는 사상과 리념을 절대화하면서 다른 사상과 리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배척할래기를 한다면 후세에 가서 자기의 협소한 주의주장에 포로되어 민족의 리념을 저버린 사람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민족적으로 단합하여 통일된 민족을 먼저 찾아야 하며 또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인정합니다.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고 있으며 한 집안 속에서도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으며 또 아버지는 민족주의 사상을 신봉하지만 아들은 다른 사상을 신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배척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가정으로 같은 민족으로 공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족을 더 중시하고 민족적 리념을 첫자리에 놓는 립장에 확고히 서는 데 있습니다. 우리민족은 벌써 오래전부터 사상과 리념을 뛰어넘어 민족공동의 리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한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식민지 통치시기 조국의 광복을 위해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종교인들, 량심적인 민족자본가들을 포함한 각계 각층의 반일애국력량이 모두 단결하여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을 벌인 것은 민족대단결의 훌륭한 모범으로 됩니다. 1948년에 평양에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가 성대하게 소집되고 훌륭한 결실을 맺은 것도 민족대단결의 립장에서 통일협상의 첫 발자국을 땀력사적인 사변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나라와 민족이 하나로 되는 길을 찾으려는 일념에서 70여 명의 문인환 목사가 평양을 방문하여 훌륭한 공동성명을 낸 것이나 1990년부터 3차례에 걸쳐 범민족대회가 성대히 개최된 사실 그리고 범민족통일음악회와 통일축구경기, 특히 북과 남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년축구선수권대회에 유일팀을 이루어 공동으로 출전한 사실들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에 기여한 훌륭한 선례로 됩니다. 그러한 실례를 더이상 들지 않아도 우리가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를 3차례나 가진 것도 북과 남의 여성들이 마음과 힘을 합쳐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하려는 숭고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민족은 비록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능히 단결할 수 있고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북과 남의 여성들이 북남합의서의 정신에 맞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일을 공동으로 벌리는 것입니다.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북과 남이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같은 역사적인 민족대단결 선언을 발표시킨 상태이며 쌍방이 다같이 지난날의 대결정책을 끝장내고 화해하고 단합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선언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북과 남이 실지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당면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근본요인들을 대담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냉정히 고찰해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북남합의서의 실질적인 리행문제가 일정에 오른 마당에서까지 대결정책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으며 혈육들 사이에 담을 쌓게하고 민족의 혈맥을 차단하는 「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형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부세력들은 외세와 함께 동족을 적으로 하여 벌리는 대규모 군사연습도 중지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세력들은 동구라파 사태에 현혹되어 상대방의 제도를 제압하고 자기의 체제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통일'하려는 '제도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들을 사상, 리념이 다르다고 적대시하고 동족을 '승인'없이 만나고 해외에 나가 자기의 동포들과 통일론의를 했다고 하여 잡아가두고 처형하며 동족과 승패를 겨루려는 행위가 계속되는 조건에서는 합의서의 원만한 리행을 기대할 수 없으며 민족대단결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민족의 단합을 원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북과 남 그리고 사상과 리념, 주의주장의 차이를 초월하여 어떤 세력도 민족의 단합을 가로막는 대결정책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운동을 광범히 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보다도 우리 여성들이 동족을 적으로 대하는 대결시대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하며 동족을 적으로 하여 벌리는 위험한 전쟁연습을 중지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할 때 위험이 뒤따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살이와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달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아무리 어렵고 위험하다 하더라도 우리 여성들이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민족은 언제가도 단합될 수 없으며 결국 통일을 이루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호소는 다른사람들의 호소보다 더 힘이 있으며 여성들의 애국운동은 다른 사회성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민족대단결을 위한 애국운동에 앞장섬으로써 가정과 이웃 그리고 온 민족이 그에 합류해 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북과 남, 해외동포 여성들이 자주 만나야 한다고 봅니다. 혈육도 서로 자주 다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만나면 민족의 절반이 만나는 것으로 됩니다. 여성들이 만나면 서로의 리해를 도모하기 마련이며 통일을 위할 길에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행동의 일치를 보게되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3차례에 걸치는 이 토론회의 과정과 결과가 그것을 실증해 준다고 봅니다. 북과 남의 여성들이 이렇게 마주 앉기 전에는 오해도 많고 불신도 없지 않았으나 여러차례 만나는 과정에 많은 오해들이 풀렸고 마음도 뜻도 하나로 합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성들이 마음에서부터 오해와 불신이 가셔지게 되면 인구의 절반이 오해와 불신을 가지고 단합하는 것으로 되며 점차 온 겨레의 마음 속에서도 장벽이 허물어지고 민족의 대단결이 이룩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립장에서 우리는 북과 남의 여성들이 민족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개별적으로도 만나고 집체적으로도 만나며 토론회 형식으로도 만나고 공식회담의 형식으로도 자주 만날 것을 주장합니다.

넷째로 현시기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북과 남, 해외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들을 망라하는 공동의 여성조직을 내오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통일의 길에서 사상과 리념을 초월하여 단합하자면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민족대단결에 대해서 말만하고 호소나 해서는 실지로 대단결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모두가 조국해방 50돐이 되는 1995년을 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확약한 이상 이제는 민족대단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행해 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의 견지에서 보아도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여성단체들을 망라하는 통일적인 조직을 내오는 것은 이미 성숙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토론회를 세번에 걸쳐 진행하고 여기에서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에 대해 흥금을 터놓고 의견을 나누었을 뿐 아니라 많은 문제들에서 견해의 일치를 본만큼 발전적 견지에서 보아도 이제는 통일을 원하고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북과 남, 해외의 여성단체들을 망라하는 통일적인 조직을 내오는 것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나는 북측여성대표단의 이름으로 이번 토론회에 북과 남, 해외 여성대표들이 광범히 참가한 이 기회에 나라의 통일과 민족대단결을 위한 북과 남, 해외 여성단체들의 협의기구로서 가칭 「민족통일여성단체협의회」와 같은 공동의 조직을 내올 것을 정중히 제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은 결코 민족수난의 단순한 목격자, 무책임한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듯이 우리 민족의 존망과 관련되는 통일위업의 실현도 우리민족 특히는 우리여성들의 투쟁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니고 있는 중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같이 자각하고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민족단합을 도모하고 나라의 통일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한 애국애족적 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기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제(정신대대책협의회 공동대표)

북측에서 대표단이 오셨을 때 뭔가 그저 남북간의 장벽을 간단히 넘고 여성들이 남쪽에 오셨다는 사실로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저희들이 흡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평양에 와서 대회에 오신 우리동포 여러분과 함께 이 대회에 참석하니까 이제는 정말 오고 갈 수 있는 때가 됐구나 하는 데서 마음이 참 흐뭇하고 기쁩니다.

그러면 제가 부족하지만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측에서는 민간여성단체로서 남북간의 민간 교류를 뺀 문구를 처음으로 뺀 입장이 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의 발언도 민간여성으로서의 발언이 되겠고 이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꼭 일치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간측에서 비교적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방금 강춘금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외세에 의한 민족지배로 인해 식민지 지배 당시 엄청난 고난을 겪었고, 해방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외세에 의해 분단되는 쓰라림을 겪었습니다. 이제 이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민족대단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역사를 통해 삼국시대를 제외하고는 한 민족으로 한 나라를 이루면서 이 땅을 지키고 가꾸며 살아왔습니다. 남북의 분단 47년은 우리 민족이 함께 살아온 그 오랜 기간에 기간에 비한다면 지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적 동질성은 우리를 이념과 체제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따라서 저는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하고 작년 12월 13일에 발표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역시 확인된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이야 말로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한 기본명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주로 외세를 향한 민족대단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민족대단결을 통해 외세에서 자주화를 이룩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남북합의서」 1장의 내용을 잘 실천한다면 남과 북의 민족대단결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1조),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하며(2조),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으며, 6조에서 합의했듯이 국제무대에서도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남과 북의 민족대단결을 위한 바탕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족대단결’에 관한 관심이 북측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북측의 발표를 경청하고 앞으로 우리의 통일운동에 있어 민족대단결의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고자 합니다. 대신에 저는 현재 남한의 통일운동에서 ‘민족대단결’에 대해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2가지 정도로 소개하려 합니다.

첫째, 민족대단결은 다양한 갈등의 해소를 통해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민족대단결에서 간과된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계급, 계층, 성으로 분열된 ‘민족내부의 단결’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권력과 물질과 물질의 편재에서 나타난 계급, 계층간의 갈등이 어떻게 하나의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단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국가의 위기 앞에서 계급/계층/성을 초월하여 단결해야 하지만, 그 단결이 이루어지기 위한 토대, 즉 ‘소유와 권력의 평등한 분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대가 한양에 쳐들어 왔을 때 돈있고 권세있는 양반은 피난가고 노비들은 일본군대를 막기 보다는 노비문서가 보관되어 있던 관청에 불을 질렀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갈등과 모순이 편재한 현실 속에서 단순히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순을 해소시키는 것은 지배자의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건 그 공동체 구성원의 계급, 계층, 성, 인종 간의 갈등이 해소될 때 대단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권력의 행사 역시 민족구성원의 의사에 합당하게 집행되어야만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평한 분배와 민주화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중요한 까닭은 여성은 역사적으로 권력과 물질의 분배에서 가장 소외되어온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평등한 분배는 정치적 민주화와 지방자치제를 확대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화 역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남과 북에 각기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 조건이 마련된다면 통일을 위한 남북의 대단결도 더욱 잘 이루어 질 것이라고 봅니다.

민족구성원의 갈등을 해소하지 아니하고 민족대단결을 말하는 것은 갈라진 남과 북의 땅과 사람만을 기계적으로 합치는 것이 통일이라고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의 다양한 갈등과 모순이 해소되지 않은 채 통일 이후의 사회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측에서는 현재의 여러가지 모순이 통일 이후에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통일은 어떤 통일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면서 통일 이후의 사회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될 때 남북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당연히 현재의 계급, 계층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종속성이 극복된 상태의 통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민족 내부의 민주주의가 신장되고 대외적인 자주성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통일은 지배자와 권력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통일이 아닙니다. 민중의 권리가 대변되고 그 삶의 질이 향상되는 통일입니다.

둘째, 민족대단결은 자주와 평화의 원칙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통일은 어떤 통일인가”라는 질문은 통일의 과정에서 민족대단결이 담보되어야 자주와 평화의 원칙이 실현된다는 주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주와 평화의 원칙은 통일의 방법론 뿐만 아니라 통일의 과정에서 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즉 통일을 통해 자주하며 평화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민족대단결입니다.

신라는 당나라의 도움을 얻어 한반도의 주인이 될수 있었지만 그 댓가로 만주까지 이어진 옛고구려의 영토를 상실함은 물론 당나라에게 예속됨으로써 자주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 통일함으로써 외세를 추방할 수 있었지만 국민들 사이의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향유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국토의 통일을 무력에 의해 이루었으나 그 이상의 것, 즉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권리를 신장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신라의 백성들과 베트남 민중들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주권, 즉 자주권이 회복되고, 국민의 권리도 향상되는, 즉 민중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통일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원칙’ 역시 통일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통일하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하고, 그 결과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서독의 경우 일찌기 기본조약을 통해 상대를 서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정치적 대화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또한 유엔에 함께 들어가 국제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동서가 화해하는 일에 동참하여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상대를 의심하거나 고립시키거나 아니면 불리한 정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에서 노력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들이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주와 평화는 통일을 위한 수단과 동시에 통일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려는 것은 민족이 외세의 지배로 인해서 분단된 것을 극복해서 하나되어 자주화하고 또 분단으로 인해서 겪은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를 수립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자주와 평화의 원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입니다. “사상과 제도,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의 궁극적 목표는 역시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상과 제도와 이념의 문제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서간의 냉전체제 하에서의 외세와 관련에

서 온 문제였습니다. 이들의 차이들로 인한 동서간의 갈등이 우리에게서 대리갈등과 대리전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족대단결의 문제가 민족의 자주화와 평화의 문제와 관련해서 고려됩니다. 자주화의 실패는 민족대단결을 깨뜨리고 이것은 곧 갈등과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민족의 자주화 없는 민족대단결은 불가능하고 민족대단결 없는 민족의 평화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7.4 공동선언」에 나타나 있는 3대 원칙들은 독자적으로는 성립될 수 없으며, 또 독자적으로 실천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여성의 평화지향성이 민족대단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성은 어머니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이 관계가 약자의 편에 서고 정의롭고 공평한 것을 지향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여성은 다양한 갈등과 분단을 화해시키는 조정자로 나설 수 있습니다. 또한 분단구조 속에서 가장 커다란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민족대단결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화해와 일치가 요구되는 이 시대에 여성들이 먼저 지금까지 서로 다른 상대방에 대해 가져왔던 적대감과 공격심을 없애고, 또한 자신과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며,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민족으로 탄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비록 그가 어디에 속해 있을지라도 지나온 삶의 경험을 나눔으로 서로 친근해 지기가 남성들에 비해 쉽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우리들이 가진 능력, 즉 상대방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능력을 개발하고 타인을 자기의 가족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마음과 개방성을 확대할 때 민족공동체의 화해와 단결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 보충토론 2 ■

시게또 미야꼬
(조선녀성과연대하는일본부인연락회 보좌원)

저는 일본대표 시게또 미야꼬라고 합니다. 저는 방금 강춘금 선생님의 기초보고와 이효재 선생님의 토론을 들으면서 일본인이 이 토론회에서 민족대단결에 대해서 발언한다는 역사의 참담함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민족의 대단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 하게 토론을 해야 한다는 이러한 상태 그리고 식민지 체제와 교육제도를 - 이하 녹음관계로 문장이 생략됨:편집자)

성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합의서로 본다면 북과 남의 교류가 기대하는 것만큼 잘 안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북남합의서가 성실히 이행되게 하기 위해서 남측 여성단체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이효재) : ‘남북합의서’가 채택되어 남쪽에서는 참 기뻐했습니다. 합의서의 부족한 것에 대해 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합의서가 제대로 얘기 된다면 통일을 향하는 조건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리라 봅니다. ‘남북합의서’의 내용 문제를 저희 민간 여성 입장에서 볼 때 남북 정부기관의 관계가 아직 서로 이행이 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듯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과 북 우리 여성들이 정부간의 관계가 빨리 실행되고 진정이 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게끔 촉구하고 바라는 입장에서 그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돌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남북간에 서로 불신하고 비방하는 입장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고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여성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선 우리가정에서 부터 교육을 통해서 노력해야 겠습니다. 결국 자식들이 과거의 우리 사회의 자식들입니다만 가정이나 학교교육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민족 대단결이나 화해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즉 민족의 단결이나 평화 그리고 남북의 화해를 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녀에게 교육시키면서 이웃과 더불어 여러가지 노력을 하게되어 사회기층에서 부터 우리 생활의 장 속에서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서로 만나고 화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빨리 이 합의서가 이행될 수 있게끔 관계가 발전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3 : 통일 이후의 사회는 어떤 사회로 되는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북남 양측이 대답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된 이후의 사회는 다른 말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이 문제에 대해서 북과 남에서 각각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질문했습니다. 먼저 남측에서 답변 해 주십시오.

답변(이효재) : 이 질문은 저희들 남측에서도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저희들도 앞을 내다보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북측 자매들의 생각을 저희들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안이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분도 알다시피 북측에서는 ‘고려연방제’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남측에서도 ‘민족 공동체’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당면한 문제로 본다면 현실적으로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반세기 살아온 여러분들과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살아온 남쪽의 입장에서 각자 이념을 서로가 묵인하는 입장이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쪽의 이러한 제안은 크게 본다면 결국 평화공존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서로가 서로의 이념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대결하지 않고 어떻게 당분간 평화공존하느냐. 이러한 것이 모든 장벽을 평화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며 당분간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방향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방향의 새로운 사회를 제시하겠죠. 그것이 즉 인간적인 사회가 되겠죠. 결국은 강자와 약자의 차별이 없고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고 지방색의 차별이 없고 오로지 인간적으로, 더욱이 요즘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추세로 볼 때 자연과 더불어 환경 문제를 얘기하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이를 위해 우리 여성들이 앞으로 두고 두고 자주 만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고생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답변(강준금) :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1981년 고려 연방 공화국 창단에 대한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 두개의 정부를 둔 연방제의 통일방안인데 이것은 바로 국가 안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제도와 정부를 그대로 놓고 그 위에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세우는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방제가 실시되면 전국적으로 자유권이 확립되고 유구한 세월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위치를 논할 때는 중립국가로 이야기 될 것입니다.

질문 4 : 일본측에 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시게토 미야코 선생님, 지금 일본 민족이 걸으로는 통일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조선의 분열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민족 내부에 썩기를 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시게토 미야코) : 일본 정부는 조선의 남북도 분단시키고 그 분단을 자기의 이익으로서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만 현재 미소의 냉전구조가 파괴되고 아시아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현재 일본정부에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일본 여성들이 어느기간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여 활동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것이 드디어 현실성을 가진 과제로써 중국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과제로 발전 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표현이 조선과의 국교정상화가 시작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교정상화 움직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미묘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일본 정부에 대해 의심을 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의문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문제를 일본인 자신의 문제로써 일본의 정부도 그에 공헌하도록 요구를 강화한다면 일본 정부는 전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5 : 민족대단결과 민족동질성을 회복해야 하는 이 두가지 문제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강준금) : 민족대단결과 민족동질성, 이 두 주장이 동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상당히 큰 영향을 주리라 예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민족적 대단결이란 무엇인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민족적 대 단결이라는 것은 근반세기 동안 민족 분열 과정에서 생긴 오해와 불신을 풀고 한 겨레로써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화해와 단합으로 단일 민족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측에서 주장하는 민족동질성 회복이라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달라진 북과 남의 민족성을 본래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과정의 단교성에서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민족 대 단결과 이 동질성 회복의 견해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 개념이 기초하고 있는 기본 전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측에서 주장하는 민족대단결이라는 것은 북과 남이 서로 떨어져 살아 오지만 단일민족성 속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측에서 주장하는 민족 동질성이라는 것은 국가라는 민족 속에서 서로 다른 민족으로 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민족이 실질적으로 민족성에 있어서 질적 차이가 생겼는가 말을 할 때 우리는 질적 차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확실하게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질문 6 : 현실에서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해서 해결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답변(강준금) : 현실이 민족 대단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한 기초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족대단결은 하나의 조국 통일의 전제이고 또 민족 대단결은 실현가능한 그것이 곧 우리가 바라는 조국 통일의 길입니다. 따라서 때문에 민족대단결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럼,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과 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여깁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정치는 저희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를 규제하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방향에 따라 사회의 갈 방향이 좌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인간관계에서도 첨예하게 작용합니다. 실제적으로 북남 사이에 정치적 대립이라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대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가 제일 예민합니다. 때문에 우선 우리나라에서 정치 군사대결 상태가 속히 해소되어야 합니다.

토론회 II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책임

■ 기초보고 ■

시미즈 스미코(일본 참의원 의원)

작년에 모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한국, 조선국이 함께 만나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를 도쿄와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훌륭하게 결실을 맺게 되어 긴장 속에서도 서로 완만히 절친하게 되어 인간으로써, 여성으로써, 민족으로써 서로의 이해를 깊이하고 마음의 분단에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분단을 봉괴한 것입니다. 평화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동안 여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역사의 문을 열게된 기쁨과 감동은 지금도 저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여성들은 지난해에 서울에서 열매를 맺었으며 4천만 국민들이 북한 동포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평양에서 남북여성들이 이처럼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가 도쿄, 서울, 평양에서 이렇게 빨리 실현되리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남북여성들은 1년이라는 짧은 사이에 민족의 비극으로 생긴 군사분계선을 서로 왕래하였습니다. 이 왕래를 더욱 발전시켜 군사분계선을 빨리 없애기 위해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 간에 대화가 없으면 차별과 편견이 생겨나며 서로의 불신이 증가되고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의 이 시작됩니다. 역사를 창조하는 것은 민족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정치는 인민이 하여왔습니다. 우리여성들은 그러한 민중의 새로운 힘으로써 연대성을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커다란 전환의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그것은 소련 그리고 동구사회주의의 붕괴, 제2차 세계대전 후 오랫동안 국제관계를 유지해온 미소냉전주의의 종말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냉전의 종말이 아니라 20세기의 역사를 결정해온 힘의 이론과 대결의 원리 세계대국 전쟁시대의 종말입니다. 그것을 아세아에서 가장 깊이 냉전 체제 속에서 있으며 분단대립을 반세기에 걸쳐 강요당해온 남북조선의 통일은 지금 아세아에 속한 우리들에게 조선, 한국, 일본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한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일본인들은 남북분단의 직접적 원인이 일본측의 식민지 지배에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반도에서도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어 유엔 동시가입, 그리고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종전의 냉전행태로부터 화해로의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유혹을 제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내다보는 전망을 연결하는 그러한 형태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분수령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진행되는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민족운동에 그 수료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하는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침략전쟁에서 패한 후 47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경제대국으로 되었으며 전쟁의 반성 속에서 군대를 파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강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움직임을 보고 지금 일본은 한국, 조선을 비롯해서 아세아의 여러나라 사람들로 부터 (접근령 문제)와 범죄강행 등 일본제국주의의 국가적 범죄를 고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취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12월에는 특별경관이 일본에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적인 부정은 지금 국제적인 관심과 문제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일본은 같은 제2차 세계대전의 동맹국이었던 독일처럼 전후보상을 이행하지 않고 47년을 그대로 경과했겠습니까? 일본도 미소의 냉전정책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미소냉전에 끌어 들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과거 범죄를 고치는 것보다도 아세아의 안보 방파제로써의 일본을 전략적인 위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목표를 가르쳤습니다.

(독도) 군사 파시즘은 평화에 대한 죄에 전쟁의 문제로 일부의 전쟁지도자들과 마땅히 원인분석을 재판했는데 알타선언에서 조선인민이 노예상태를 유의하고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 조선을 독립시키기로 합의한 사항 중에서 조선인민에 대한 박해와 비인도적 죄에 대해서 정면에서 취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도 추방되지 않았고 지배층 관리도 지금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책임을 피하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지 않고 일본의 지배층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패전'이라 하지 않고 '종전'이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침략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 또한 전쟁이 미국의 원자폭탄으로 일본이 패했다는 그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선 식민지 지배와 종립국가들을 비롯한 아세아 각처에서 진행한 그러한 허

풍에 대한 책임, 그리고 아세아의 민중의 정의에 의해서 제국주의가 패망했다는 그러한 인식은 아주 희박합니다. 또한 당시 일본에 대한 주변나라들은 전후처리에 대한 엄격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미국, 중국, 소련 등 전쟁국들은 전쟁배상을 거의 결렬했습니다. 일본이 배상 또는 청구권 처리 등의 명목으로 지불한 것은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월남, 싱가포르 등에서 합계 약 15억 달러, 일본엔으로 (5,405백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합국가의 패전처리 회의 샌프란시스코 당사국의 보고에서는 가장 피해를 받은 조선과 新중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층은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며 국민 대중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이 과거의 부정을 고치고 일본체제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한 민주주의적인 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유일한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당시의 일본 지식인 그리고 정치가 대중운동에 있어서도 미소냉전에 말려들어간 함정에 불과했습니다. 독일과 같이 학생, 학자, 정치가들이 사회 내부에서 과거의 극복투쟁에 달라 붙은 것과 같은 그러한 관점과 운동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책임과 보상에 관한 진지한 여론조성과 운동이 매우 뒤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소냉전구조가 없어지고 아세아 지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가 진척되고 있으며 일조정상화 교섭이 시작된 것과 같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해서 일본의 경제성장과 그 진출이 아주 획기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일본 국내에서의 외국인 인권도 아주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진출면에 있어서는 현재 주민의 빈곤화와 인권 침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 나는 우리 일본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없이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진행하고 있어 그것에 관한 경계와 항의 등 여러가지 요인이 거둬져 지금 거론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정면으로 내세우는 그러한 비판까지 불충분하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식민지였던 조선 사람에 대한 피해가 많고 1965년 체결된 일한조약에서도 식민지 지배의 청산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보상이 방치되고) 피해자, BC전범, 조선인문제 피폭자, 강제연행, 군인, 군속, 위안부, 재일조선 한국인의 인권보장 등 부당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의 재판투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피해자들의 고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각자의 반성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여론과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종군위안부 문제는 여성단체와 조직, 그리고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해결을 다했다는 일본정부를 뒤 흔들면서 그 대응을 요구하는 정치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여성운동이 자기의 문제의식으로 일어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선과 한국의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에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일조정상화 교섭에 대한 일본정부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분노 그리고 역사의 사실 자체도 부정하려는 일본의 부정
한 태도를 고발하기 위해서 민족의 존엄을 걸고 제가 증인이라고 나선 김학순씨
를 비롯해서 종군위안부를 강요당한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고 여
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종군위안부 문제입니다.

일본의 천황 파시즘 하에서 진행된 조선의 식민지 지배, 그리고 침략전쟁이
어느정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그러한 잔학한 행위였는가, 그
본질을 고발하는 것이 종군위안부 문제였습니다. 저는 종군위안부 문제의 기본
인식을 첫째로 조선인의 性과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그러한 여성들의 생명과
인생을 전생애에 걸쳐 파괴하고 그것을 빼앗을 범죄라는 것. 둘째로는 종군위안
부의 80% 이상이 당시 조선반도에서 연행된 당시 식민지 하에 있었던 조선인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민족을 말살시키기로 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조선민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일본군국주의와 천황의 군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폭력적으로 범행
된 국제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당시 이것을 역사의 사실로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 6월, 사회당 국회의원이 예산위원회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을 규탄했을
때 정부는 아무 꺼리낌도 없이 이것을 민간업자가 한 것이고, 따라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군대와 나라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파렴치한
태도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결성되었으며 그러한 운동
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윤정옥 선생님이 이제부터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국회로
부터 정부에 사실의 인정을 요구하며 조사를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운동을 조
선인 강제연행에 대한 진상조사단이란 이러한 조직이 일본에 있는데 이러한 민
간단체와 한국의 「정신대대책협의회」 연대성을 가지고 계속 추구를 나가며 진행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한조약에서 모두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작년 8월에
는 드디어 해결을 끝냈다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이지 개인의 피해보상
을 요구하는 권리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6
일 「한국태평양전쟁 희생자유가족회」는 종군위안부였던 김학순씨를 비롯해서 9
명이 강제연행된 희생자들이 도쿄에 와서 일본정부의 범죄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가 드디어 정부의 견해를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1992년 1월
26일부터 미야자와 수상이 정부의 앞에 있는 방위청에서 그러한 자료가 구육군
자료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군의 관여는 부정할 수 없었
다’라고 발언하였는데 공식적으로 군대와 정부의 관여를 인정한 것은 6개월 후
인 92년 7월 6일이었습니다. 일본정부가 자기가 범한 그러한 역사의 사실을 인

정하는 데 패전 후 47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고에서
위안부의 강제징용 자료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작된 국회에서는 사회당 위원을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를 비롯
해서 (전업 화상 문제)의 추구와 그 실행을 촉구하는 그러한 논쟁이 진행되었습
니다. 방위청에서 발견된 자료에는 ‘무엇을 위해서 이 위안부를 모집하였는가’,
‘이것을 누가 모집하였는가’, 이것이 군에 의해서 관리도 모두 군대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변명은 아주 애매한 것이었
습니다. 그 자료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었는가’하고 물었더니 그것은 ‘병사의
건강’때문이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지역에 그것이 널려져 있었
는가’, ‘왜 조선여성들이 많이 위안소에 배치되었는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물
어 봤는데 와다나베 위무부에서는 일본여성이 오히려 더 많았다고 변명을 하였
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료에 의하면 최고 지휘자는 도오조 히데키, 으메시
요시지로 등의 이름이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지휘자에 대해
서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물
어보면 그들은 이것은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육사
인 숫자이기도 한 겁니다.) 거기에는 여성차별과 조선인 차별, 그리고 조선인
멸시 사상이 짙게 존재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한조약에서 해결되었다는 말의 모순은 여러 곳에서 판명되었습니
다. 우선 일한조약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문제,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
디에도 올라 있지 않았습니다. 일한조약은 분명 경제협력이었습니다. 그것은 개
인보상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과 정부 당국자들은 마치 보상
이 다 끝난 것처럼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이 미해결건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국회에서 규명을 계속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조약에서 3억 달
러의 무상보상(차관)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한국의 사망피해자들에 대한 금액은
58억으로써 처음의 5.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사우편요금, 월수(월급)
와 강제연행노동자들의 미지불금, 그리고 청탁금도 지방 본무관에 보관된 채로
10년 체 시효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부당한 행위인 것입니다. 오전에 일본대
표인 시게토 미야코씨로부터 일한조약에서 일본이 조선전쟁에서 삭제했다고 말
했는데 이것은 강제연행된 백만이라는 사람들의 보상을 하지 않은채, 그 돈이
일본의 경제성장의 기초에 쓰여졌다는 것은 저는 이에 대해서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당시 한국이 청구권 요구를 피하고 경제협력 방
식으로 진행시켰겠습니까. 대일 청구권 8항 속에서는 피징역 한국인의 미불금과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강제연행된 한국과 조선의 인민들에게 조금 보상금을 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청구권 방식을 경제협
력 방식으로 전환시켰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오히라 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겠다. 하나의 죄로써 버리겠다. 그리고 장래의 전망에 의해 보는 것이 대일청구권의 처리방식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장래의 전망을 바라본다는 미명 아래서 침략책임과 식민지 지배책임을 물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일본정부측의 상투적 수법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조약의 문제점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한국측 정부와 일본측 정부의 인식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간이 없고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 생각하기에 피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을사조약 그리고 일한합방조약은 모두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무효를 인정하는 것이 과거의 식민지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주장하고 일본측은 그 조약은 지난 날에는 효력을 발생하였지만 현재는 그 효력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였습니다. 일한조약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의 그러한 말이 없었습니다. 전후보상문제는 우리들 일본인들에게 새롭게 일한조약에 숨겨져 있는 일본측의 이러한 의도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일조교섭에서 일한조약의 적합성의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회담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일조정상화교섭의 중심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하는 기본인식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일본이 일러전쟁을 비롯해서 대륙침략의 발단으로써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하였다는 것, 그리고 1910년에 일한 병합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것은 위협에 의해서 실현된 것이며 그리고 병합조약에 의해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 경찰권, 재산권을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군대도 해산되었습니다. 그대신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식민지 지배는 명백히 조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강요된 것입니다. 그 사실 속에서 조선민족이 받은 수난의 그 모든 것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것을 일본정부가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조교섭을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일본의 제3의 죄를 거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관계 뿐만이 아니라 아세아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커다란 결함으로 되는 것이라고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떠한 운동을 진행하겠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일본자신에 대한 문제가 아주 크기 때문에 제안을 하기 힘듭니다. 일본이 감행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청산하지 않고서는 남북의 여러분들 그리고 아세아의 여러분들의 신뢰를 구축할 수 없다는 인식을 일본 국내에 파급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말로 과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일본과 조선의 연대성 운동을 계속 진행시킴으로써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등 일본 정부에 진상규명과 그것에 기초한 사실을 가지고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다음 세대에 대한 교양을 철저히

진행시키는 운동을 앞으로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여성들의 성에 대한 착취와 노예화이며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유린당한 굴욕과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해결하는 것은 역시 조선여성의 결심에 의해서 실천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안부문제는 오늘의 일본의 경제지배, 그리고 아세아 여러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매춘, 나아가서는 전쟁과 기지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성에 대한 여러가지 인권유린적인 행위들이 일본의 지배 속에서 진행된 그러한 의식과 구상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조선여성들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의의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식민지 지배의 억압과 정책의 범죄를 고쳐나가는 그러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운동은 인간의 존엄과 조선민족의 존엄, 여성들의 존엄을 해결하는 세계적인 인권운동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려고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조선, 한국, 일본, 여기에서 우리는 가해자가 되는데 우리들은 서로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운동을 연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은 반드시 이 3자의 연대성 운동을, 말하자면 공동운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시켜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 일본에서 PKO라는 자위대 해위파병이 현실적인 것으로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여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세아 사람들에게 결코 일본이 다시 그러한 침략이 진행되지 않도록 여성들이 힘차게 싸워나가리라는 것을 표명하면서 저의 보고를 끝내려고 합니다.



■ 보충토론 1 ■

최훈춘(김일성대학 교수)

토론을 하기에 앞서 이제 방금 시미즈 스미꼬 선생님이 기조보고에서 매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일본이 조선에 대한 사죄와 피해보상 문제는 조선 민족의 감정으로 보나 역사적 사실로 보나 매우 온당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데 대해 강조하시면서 우리와 견해를 같이 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사의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준비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남남간이라 하더라도 함께 살다 보면 혈육처럼 정을 나누면서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 사람들의 인간생활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 간에도 적용되는 그러한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얼굴을 나란히 마주하고 떨어져 있는 이웃입니다. 강산이 수려하고 인심마저 아름다운 우리나라 인민들은 예로부터 일본과 화목한 이웃으로 살기를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를 돌이켜 보노라면 친숙하게 지낸 것보다는 일본의 지배와 식민지 통치로 해서 수난당하던 그러한 뼈아픈 사실들만이 머리에 떠오르곤 합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 가슴 속의 상처도 아물기 마련이지만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는 너무도 우리 인민 가슴에 피맺힌 원한을 남겨서인지 오늘도 그 상처는 아물지 못하고 거기서 진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과거를 청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려 하고 있고 또 우리민족에게 끼친 해아릴 수 없는 죄악에 대해 합리화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 저는 피해국인 우리 여성 대표들과 가해국인 일본의 여성대표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일제의 조선 침략과 지배, 전후 보상문제를 토의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입장을 토론했고자 합니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은 지금으로부터 300년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간관계상으로 다만 20세기 초의 舊일본제국이 조선에 간주하고 실시한 식민지 통치에 대해서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금세기 초에서 중반까지 감행한 조선에 대한 일제침략과 지배는 그 야수성과 포악성, 파렴치성에 있어 전대미물인 것입니다.

일본의 조선침략과 지배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완전히 비극적이고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것이었습니다.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는 목적 근거로 삼아온 을사조약만 해도 그것은 애당초 체결된 적도 없는 가짜 문서로서 일제의 강도적인 침략실상과 파렴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왜곡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을사조약의 그 허위성은 이번에 북남학자들에 의해서 새로 발굴된 규장각에 보관된 조약 원본과 그리고 이 을사조약의 비합법성을 밝히는 고종의 다섯개 항목의 성명문이 실린 영국의 런던의 「트리분지」와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1907년 7월 고종황제가 을사조약 체결을 거부하였다는 기사가 실린 1907년 7월 19일 「황성신문」의 기사들을 통해서 이미 논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일제는 고종황제의 옥사도 찍혀져 있지 않은 이 을사5조약을 체결된 것처럼 후에 발표해서 (미.조) 공동국가의 외교권을 강탈했고 내정을 털어두기 위한 통감정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조선의 독립이 사실상 3년간의 조선 전쟁 이후에도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실시하고 조선 인민에게 정치,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일본이 일본국민들의 여권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여행금지 사항을 기록한 유일한 나라였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일본이 대조선정책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모든 역사적 사실들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일본은 가까운 이웃사촌이 아니라 가슴속에 피멍을 지게하는 한맺힌 이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일본은 우리 인민에게 해아릴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강요한 흉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여러분, 범죄에는 반드시 사죄와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인간사회의 초보적인 도덕이고 인류역사의 필수적인 요구입니다. 일본은 피해받은 우리 민족의 정당한 역사적 요구 앞에서 마따히 과거의 죄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화해의 이유에서 과거를 청산하고 평화로운 이웃으로 살려는 두 나라 인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것이며 국제무대에서 경제대국에 상응한 중요한 역할을 하려는 일본 자신을 위해서도 인간의 존엄과 양심, 도의를 귀중히 여기는 자질과 품격을 갖추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보상을 한다해도 과거 조선 인민들이 입은 그 방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원상 그대로 회복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17살 내 청춘을 돌려달라'고 절규하는 그 중군위안부들의 하염없는 흘러내리는 그 뜨거운 눈물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습니까? 또한 '조선독립만세'를 외친 죄로 작두에 목이 잘리운 수많은 우리의 애국자들을 이제 어떻게 다시 되살아 오게 하겠습니까? 다만 이것은 가해자가 성의를 다해서 어느 정도라도 보상함으로써 피해자가 납득을 하여 원한을 풀고 화친의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범죄자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고 사죄와 충분한 보상의 태도를 보이는 대신에 저희가 역사적 죄악에 대해 합리화하려고 하면서 '사죄는 하되, 보상은 못하겠다'는 온당치 못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 죄상을 똑바로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통한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그대로 응어리져 남아있는 것이고 또 일제의 그러한 범죄의 뿌리가 아직 다 뽑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선 인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본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응당한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 투쟁의 서열에서 우리 여성들의 위치는 선두이고 그 역할은 자못 중요합니다. '행복할 때는 행복의 꽃이요, 불행할 때는 불행의 희생물이 여성'이라고 하면 일제가 이땅에서 자행한 극악무도한 범죄의 최악의 행위에 최대의 희생자는 우리 북과 남의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압제 밑에서 가장 처절한 희생을 강요당한 우리 여성들이 41년이라는 장장한 세월동안 흘린 그 피의 눈물의 무게를 어찌 일본이 부산항을 거쳐서 약탈해간 금은 보화 그 무게에 비기겠습니까? 똑같은 가해자로부터 똑같은 피해를 받은 우리 북남여성들은 일제로부터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는 데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본당국자들은 한일조약을 방패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종군위안부 문제와 보상문제에 대해서 식민지 통치는 합법적이었으며 과거는 이미 청산되었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고 이에 대해 남측의 일부사람들은 한일조약에 발이 묶여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일조약이 비극적이고 불법적이고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 북남여성들은 거기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로부터 보상을 받아내는 일은 북남여성들의 문제일뿐 아니라 나가서 일본여성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본여성들은 정신대를 고안했던 일본 당국자들의 폭력적인 여성관에 직접적인 피해자인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일본의 엄청난 범죄적 사실이 만 천하에 드러나고 조선 반도에서 민족적 분노와 반일감정의 기운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국인 일본 여성들의 죄의식과 도덕적 가책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나라에 가혹한 재난을 뒤집어 씌운 죄스러운 나라의 여성임을 자각할 때 같은 여성으로써 수치감과 응색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시대적 요청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조선왕족을 멸족시킬 계략의 희생물이 되어 순종과 결혼을 강요당했던 일본여성 리방자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야만적 범죄행위를 말한 것처럼 지금 일본 사람들 속에서 일본의 부끄러운 과거를 대담하게 파헤치고 일본인으로써 수치를 표명하여 그러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않게 하기 위하여 정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여성들은 과거의 범죄를 역사의 무덤 속에 묻어두고 오늘은 보다 더 큰 범죄를 획책하고 있는 사무라이들의 아내, 누나, 어머니로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당당한 삶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이 자기의 범죄적 과거를 철저히 사죄하고 응분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한가지 문제를 제의하려고 합니다. 현실의 일본당국이 취하고 있는 태도를 볼 때 일본 정부로부터의 조선침략과 지배에 대한 명백한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에서 결코 주저앉을 수 없고 또 결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로부터 온당한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는 일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과거 일본군 병사들에게 여성으로써는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치욕과 피해를 당하고 순간도 울분을 잠재우지 못하고 살아온 전 종군위안부들이 살아 있을 때 일본정부로부터 납득할만한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우리 여성들이 이러한 투쟁에서 행동의 일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으로부터 조선에서 저지른 과거의 재앙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는 일이 북과 남, 일본여성의 공동의 것이라 할 때 이것은 더욱 더 절박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북과 남, 일본의 여성단체 지도자들이 함께 모인 이 기회에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과 지배, 특히 종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명백한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일본의 조선침략과 지배, 전후의 보상을 위한 북과 남, 일본여성들의 대책위원회와 같은 공동투쟁조직을 낼 것을 제의합니다.

북과 남, 일본의 여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어머니의 힘으로 굳게 단합하여 투쟁할 때 조선인민은 일본당국으로부터 진심으로 사죄와 응분의 보상을 받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역사에서 침략과 전쟁, 인간의 불행과 여성들의 고통을 증식시키려는 세계여성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에 부합하는 일이고 또 아세아의 평화를 지켜야 하는 북과 남, 일본여성들의 사명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3차 평양토론회를 계기로 일본의 조선침략과 지배, 전후보상을 위한 북과 남, 일본여성들의 「대책위원회」와 같은 공동투쟁 조직을 세울 것을 다시한번 열렬히 호소하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 보충토론 2 ■

윤정옥(정대협 공동대표)

지금 소개받은 윤정옥입니다. 이와같은 역사적 의의를 가진 회를 주최하신 북측 여러분과 이 회의가 성사되도록 협력하신 일본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먼 해외에서 참석하러 오신 우리 동포자매에게도 다시한번 이 기회에 만나뵙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소개해주신 대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어떠한 배경에서 조직이 되고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때에 한국 안에서는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 여성들이 '이 기회에 우리의 요구를 노태우 대통령에게 건의해보자, 그대로 일본에 가서는 안된다, 우리의 요구를 주장하자'고 해서 이때에 이 젊은이들이 나이먹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와서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요구한 것은 정신대 문제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신대 문제가 중요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끌려간 징용 남성들과 피폭자, 그리고 그외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희생되었던 모든 피해사건들과 아울러 정신대 문제도 당당히 밝힐 것은 밝히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 달라는 것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서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1990년 5월이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가서 명단을 전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일본수상은 가이후였는데, 가이후 수상이 강제연행된

사람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 명단을 우리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후 같은 해 6월 6일이라고 기억합니다. 이때에 국회에서 사회당의 한 국회의원이 강제연행된 사람의 명단을 조사할 때에 ‘중군위안부의 문제도 조사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때 정부측의 답변이 ‘그때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하겠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군대는 관계는 없고 민간업자들이 여성들을 데리고 군대들을 따라가는 모양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일본여러분들을 통해 국회의사록을 입수하여 한 국여성들이 이 사실을 전해들고 매우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거듭하여 우리가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에 공개서한을 냈습니다. 그대 우리가 요구한 점은 6개 항목이었는데 그 6개 항목을 아직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신대 사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 둘째, 진상을 공개하라. 셋째, 사죄하라. 넷째,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측면, 즉 전쟁기념관이나 자료센터라든지 우리가 고쳐나가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 공개서한을 작성할 때는 참회비를 건립하라. 다섯째, 보상, 배상하라. 여섯째, 역사교과서를 정정해서 젊은 세대에게 제대로 역사를 가르쳐라.

이 여섯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개서한을 냈습니다만 일본측에서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촉장을 냈습니다. 그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의를 많이 했는데 일본을 상대로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새삼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장기전(長期戰)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1990년 11월 17일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정식으로 조직, 발족했습니다. 그후 일본의 태도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가까운 예가 PKO 법안이 통과 되었지요. 금년에 들어가서는 유난히도 일본 내 우익지식인들이 여러가지 보도를 하면서 발표하기 시작을 했는데 많은 일본사람들의 호응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발언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조선 사람들은 어디 있었느냐”, “사죄를 했는데 사죄를 하면 할수록 조선, 한국사람들이 더 사죄를 하라고 한다. 일본 정부들은 좀 위신을 지켜라”, “1965년에 다 청산이 되었는데 이제와서 또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등, 이런 식의 많은 이야기가 발표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지금 대구에 계시고 전에 미얀마의 위안부로 끌려가서 나중에 베트남에서 해방을 맞아 돌아오신 분인데 이 사람이 상당한 액수의 저금을 야전 우체국을 통해 하고 있었던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시모노세키 히로시마 우체국에 가서 알아보니 그 이름, 그 액수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965년에 다 해결되었다고 해서 전혀 돌려줄 가망이 없음을 정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1991년 1월에 미야자와 수상이 한국에 올 직전에 방위청 도서관에서 자료가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일본의 도요조 히데키와 같은 최고급 지위의 사람과 주고 받은 통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처음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이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이릅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 문제는 일본 정부, 군대의 관여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1931년 만주사변, 그 다음해인 1932년 상해사변이 일어날 당시 군대가 조직적으로 간섭했던 것을 알 수 있고 후에 1937년, 1938년, 1943년 경에 들어가면 일본이 주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모집, 경영하고 관리했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 내용으로 본다면 독일사람들이 유대인을 학살한 것보다 그 질에 있어서는 더 비인도적입니다. 이것이 발표되었을 때 일본정부는 일본이 관여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사과의 정도가 어느정도냐, 보상의 액수가 어느정도냐의 문제만이 남아있다”고 말을 했고 미야자와 수상은 와서 6번의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과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죄라면 자기들이 무엇을 어떤 일을 어느정도 저질렀냐는 그 진상을 알고 사죄해야 하는 건데 자신들이 조사했다는 자료는 위에 앉아서 지시만 하여 그것을 모아 한국에 보내는 형식적이고 안일한, 상대방을 무시한 태도로 진상을 알지 못하는 사죄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협의회의 가입단체인 「교회여성연합회」에 “정신대신고전화”를 설치하였는데 처음에는 신고해주시는 분이 없다가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에 분개하여 신고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엔 미야자와 수상의 방한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분이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100여명이 넘습니다만 나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지금 파악할 수 있는 분이 대략 67명입니다. 금년 8월 10-11일에는 서울 수유리에서 ‘강제 중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를 제대로 발족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함께 조사하고 함께 일을 해나가자고 결의문에서 채택했습니다. 또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관심을 일게 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UN 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올해 8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UN 인권 소위원회에서 이 의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UN 인권 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다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이것으로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 보충발언 1 ■

김영애(재일민주여성동맹 후원자)

저는 오늘 이 본 발언을 하기 전에 한마디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이 ‘아세아

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3차 평양토론회에 참석하게 해주시고 아주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아주 기쁘게 생각하며 북과 남, 일본의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카 시미즈 스미코 선생님의 발언에서 일본 식민지 죄과에 대한 청산이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 누누히 언급했습니다만 그런 속에서 재일동포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해외 동포 여러분들과 일본여성들이 같이 힘을 모으기를 다짐하고자 합니다.

지금 일본에는 약 70여만의 재일조선인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에 거의 강제로 끌려왔거나 생활고에 시달려 일본에 건너온 사람들이며 그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어 47년이 지났으나 재일조선인 한국인들은 당당한 독립국가의 해외국민으로써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일본정부의 민족차별과 박해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실례를 하나 든다면 재일조선인 동포들을 규제 탄압하는 외국인 등록법이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등록증의 상시 휴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증은 마치 '개폐'와 같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법으로 처벌해왔습니다. 예를 하나들면 운전면허증에는 반드시 자신의 국적이나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만 보여서는 안됩니다. 등록법 휴대가 어떤가 하면 그때 만약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바로 그것은 죄가 되고 열 손가락으로 지문날인 당하는 엄한 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자녀들에게 민족의 얼을 심어주고 참다운 조선사람으로 교육, 교양해야 하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국 일본 각지의 153개의 유치원으로부터 대학까지 엄연한 교육체계를 꾸려놓고 초급으로부터 대학까지 자식에게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에 대해서 주권(?)보장은 고사하고 계속 탄압의 대상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조선학교가 일본의 일반교육체계에 따라 6334제, 다시말해서 초급이 육학년, 중학교 삼학년, 고등학교 삼학년, 대학교 사학년제를 실시하고 그 내용에 따르는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학교 인가를 주지않고 각종 학교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각종 학교라고 해서 상급학교로의 진학, 취직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육을 맡고 있는 초, 중, 고학생에 대한 통학, 가령 버스정규권의 할인률조차 일본학생들과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일련의 사회보장도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면서도 세금 납부 등 일방적인 의무만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이 이처럼 재일조선인의 공민권과 인권을 무시할 권한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조선민족에 대한 멸시와 천대, 그리고 동화정책에 있는 바 이것은 과거 일제식민지 조선에 강요한 민족말살정책과 근본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아는 바와 같이 극히 최근시기

까지만 해도 일본당국은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민간업자가 한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와 군 당국의 관여를 일체 부인해 왔었습니다.

또한 징병, 징용 등 강제연행에 대해서도 당국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그 사죄와 보상은 물론 조사사업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총망라되고 있는 「재일조선인 총연합회」에서는 1972년부터 강제연행조사단을 묶고 이 조사사업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많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8월18일에 UN 인권위원회에 가서 이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1972년부터 그 조사단을 묶고 최근에 그 조직이 20여개로 확대되어 전국적 범위에서 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2만 6천명의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그속에 147명의 위안부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전번 국회(?)에 가서 호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던 그 피의 흔적들을 땅굴 속에서 찾아낸다, 지하에서 찾아낸다 하면서 많은 동포 여러분들이 그 피의 흔적을 찾아내고 사회여론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조선침략의 부당성, 죄악에 대해서 일체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는 그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은 재일조선인의 인권, 공민권에 대한 침해, 탄압인 것입니다. 공화국 정부에 대한 적대시 정책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은 민족적 단결로 일본 정부에 대한 부당한 시책, 탄압에 대해 투쟁함으로써 많은 성과들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재산취득면에서 조선인들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오늘 재일조선인들은 일본 땅에서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에 의한 민족교육에 대한 보조, 등록증의 지문 날의 폐지 등 제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굳건히 지켜왔고 지금도 지키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일조선인,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참담하게 향유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정부가 과거처사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보상을 하여야 하며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조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정부간의 화담에서의 공화국의 입장과 자세에 대한 많은 (?)을 얻고 있고 반드시 그러한 방향에서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재일조선인, 한국인들은 모두 조선반도의 출신자들이며 그 후손들이라는 점에서 바라건대 통일된 조국만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통일된 조국만이 우리가 일본당국에 의해 차별당하고 있는 권리를 회복해 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본연은 재일 조선인, 한국인 동포들의 민족권리 향유에서 큰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화국 정부는 일관되게 저희들의 공민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를 옹호해 주시고 있으며 자그만한 침해에 대해서도 제때 정부성명, 외무부 성명을 발표해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적대시 정책,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있

는 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북과 남, 해외 동포 여러분, 특히 일본여성들과 연대성을 강화해서 하루 속히 조일국교정상화를 실현하고 일본정부로 하여금 전후보상을 철저히 해서 확고한 선린관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앞으로 해내외 동포들은 물론이거니와 북반부, 남반부 동포여성들이 저희들의 투쟁을 지지 성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충발언 2 ■

서정순(제일한국기독교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저는 일본에 살면서 제일동포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병원을 건축하려는 운동을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서 제일 고생하고 강제노역을 당하고 끌려간 1세들이 지금 다 죽으려고 하는데 죽기 전에도 계속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지만 1세들은 일본말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말만 쓰고 있는데 또 김치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세들은 일본 병원에 가도 김치 못먹고, 우리말로 어디가 아프다고 해도 간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여성들이 모여서 우리 1세들이 우리말로 간호원을 부를 수 있고, 간호를 받을 수 있으며, 김치를 먹을 수 있는 노인병원 건축하려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대문제와 똑같이 일본정부가 원래 1세들을 위하여 해야 되는 전후보상의 하나라도 생각이 됩니다만 일본 정부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여성의 힘으로써 스스로 그러한 1세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법을 만들려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여자기독교인들로서 해야 하는 운동이나 하면 시집을 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보살펴야 하는 것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1세들의 죽기 전의 아픔을 직접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자신들의 직접 경험에서 출발해서 그러한 1세들의 아픔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노인병원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또 해외동포들의 공통적인 과제로서 이민 사회에서 노인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외국에서 이민 1세들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돌아가신 우리 동포 1세들은 다 자기 말도 못하고, 자기 고향의 음식도 냄새도 못맡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후보상의, 전쟁책임의 하나로서, 또 여성의 눈으로서 보는 운동으로서 또 해외동포의 공통적인 과제로써 노인병원 건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임진왜란 400주년 기념”이라고 일본에서 여러가지 일

본 식민지 전쟁에 대해서 문제시하고 있고, 또 관동대지진이 일어난지 9월 1일로 69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날에 우리 동포들은 하루에 6000명 일본 민간 사람들에게 옥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여러가지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또 미국에서는 콜롬부스가 미국대륙을 발견한지 500주년이 되었다고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데 선주민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제일동포의 사정도 지배자의 눈으로 보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회에서 일본학교에 다니면서 일본사람들이 우리 제일동포에 대해서 지배자의 사상으로 우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3세, 4세들이 자기 이름도 못쓰고, 일본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 제일동포 자녀들에게 올바른 민족교육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사람도 평화스러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지배자의 역사가관이 아니라 피억압자의 역사가관을 배워서 그러한 의미에서 제일교포의 문제, 전쟁책임의 문제를 자기 역사교육의 교재로써, 또 일본사람도 평화스러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지배자의 역사가관이 아니라 피억압자의 역사가관을 배워서 그러한 의미에서 제일교포의 문제, 전쟁책임의 문제를 자기 역사교육의 교재로 해서 제일교포를 자기 역사교육의 선생님이로 모시고 역사교육을 새롭게 하면 일본사회가 더 평화스러운 새로운 사회가 될 줄 압니다. 그런 인식에서 우리 동포들은 우리 문제를 역사교육의 교재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서 우리는 정신대문제는 제일동포로서 생각할 때 나의 어머니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일본에서 정신대 가지 않고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까만 우리 어머니들 대신으로 정신대에 끌려간 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의미로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대의 실상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사진으로 가져다가 그림엽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여성단체 6개가 모여서 그림엽서를 만들고 그것을 일본사회에 보내서 새로운 역사교육의 교재가 되도록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돌아가면 그림엽서가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그림엽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본사회가 침략하지 않도록 하는 역사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하면서 또 제일동포로서 인사를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질의/응답 ■

질문 1 : 일본의 전후보상 제 처리가 늦어지는 원인으로서는 외적 요인을 주로

말씀하였는데, 일본 내의 요인 특히 일본 국민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시미즈 스미코) : 외적 요인에 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후보상이라는 것은 아카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대만과 여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침략 전쟁이고 일본군에 의한 여러가지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호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일본은 그 문제를 자신이 주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아카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이 패전 때부터 미국에 점령된 하나의 결과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의 정책서의 연합국과 패전국이 강화조약을 맺는 과정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의 문제가 거기에서 부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큰 피해자의 발언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역사적인 것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역시 경과로써 있었다고 해도 지금 일본은 주체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자기 의사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해야 하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일한조약에서 그것을 다 해결했다고 하는 것 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카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한조약은 미해결이 많다는 것,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맺어질 때도 당시 한국에 주재하고 있던 미국 대사가 오히려 한국을 덧붙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본과의 직접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중국과 여러 곳에 나가서 일본과의 항일투쟁으로써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연합국과 같은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남선 주재 미국 대사가 그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본의 요시다 총리에 의해서 배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번의 일조교섭에서 버마국(?)이 제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당시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에도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대한 조약을 체결할 때에도 한국 측은 과거의 일한조약은 무효라는 식민지 지배의 무효를 인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조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측이 조선에 대한 인식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싶지 않은, 그것은 조선에 대한 차별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연장으로서 생각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큰 열쇠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배층이 그랬다 할지라도 사회층이 전쟁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지금 피해를 받은 아시아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서 호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 반드시 실현시켜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지배층의 내적인 의식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2 : 일제의 조선 침략과 지배, 전후 보상을 받아내는 데서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본 정부는 한일 간의 문제는 한일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윤정옥) : 적어도 이것을 중군 위안부 문제와 결부시킨다면 해결이 되었다고만은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965년을 체결될 무렵에는 한국정부도 일본정부도 정신대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가네오라(?)라는 정부 일본군이 강요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 1992년 1월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어떻게 시인도 하지 않은 1965년에 중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해결이 되었다고 어느 모로 보든지 말할 수 없습니다.

질문 3 : 남조선에서는 일본으로부터 똑똑한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지 못한 채 일본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결산을 끝낸 것으로 되어 있는 조건에서 일본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는 데서 공화국이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공화국의 앞으로의 대비책은 무엇인지요? 그밖에도 북측 대표에게 지금 현재 보상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답변(최훈춘) : 100년 간의 조일관계를 짚어보면 침략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피어린 투쟁의 역사이고 또 학살과 약탈만을 강요하던 가해자와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당하던 피해자 사이의 관계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조일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선린우호 관계를 수립하려면, 일본이 구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에게 범한 죄행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조선인민에게 여한이 없도록 응분의 물적 인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에서도 우정과 친선이라고 하는 것은 신리와 신임에 기초합니다. 그러한 신리와 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솔직성과 진실성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나라와 민족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놓고 볼 때 우리 조선인민이 일본에 대해서 친선의 감정을 가지려면 일본은 조선인민에게 끼친 과거의 죄행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또 진심으로 사죄하고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웃으로서 그야말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조선이 1965년에 체결된 한일조약에 의해서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남측 윤정옥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산청구권 형식으로 해결했고 중군위안부 문제는 그때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을사 5조약의 위법성과 불법성에 대한 사죄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36년 간의 식민지 지배의 보상문제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36년 동안 구일본이 우리 조선인민에게 끼친 그 헤아릴 수 없는 재난과 피해에 대해서 돈을 몇 푼 받은 것으로, 그것도 보상이 아니라 청구권 지불을 받은 것으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해보상 문제가 똑똑하게 그리고 납득할만하게 충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

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이 제기되었다고 생각 하면서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간단히 이야기하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피해 사죄와 피해 보상 문제가 어떤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민족적 존엄의 견지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을사 5조약을 놓고 이야기할 때에도 을사 5조약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어떤 피해와 사죄와 피해보상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자주성이라는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문제이고, 민족의 존엄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중군위안부 문제를 놓고 볼 때도 그렇습니다. 물론 중군위안부 문제는 이것은 정말 조선여성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행위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조선여성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인권유린의 행위이고 또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 여성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족의 일부 본인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부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모독행위이고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가해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이 문제는 우리가 민족의 존엄을 되찾는 그런 문제로서 제기하고 또 그런 방향에서 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첫째 의견입니다.

두번째로는 이 문제가 빨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종식된 지도 이제는 근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는 더 지연시킬 수도 없고 더 끌 수도 없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제일조선인 대표가 나와서 토론한 바와 같이 일제시대에 살아온 1세대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일본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일제시기를 살아온 1세대들이 생존해 있을 때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결코 이 문제를 2세나 3세들에게 넘겨 줄 수 없습니다. 중군위안부를 비롯해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똑바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인간적 견지에서 놓고 볼 때에도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있을 때 피해보상을 받아서 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정부의 태도를 놓고 볼 때에는 이 사죄와 피해보상과 받아내는 문제가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제의 대조선정책에 추종하면서 조일관계의 정상화 문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자체도 이 문제를 기피하기 위해서 재산청구권이요, 뭐요 하면서 보상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일회담이 침체상태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조건 하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나아갈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선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가학성, 야만성, 횡포성, 파렴치성 이것을 더 파헤치기 위한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

게 해서 일본으로 하여금 자기 책임에서 회피하지 못하도록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입증하는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이 사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북남이 공동의 힘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이 문제는 어떤 우리 민족의 개별적 지역에 한한 문제이거나 또 어떤 우리 민족의 개별적 성원들에게 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민족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북남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와 사죄보상을 받아내는 문제에서 북남국민들이 단합된 힘으로 투쟁해 나갈 때 커다란 힘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일본의 진보적 인민들과도 단합과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 나아간다면 일본 정부도 사죄와 보상을 하지 않고는 더는 베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더욱 힘있게 싸워 나아갈 것입니다.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

■ 기초보고 ■

이우정(국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제목이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인데, 제가 이 평양에 들어오면서 평화창조에 대해서 정말 아주 실감한 인상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쪽에 있을 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나오는 어떤 자료에서 6·25전쟁 때 평양의 인구가 40만 명인데 미군이 떨어뜨린 폭탄이 42만 개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이야 무조건 부인 안하겠지요 어쨌든 굉장한 많은 폭탄이 이 평양에 떨어져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진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폐허 가운데서 이렇게 평양을 다시 아름답게 재건해 놓으신 이 민족의 저력이라고 할까요, 그 평화를 사랑하고 다시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시려고 하신 우리 북측의 동포 여러분에게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란 주제로 남과 북, 일본의 여성들이 모여 벌써 3년째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평양 모임을 준비하면서 여성들이 모여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과 동북아에 평화를 창조하는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우리의 실천과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하는 힘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살아왔고, 아직도 남과 북은 체제경쟁과 군사대결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남과 북은 일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한 지배 속에서 당한 억압과 고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현실만을 고집하고 그 배경에 안주한다면 우리 여성들이 모여서 평화에 대해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작년에 도쿄와 서울에서 만났고, 이번에는 평양에 모였습니다. 남측 방문단의 평양 방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이번 평양 토론회는 분단 47년 이후 아니 남측 민간진영 여성들의 최초의 북조선 방문이라는 점에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만남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남측여성들을 이곳으로 오게 한 동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우리 여성들이 평화를 향해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신념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창조하려는 여성들의 의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성들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며 키우는 어머니된 존재이므로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합니다. 또한 여성들

은 역사적 고난의 담지자로서 항상 억압당해 온 경험을 통해 평화로운 세계를 추구해왔습니다. 남한의 분단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가장 큰 희생자였습니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여성에 대한 성침탈, 전쟁과 이산가족의 슬픔, 남북의 군사대결과 사회의 군사화로 인한 경제적, 문화적 억압적 현실은 여성에게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은 언제나 통일과 평화를 염원했고, 그 염원이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만든 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미국을 약소국을 지배하는 제1세계 사람들이라고 믿지만 그러나 그런 제1세계 일본여성들까지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같은 여성으로서 남성 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힘의 논리가 통용되는 강자중심의 사회에서 일본여성도 같이 겪은 억압의 경험이 일본여성, 다시 말해서 제1세계 여성, 제3세계 여성을 가리지 않고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평화창조를 위한 의논을 하며 연대할 수 있도록 만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그런 의미에서 고통과 고난, 억압의 자리에 있는 약자의 편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남성들은 강자 중심의 힘의 논리에 따라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지만 생명에 대한 존중과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로 남성중심의 힘의 논리가 통용되는 사회구조를 비판하고 저항하며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성들입니다. 이것이 여성들의 힘이고, 또한 여성들만이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양 토론회의 소주제는 ‘민족대단결과 일본의 침략과 지배, 전후책임, 보상문제 그리고 평화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들을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아까 두 주제는 했으니까 특별히 평화창조를 여성의 관점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남쪽 사회의 현실과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발표하는 것은 결코 학술적인 논문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평화가 무엇이나 하는 이 평화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평화하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평화개념이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평화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평화개념은 서로 총을 맞대고 싸우다가 그 전쟁이 끝나는 상태, 이것을 제1차적이요 소극적인 평화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이렇게 되기까지 거기까지 물고가기 전의 여러가지 요인들, 여러가지 갈등들, 이것이 역시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할 적에 우리는 개인이나 혹은 공동체의 삶에서 온전하고 총체적인 이런 평화가 보장되지 못하는 것을 쫓을 때 이것을 평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60년대 이후의 평화연구에서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개념, 즉 잠재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이 극복되고 계급적/성적/인종적인 다양한 갈등이 해소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이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정의의 핵심으로 하는 사회평화 문제가 또한 첨가됩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평등하고 공평해 질 때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냉전이후의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것이 강대국의 이해에 기반한 경제논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이 아세아에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

나, 최근 일본에서 PKO 법안통과로 부각되고 있는 이 문제에서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 추세 역시 자국의 경제적 잇권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보호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서 가난한 사람들, 여성, 약소국에 대한 경제정의의 실현은 이제 평화창조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대국의 힘의 논리를 비판하는 남과 북, 일본여성들의 연대에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평화창조”는 생명을 사랑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주체는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성들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며, ‘살림’을 책임진 여성으로서, 또한 억압받는 여성들의 현실에서 우리는 강대국과 남성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 초래된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와 역사와 분단이 낳은 여러 모순들에 대해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감으로써 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창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테이프가 바뀌므로 말이 끊어짐)....그런 상태가 어떤 통합적인 힘에 의해서 유지될 때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주의적인 평화라고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항거하거나 비판하면 무조건 갖다가 죽이고, 무조건 처형해 버리는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비판의 기능을 잃고 비판할 용기가 없어져서 그냥 잠자코 순종하고 복종해 나갈 적에 거기에 갈등도 없고 전쟁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인간말살, 인간존엄이 말살된 그런 평화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평화로 착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 할 때 보호한다는 미명을 썼습니다. 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대동아가 함께 공영한다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미명을 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이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후에 우리가 당한 그 처참한 인간말살, 인간학대의 경험은 아까 우리 정신대 문제 여러가지 그 보고에서 들었습니다. 아까 최훈춘 선생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런 힘의 논리로 평화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허위적인가 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을 병합하는 과정에 1905년 을사조약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때 한국에 와있던 하야시 공사의 일기에, 또 일본 외교문서에, 또 규장각에서 나온 문서에 보면 그때 한국의 주권자인 고종황제는 끝까지 반대했는데 억압을 해가지고 강제로 대신으로 하여금 도장을 찍게 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문서 자체가 사기요, 불법이며, 또 주권자가 도장을 찍었다 해도 강제적인 힘으로 공포분위기에서 할 수 없이 찍은 것은 지금 국제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국제법의 정상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그 문서 자체가 사기적인 문서였고, 또 공포분위기에서 대신이 찍었어도 공포분위기에서 만들어진 것은 국제법상으로 이것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힘으로, 군대의 힘으로 그때 일본 군대가 20개의 사단이 파견되어서 궁성을 둘러싸고 무력으로 공포분위기에 만든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위장된 보호는 결국 정신대, 종군위안부 같은 인간말살, 인간학대같은 처참한 만행을 저지르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종군위안부 동원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하는 것은 우리 윤정옥 선생님이 역사적으로 잘 아시는데 아까도 못하셨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국 윤정옥 선생님이나 우리가 여기에서 연구해 보면 종군위안부는 일본군인들에게

내려진 천황의 하사품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군인들을 위해 매춘여성들을 중심으로 모집했지만, 전쟁의 열기가 가열되는 과정에서 일본군대는 본격적으로 종군위안부를 관리하는 정책을 취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점점 그것이 심화되어서 결국 종군위안부들은 사람이 아니라 일본군인을 위한 군수물자, 소모품 취급을 받았습니다. 전선으로 수송될 때 위안부들은 ‘사람 한 명’이 아니라 ‘탄환 한 상자’ 또는 ‘쌀’, ‘보리’로 서류가 작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결혼도 하지 않고, 성경험이 전혀 없었던 이 여성들은 하루 평균 30 - 40명 심지어는 100명이나 되는 일본군을 상대해야 하는 정도로 아무렇게나 취급되던 소모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장 극심한 인간존엄에 대한 잔학 행위이며, 인간존엄에 대한 모독이며,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파괴행위임이 명백합니다. 특히 ‘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에 있어 중요하며, 인격 등의 인간성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강제로 하루 수십 명의 군인들에 의해 윤간당하게 만든 일본 군대와 국가의 정책은 여성억압의 극치이며, 국제법적으로도 “인도(人道)에 대한 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강제매춘 금지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인도에 대한 범죄는 시효도 없고 이것은 아주 범죄이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라고 남한의 법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효가 없으니 100년이고 200년이고 문제화될 수 있고, 배상받을 수 있는 범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서둘러 진상규명 작업을 종결짓고, 법적인 차원에서 문제해결이 아닌 ‘위로기금’의 형식으로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전범국가였던 독일의 태도와는 전혀 다르며, 국제법상으로도 위반인 동시에,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려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종군위안부 자료를 소각해 없애고 47년간 이 문제를 은폐해 온 일본정부의 태도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을 또 조선을 식민지화했던 군국주의 사고, 패권주의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적에 우리는 일본을 함께 같이 평화롭게 살아가야 할 이웃사촌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웃사촌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일본의 잘못을 추궁하고 책임을 지려는 양심적인 일본의 양심 세력, 그 중에 여기 오신 여성대표들은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과 손을 잡고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런 과거를 딛고, 우리가 이제 미래에 있어서의 평화창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화창조, 이제는 이 사회가 국제화 시대, 지역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고립된 한 나라만의 평화, 한 나라만의 안보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공동안보의식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혼자 평화롭게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북과 남이 함께, 또 이웃인 일본과 함께, 또 중국과 함께, 우리 이웃들, 우리 지역이 함께 우리가 이 공동안보라는 의식으로 바뀌어져서 함께 하지 않는 한 우리가 평화창조는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안의 갈등 또 남과 북의 이 민족적인 분단에서 오는 갈등, 이 해소도 중요하지만, 일본과 한국, 또 우리나라

라 사이 대만 혹은 중국 또 독립연합국 이런 주변국가들과의 갈등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는 이런 공동안보의 시대에 왔다고 할 적에 우리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평화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반평화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해서 반평화적인 요인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측의 여성들은 여성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평화를 이룩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전영역 다시 말해서 노동이라든지, 교육분야라든지, 정치분야, 경제분야라든지 모든 우리 삶의 전영역에서 불공평이라든지, 불평등, 차별적인 갈등 구조를 없애는데 관심을 가지고 남한의 평화운동여성단체들은 일을 해왔습니다.

1960년대에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당하는 성차별의 현실을 깨달으면서 여성들은 자신들도 평등한 인격체임을 자각하게 되었고, 이것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얻기 위한 운동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가족 내의 남녀평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1950년대 초반부터 가족법 개정운동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 운동은 거의 40년에 걸쳐 전체 여성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989년 12월에 드디어 개정되었습니다. 이 운동에 남한의 전체여성단체들 약 82개(?) 단체가 힘을 합쳤던 것은 우리의 여성운동사에 하나의 모범이 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각된 여성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970년대에 여성들은 깨어난 의식을 가지고 우리사회의 인권향상과 민주화를 위한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1970년대의 일입니다. 1960년대부터 남한은 경제개발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삶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도록 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노동자, 농민들에 대한 공평한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정치적 측면에서도 인권문제와 민주화는 여전히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들과 함께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1980년대는 민주화/인권운동의 계속되는 가운데 그것과 더불어서 민중운동과 통일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단의 세월을 통해 여성들이 가장 큰 희생자였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은 여성들로 하여금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1987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출범되면서 여성운동 단체들이 한 데 힘을 합쳐 여성운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1980년대는 다양한 형태의 평화통일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먼저, 전쟁을 반대하고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반전반핵운동이 있었습니다. 남측 여성들에게 있어서 핵문제에 대한 접근은 처음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투하로 인한 한인 원폭피해자 돕기 운동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원폭피해자 진상파악, 의료지원, 원폭피해자 2세 장학금 지급, 일본정부

에 보상금 요구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한국에서 최초로 모든 남성운동단체도 못하는 반전반핵평화운동을 시작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해 핵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반전반핵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핵발전소 건설반대운동, 핵폐기물처리장건설 반대운동 등이 환경단체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교육과 공청회, 서명운동, 국회의원에게 항의편지 보내기, 가두시위 등이 이 운동을 전개시키는 방법들입니다. 이제 반전반핵운동은 동북아시아의 핵을 철수시키려는 “동북아시아비핵지대화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본은 전세계적인 군축과 반핵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금년 내 1 톤의 플루토늄을 반입할 것이며, 이것은 나가사키형 원폭 160개를 만들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2010년까지는 100-120톤을 반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핵연료 재처리시설인 고속증식로가 5년 이내에 완성된다면 일본은 장차 세계적인 핵강국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의 핵대국화 현실을 비판하면서 여성들의 평화운동을 국경을 넘어서 함께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많은 여성대중을 참여시켜 통일과 평화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 운동을 확산시키려는 “평화한마당”이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작년에 연 “여성평화한마당”에서는 전쟁장남감을 평화장남감으로 바꾸어 주기, 통일과 평화를 주제로 한 글짓기, 그림그리기 등을 실시했는데, 이같이 여성들의 정서에 부합한 통일운동의 내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2세들을 위한 평화교육의 일환입니다.

「참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회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교육관련단체는 ‘평화교육’을 확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격성과 적대감을 갖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평화지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어머니와 교사의 역할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평화교육입니다. 평화교육은 비록 오랜기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세대를 키워냄으로써 장차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주역을 탄생시키려는 것입니다. 현재 평화교육은 교회교육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그 전망은 매우 밝다고 봅니다. 지난 해 봄 걸프전이 발생하고 한국군 파병이 미국으로부터 요청되었을 때 우리는 <걸프전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걸프전쟁을 반대하는 움직임은 여성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는데, 반전반핵운동단체, 주부여성운동단체, 학부모운동단체 등 자신이 속해 있는 각 단체의 관심사에 따라 전쟁을 반대하는 논리들을 펼치게 되었고, 이 운동을 통해 여성들은 특히 적대감과 공격성을 극복하는 평화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교육의 기본은 신뢰선 구축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판문점에서 회담을 백 번 해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은 신뢰성을 구축해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화교육의 기본입니다.

여성들은 또한 군사비감축운동을 통해 남북의 군사대결과 군비경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기독교여성회」, 「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등 여러 특별히 기독교여성단체들이 많이 반핵평화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평화연구소들도 자료들을 출판하고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남북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으로 인한 군사비를 지출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절약해서 사회복지예산에 써야 할 형편입니다. 우리는 비교적 남과 북이 사회복지비 보다는 군사지출비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복지비로 돌려야만 하고 또 둘째는 우리 두뇌관리입니다. 20대에서 30대의 남성, 여성의 두뇌가 가장 우수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군대에 묶어놓고 사람을 죽이는 방법만 연구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것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한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축소하고 군비를 축소하는 것은 평화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다시 하나 첨가된 운동이 환경운동입니다. 인간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약한 자연을 파괴할 적에 그 자연은 인간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 자연이 멸망할 때 인간이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힘의 논리가 강자와 약자가 함께 죽어가는 논리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가치관의 전도가 필요합니다.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자연없이 못삽니다. 자연은 인간 없이 혼자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이 자연을 즐기고, 자연보다 강하다고 생각해서 자연을 막 파괴하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관 바뀌어져서 사실은 우리가 약한 자, 강한 자 없이 서로 보충하고 보완하면서 살 때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다는 이런 논리로 바뀌어져야지 힘의 논리로,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논리로는 강자도 약자도 다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운동은 자연을 우리의 하나의 상대자,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상대자, 파트너로 보아야만 한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여성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은 역사를 통해 자신들의 힘의 논리를 통해 전쟁과 분열을 계속해 왔고, 또한 자연을 인간의 발전을 위한 도구로 무차별 개발하여 파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움직이던 것은 동서의 안보 중심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물러가면서 이제는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세계의 질서는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라틴아메리카가 한데 묶여져 가고, 유럽은 유럽공동체(EC)로 집결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세아 역시 경제적으로 하나의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계적인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세계질서가 강대국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강대국은 더욱 부자가 되기 위해 가난한 나라의 1차 자원을 마구 채취하고 발굴해 갑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은 극히 미미한 것이 냉정한 국제현실입니다.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기근으로 수백명씩 하루에 죽어가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역시 일본의 국가이기주의

중심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일본의 군사대국화, 핵강대국화를 우려합니다. 만일 일본이 진정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려면 현재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세계평화를 위한 기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일본이 진정으로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중군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지배를 비롯한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청산해야 합니다.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역사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평화를 논하는 것은 그 진실성이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남과 북, 일본의 여성들은 각자 자신이 속한 사회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매에는 각자 살고 있는 사회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의 입장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남성들과 지배자 중심의 힘의 논리에 기반한 것이라면 우리는 냉정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일본여성들이 일본의 PKO 파병을 반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선한 일이 아닐 때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평화로운 미래를 우리 스스로 창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세계에서 인류는 이념과 체제와 국적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이 일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기를 권유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 보충토론 1 ■

야마야 신희(일본기독교교종회 회장)

저는 처음 평양에 왔습니다. 평양토론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여기 온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아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과거의 일본 군국주의 지배로 이 나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게 주었다는 것, 그리고 특히 나는 한 기독교인으로서 일본의 기독교의 대표자들이 조선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다는 것, 이에 대해서 반성과 사회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많은 기독교자들이 참배를 강요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매우 사죄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카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이 분단의 원인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있다는 것을 우리일본 전 여성들도 깊이 이해하고 이 통일을 위해서, 남북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그리고 그 책임을 지금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우정 선생님께서 보고를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한국여성운동이 아주 힘있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일본여성들도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힘껏 노력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것을 이우정 선생님의 보고를 들으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돌아갈 뻔 용기를 내서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을 위해서 투쟁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사회의 자주 평화통일을 위해서 일본여성들도 노력하자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남북사회에 조선반도를 비핵화지대로 만드는 데 대한 합의서가 이룩되었는데 이것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것은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세아를 비핵화로 만드는 것을 확대하는 것에 일본여성들의 힘도 합치려고 합니다. 일본인은 “비핵 3원칙” 즉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가지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이 있는데 미국이 핵무기를 반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핵 3원칙을 지키지 않는 대상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독성이 강한 물질로 이것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핵폐기물을 가지고 재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 플루토늄을 실은 배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일본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위협이 됩니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핵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지로 여러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일본에서는 PKO법안이라고 하는 ‘자위대 해외파병법’이 우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부가 캄보디아에 PKO법안에 따라서 자위대를 파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를 건설하는 공병을 파견한다는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사람들은 도로가 잘 닦아지면 뒤따라서 일본 상사들이 들어와 경제 투자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 침략과 군사적 파병은 언제나 일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지만 더우기 일본 정부는 자위대에 피임도구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주변 나라들에서 매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군위안부와 같은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여성들은 물론 아시아 여성들의 성과 인권을 유린하는 책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병사들의 성처리기구로써 여성을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사고방식이 아직도 뿌리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나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여성의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입니다. 평화의 창조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세계이며 또한 차별이 없는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뿌리깊이 남아 있는 민족차별과 성차별을 없애고 민족과 국적이 달라도 같은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로서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평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 보충토론 2 ■

조승조(사회과학원 실장)

제가 지금 소개받은 조승조입니다. 저는 오늘 북과 남, 해외동포들과 일본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이 모임에 참가해서 많은 것을 느꼈고 또 새롭게 결의도 다졌습니다. 이 땅에서 수천 년 하나의 핏줄로 단일민족으로 살아 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북과 남으로 갈라지고 서로 오도 가도 못하고 격리된 상태에서 47년 간의 오랜 세월을 흘려 보냈으나 이렇게 만나고 보니 대번에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감정이 통하고, 저는 정말 동족의 피는 물보다도 더 진하다는 그 말이 ‘과연 옳다’는 것을 직감으로, 피부로 깊이 깊이 느끼게 되었고, 이렇게 반년의 오랜 역사적 기간 단일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을 그 누구도 그 어떤 힘도 갈라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측 중앙대표인 이우정 선생님께서 하신 기초보고와 일본측 대표인 야마야 신고 선생님이 하신 토론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더우기 많은 문제에서 우리와 견해가 일치하거나 또는 매우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조선인 반도와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조선의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해서 있는 성의와 노력을 다해온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사의를 표합니다.

이제 이우정 선생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화 문제 이것은 자유롭고 화목한 세계 평화를 창조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평화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단합되고 화목하고 평온한 양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화문제는 매우 범위가 넓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보장하는 데서 현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구상에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하는 지배주의 세력이 나와 있는 조건 하에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배주의 세력의 침략을 반대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안온도 나라의 평화가 보장되어야 가정의 안온도 보장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내 민족성원의 가정에서의 행복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성들이 평화운동을 벌여 나가는 데서 어디다 초점을 두어야 하겠는가 전쟁을 반대하고, 대결을 반대하고, 무장충돌을 반대하는 이러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다 기본을 두고 평화운동을 벌여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 각도에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대표 여러분, 평화보장문제는 오늘날 극동지역 특히 조선반도에서 참으로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반도는 대비된 군대수가 무장력에 있어서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거대한 무력대치지대로 대두했으며 군사력 대치상태의 견지에서 놓고 볼 때도 가장 첨예한 곳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조선반도에서의 전쟁경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그것이

일방의 정책적 의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병사의 실수와 같은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도 임의의 시각에 전면전쟁이 터질 수 있는 사태가 항시적으로 조성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북과 남을 가리지 않고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3·8선 제일선에 배치되어 있는 제일선 부대들이 일단 전황이 조성되게 되면 어느 때든지 그에 대응하므로 지금 되어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선반도에서는 어느 한 병사가 실수를 하거나 오발을 해도 거기에 응하지 않고 무장충돌로 확대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전면전쟁이 터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이 하나의 가능성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마치지 말아야 할 것은 조선에서의 전쟁위험이 최근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조선정책으로 하여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응당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미국은 저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서 장애를 당한 모든 세력을 제압시키고 소멸하려고 하는 세계전략에 따라서 오늘 우리 사회주의를 소멸하는 것을 대조선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고립시키고 우리에게 압력을 가해서 우리가 스스로 사회주의를 포기하기를 종용하며 이것이 실현되지 못할 때에는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군사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제압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현세기에 지역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요망한 것은 편리한가 발효된 것은 평화와 ... 조선침략을 위한 대기실을 전쟁 시나리오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은 바로 ... 사실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폭력으로 기정 사실로 하고 있으며 지금은 그 시기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 것은 미국의 이러한 침략정책에 민주화의 일부세력들이 적극 가담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도 말로는 평화체제 구축과 신뢰의 조성 등 평화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지로는 동족을 반대하여서 외세와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극동지역에서의 전쟁위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일본의 핵팽창정책과 핵무장시도에 대해서도 응당한 충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지금과 같이 핵무장을 하고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는 경우 그것 대상으로서는 아세아와 조선반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테이프가 바뀌는 관계로 말이 이어지지 않음) 이러한 무력을 그대로 두고 평화의 대화라는 것은 한갓 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은 어떻게 하든지 무력증강 전쟁을 줄이고 무력삭감의 길만이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북과 남이 더이상 무력을 삭감하여 전쟁능력을 감소시키면 그만큼 전쟁위험은 줄어들고 불가침은 담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과 남의 병력을 각각 10만 아래로 줄이고 모든 민간 군사조직들과 민간무력을 해체하며 군사장비들을 축소 폐기하며 군사장비의 직접 통신을 중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 북남합의서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북남합의서 이행을 지연시키려는 일부 세력의 움직임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북남합의서의 발효를 환영하면서 그것이 하루 빨리 실천에 들어갈 것을 바라고 있으나 적지 않은 세력은 그 이행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으며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합의서 이행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백지화하려는 세력들의 온당치 못한 행동에 경각심을 높이고 불가침 합의서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여성들은 미국의 대조선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운동을 활발히 벌여야 합니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침장만이 아니라 침장평화이며?) 전쟁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철회한 효과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일 미국이 무슨 구실을 걸고서라도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곧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 효과는 명백합니다.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이로우며 전쟁은 우리 모두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조선정책을 방지함으로써 또다시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조선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하루 속히 철거시켜야 합니다. 북남 사이의 불가침 합의로 미군은 이제 더 남한에 남아 있을 명분이 없습니다. 남조선 주둔의 미군은 전쟁의 근원이고 통일의 근본 장애일 뿐 아니라 특히 남녘의 여성들에게 비인간적인 치욕을 주고 우리 민족성을 흐리게 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은 이 비인간적인 사회를 끝장내기 위해서라도 미군철수운동을 과감히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전쟁위험을 제거하는데 있어 극동지역을 비유하는 것을..... 있습니다. 극동지역을 비핵화하는 데서 기본은 남조선과 일본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를 내놓고 모든 핵기지를 철폐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핵무장화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응당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 선생님들의 토론에서 일본의 핵무장화 기도에 대해서 토론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조선 땅에서 살든 해외에 살든 일본 땅에서 살든 관계없이 힘을 합쳐 일본의 핵개발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반도가 극동지역에서 전쟁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이끌어가는 대규모전쟁연습을 중지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사적 대결 상태가 첨예한 우리나라에서 일방에서 벌이는 대규모군사연습은 임의의 시각에 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외세와 함께 대규모로 벌이는 전쟁연습은 위험천만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외세가 참가하는 대규모군사연습이 그칠 새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8월 달에는 포커스 렌스와 같은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되었고 어제부터는 한미합동야전기동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군사연습은 한순간에 모처럼 마련된 「북남합의서」를 백지로 만들 수 있으며 이미 도래했던 평화의 환희와 감격을 대결의 원점으로 돌려 세울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전쟁을 바라지 않고 평화를 원하는 여성들이라면 북과 남을 가리지 말고 전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규모군사연습을 중지시키기 위하여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평화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토

론하였습니다. 평화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북과 남, 일본 그리고 해외동포 여성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협조되어야(?) 온 인류가 떠들 수 있고 여성들이되면 평화는 영원히 이룩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머니로서 우리가 겪은 체험인 전쟁의 비극을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여성들은 힘을 합쳐 우리가 살고 우리 후대들이 대를 이어가며 살게 될 이 땅의 영원한 평화, 정말 평화가 깃들도록 하기 위하여 손잡고 함께 싸워 나아갑시다.



■ 질의/응답 ■

질문 1 : 조선반도에서 동북아세아 비핵지대화운동으로 확대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핵문제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조승조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답변(조승조) : 조선반도와 아세아지역의 비핵화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1956년에 원전기를 도입하지 말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도 조선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한 훈련에 ..를 제기하였습니다. 또 87년에도 그렇게 했고 시종일관 조선반도의 비핵화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핵사찰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매우 떠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비정기사찰을 두 번에 걸쳐서 받았습시다. 받고 이미 우리의 핵시설이 평화적 목적이라는 데 대해서 이미 인정을 받았고 앞으로도 우리는 정기 사찰을 성실하게 받을 것입니다. 또 남과 북과의 관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전반의 비핵화공동선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전혀 사찰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왜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는가, 남쪽에서 북에 대한 핵 불신 뿐만 아니라 북에서 남쪽에 대한 핵 불신도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다 받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자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가 왜 제기되었느냐?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가 제기된 것은 미군의 핵무기가 남조선에 들어왔고 그것이 남조선에 ...됐고 그것이 증강됐고, 그러니 1000여 개의 핵무기가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핵문제가 조선반도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작년도 11월에 남조선 최고당국자가 핵부제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달에는 미국대통령 부시가 조선반도와 아세아 지역에서 핵무기를 다 철수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는 작년에도 핵부제선언을 했는데 미국 대통령은 또 금년도 7월 달에 철수했다고 하니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도 잘 믿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보자' 남에서 우리도 다 보고 우리도 남에 가서 다 보고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남조선에 있는 미군의 핵무기와 핵기지를 사찰 대

상에서 빼자는 것입니다. 남측의 주장은 '그것은 않된다. 빼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고 한다면 조선반도에서의 비핵화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이 가셔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부제선언까지 했지, 핵무기를 철수했다고 하지 못 보여 줄 방도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보여주지 못하겠다고 하는가, 우리는 지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이유를 우리 여자들이 받아들이면 이 북남사찰도 다 해결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핵화공동선언에서 제기된 합의와는 다르게 그 합의의 이외 것들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북남 동수사찰, 그 다음에 일반 군사기지 사찰, 특수사찰 이런 것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동수사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핵기지도 없습니다. 핵무기도 없고. 그런데 남쪽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수로 사찰하자. 그런데 우리는 없고 남쪽에는 1000여 개의 핵무기가 있는데 같은 수의 사찰하자.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과 남의 전면 핵기지,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에 대해 전면사찰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의견이 상치되어서 핵사찰문제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당부(?)는 지금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강도든 높입니다. "너희 사찰하는데 우리 미국 기지는 보지 못한다. 핵기지는 못본다. 그래서 미국의 핵무기는 못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도든 높이가 어디 있습니까? 핵무기는 어디 자기들만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당연히 자기들은 가지고 있어도 사찰을 받지 않아도 되고,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를 못 가지며 다른 나라들은 사찰을 받아라. 이런 강도든 높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납득이 갈만큼 여성들한테 다 선전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질문 2 : 조선 주둔 미군 문제는 평화창조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군으로 하여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와 고충도 심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남조선 주둔 미군을 위해 기지촌들에서는 상당한 수의 양공주가 있다고 하며, 미군에 의한 강간, 강도들의 피해를 남쪽 여성들이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군으로 인해 수많은 혼혈아가 생기고 있으며, 이것이 민족성을 고수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또 여성단체들은 어떤 대책들을 생각하고 있는지요?

답변(이우정) : 사실 6·25라는 전쟁이 없었으면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주둔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6·25라는 민족전쟁 말하자면 같은 민족끼리 총구를 맞대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 비극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비극이지요. 어느 주권국가든지 외국군이 자기 나라에 와 있는 것을 좋아 할 사람은 없지요. 언젠가는 철수해야 하고 그리고 또 철수를 요구해야 하지요. 그리고 여성문제인데요. 전쟁시기에는 어느 나라에나 여성들이 당하지요. 중군위 안부도 그런 것이지요. 비상시기에는 군인들에 의해서 여성들이 당하는데 많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강제로 강간을 당하거나 하는 일은 없고, 미군이 주둔해 있는 기지촌에 여성들이 미군들을 상대로 술장사를 하다보니까 미군하고 같이 사는 여자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단체들이 특별

히 기독교여성단체인 「두레방」에서 기지촌에 가서 그 여성들이 직업을 청산하고 보다 건전한 직업을 가지고 여성의 존엄성을 살리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을 하고 있구요. 또 술도 팔고 미군 상대로 장사를 하다가 미군하고 사랑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미국에 가서 문화가 다르고 또 미국의 법을 모르니까 때로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가르쳐서 그 여성들이 미군하고 결혼해 가지고 미국 가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건전한 직업도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국제결혼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지요. 이제 앞으로 전인류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평화로운 세상을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고 할 때는 국제결혼을 무조건 반대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고, 미국으로 이민가고 또 한국에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는 운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질문 3 : 기초보고에서 평화창조를 위해 어린이들에 대한 평화교육을 평화창조의 주요과업으로 제기하였는데 그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에 발등에 불부터 끄라는 말이 있듯이 전쟁위험이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과 현실적인 전쟁위험을 막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이우정) :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기본적인 전쟁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 하지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군인수도 줄이고, 군비축소도 해야 하고. 사실 또 북측과 남측은 적대국가 아니지요. 그러나 주변국가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갈등요소 즉 자기의 이기주의적인 경제적인 이권관계 등 그런 갈등요소를 제거하는 운동, 그것은 전쟁을 막는 운동이지요. 그것과 동시에 인간들이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믿지 못하고, 또 나는 열을 가져도 남이 하나 가진 것을 뺏어야 한다는 패권주의, 또 그것을 뺏기 위해서 군대가 강해져야 한다는 군사제일주의의 군국주의 등이 팽배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막고 싶어도 못 막지요. 따라서 어려서부터 인간성을 평화로 사랑하는, 공격적이고 적대감을 가지고 증오하는 인간이 아닌, 이웃과 협조하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간으로 길러가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평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둘을 같이 가지요.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에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 4 : 북측에서도 군사연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군대가 연습하는 것에 대해 북측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답변(조승조) : 군사연습에 대한 인식을 옳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대가 있는 조건 하에서는 군사연습이라든가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그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북과 남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대규모군사연습입니다. 특히는 외국군대와 함께 일방의 공격을 위해서 벌이는 군사연습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대규모군사연습을 반대하여야 되겠는가? 이점을 짚은

시간 내에 시간이 촉박하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북과 남의 현재 대치되어 있는 이 대치상태, 이 대결상태를 더 격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조선에서도 아마 76년도 .. 팀스프리트 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군사연습이.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군사연습에는 최고 20만병력의 미군과 남조선군이 참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형항공모함을 비롯해서 최신형 군사장비들이 동원되었고, 한때는 아마 거기에 핵무기까지 동원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0만 명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에게 대한 선제 타격, 일차 타격을 가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병력이면 전쟁을 하나 치루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런 군사연습을 매해 벌이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땅덩어리라는 게 22만 평방 킬로미터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서울에서 뜨게 되는 경우 비행기가 3초 후에 북에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세계 전쟁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전쟁연습을 벌이다가 상대방이 안심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해서 공격을 개시하는 것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이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역시 여기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 스프리트 등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북남 군사대결은 더욱 격화되는, 아주 팽팽한 관계로, 그래서 북남 간의 대화가 벌어지다가도 그때가서는 다 결렬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대규모군사연습이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한 불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군사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전군이 동원태세에 들어가서 아주 군사적으로 고도의 대치상태에 있게 되는데, 이때 만일 가정해서 어느 병사가 실수를 해서 우리 지역에 폭탄을 한 발 떨어뜨렸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도발인 줄 알고 여기에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서 대규모적인 전투전이 벌어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규모군사연습 특히는 외국군대와 함께 어느 일방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연습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질문 5 : 일본 국회에서 PKO법안이 통과되어 일본자위군의 해외진출의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나라들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일본 야당과 사회당 단체들에서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려는지요?

답변(야마야 신고) : 우리들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반대하는 운동을 끊임없이 계속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속하고 있는 「일본기독교협의회」나 「일본기독교인협회」, 그외의 공산당계의 단체, 사회당계의 단체 등등에서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이 일본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나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참된 시민운동으로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PKO법안이 국민들의 커다란 반대가 있었으므로 해서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법률이 「파병을 허용하지 않는 한에서는 파병을 할 수 없다」는 규제가 우리들의 투쟁에 의해서 유입된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폴포트가 지금 현재 정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UN의 역할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해외에 군대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하려고 합니다.

폐 회 사

대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아세아의 평화요 조선민족의 위업에 이바지 하려는 숭고한 사명감을 안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대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가에 의해 상건된 의견들에 대한 토의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토론회에 제기한 기초보고와 토론들은 통하여 현실이 우리 여성들 앞에 나서는 가장 긴급한 문제들이 조선민족의 대단결과 아세아의 평화보장, 일본의 조선에 대한 침략과 지배, 전후 보상문제 등에 대하여 기탄없는 의견을 나누고, 많은 면에서 견해의 일치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우리들이 신봉하는 사상과 이념은 달라도 민족적 화해는 하나, 통일을 실현하려는 겨레의 마음은 하나로 맥박치고 있으며 민족은 하나요, 이 땅에 평화로운 삶을 펼쳐나가려는 염원과 의지에 있어서도 다를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우리 북과 남, 해외 동포 여성들 사이에 사랑과 믿음은 더욱 두터워졌고, 조선과 일본여성들 사이에 형제적 친선의 정도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작이 좋으면 결실도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일본에서 토론회의 첫 막을 올릴 때로부터 서울을 거쳐 평양에 이르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좋게 출발한 우리의 이 발걸음으로 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조선민족의 통일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대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시대와 역사 앞에 지니고 있는 우리 여성들의 책임을 다해 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상 관계로 다하지 못한 의제에 대한 의견은 평양체류기간 활발한 접촉을 통해서 보다 심화시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서 민족주의 여성단체 협의회와 일제의 조선침략과 지배, 전후보상을 위한 북남, 일본여성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한 새롭고 중요한 발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부터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그에 합의함으로써 내외인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이 소식을 전해주시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는 대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일정을 보다 즐겁게 뜻 깊게 보내시기를 축원하면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 폐막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려연구 낭독)

고 별 성 명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토론회는 1992년 9월 1일부터 6일까지 성대히 진행되고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책임’,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의 종말과 인간의 존엄이 말살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민족의 단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상이나 신앙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으로서의 이해를 높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자유로운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를 출발점으로 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41년간 에 걸친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허위와 폭력에 의해 조작된 을사조약에서 보는 것처럼 역사적인 청산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파렴치한 중군위안부에서 보는 것처럼 조선여성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고도 오늘까지도 진지한 사죄에 기초한 보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일본은 저지른 죄악의 진상을 공개하고 사죄와 보상, 다시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실행할 때까지 규탄의 목소리를 강화할 것이다. 역사에 역행하지 않으며 미래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세아에서 핵을 없애고 군사대국에 의한 위협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우리들 남과 북, 일본의 여성들은 아세아에서 침략의 지배와 역사를 영원히 종식시키고 인간으로서 함께 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더욱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실행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우리는 가능한 것부터 한가지씩 실천에 옮기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특히 중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긴급한 문제이다. 토론회는 그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여성들의 연대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을 결의한다. (이미경 낭독)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토론회에서

1992년 9월 6일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1. 들어가면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란 주제로 남과 북, 일본의 여성들이 모여 벌써 3번째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평양 모임을 준비하면서 여성들이 모여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과 동북아에 평화를 창조하는 문제에 관해 함께 토론하고 우리의 실천과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하는 힘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살아왔고, 아직도 남과 북은 체제경쟁과 군사대결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은 일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한 지배 속에서 당한 억압과 고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현실만을 배경으로 한다면 우리 여성들이 모여서 평화에 관해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작년에 도쿄와 서울에서 만났고, 이번에는 평양에 모였습니다. 남측 방문단의 평양 방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이번 평양 토론회는 분단 47년 이후 아니 남측 민간진영 여성들의 의 최초의 북조선 방문이라는 점에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만남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남측여성들을 이곳으로 오게 한 동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는 우리 여성들이 평화를 향해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신념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창조하려는 여성들의 의지가 그것입니다. 여성들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며 키우는 어머니된 존재이므로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합니다. 또한 여성들은 역사적 고난의 담지자로서 항상 억압당해온 경험을 통해 평화로운 세계를 추구해왔습니다. 남한의 분단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가장 큰 희생자였습니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여성에 대한 성침탈, 전쟁과 이산가족의 슬픔, 남북의 군사대결과 사회의 군사화로 인한 경제적, 문화적 억압현실은 여성에게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은 언제나 통일과 평화를 염원했고, 그 염원이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저는 일본 여성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같은 여성으로서 남성 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힘의 논리가 통용되는 강자중심의 사회에서의 겪은 억압의 경험이 바로 우리와 평화창조를 위한 연대의 길에 나란히 설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성들은 그런 의미에서 고통과 고난, 억압의 자리에 있는 약자의 편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남성들은 강자 중심의 힘의 논리에 따라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지만 여성은 생명에 대한 존중과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로 남성중심의 힘의 논리가 통용되는 사회구조를 비판하고 저항하며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성들의 힘이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양 토론회의 소주제는 '민족대단결과 일본의 침략과 지배, 전후책임, 그리고 평화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들을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남쪽 사회의 현실과 경험을 중심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해하는 '평화'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세아의 평화" 혹은 "평화창조"라고 했을 때 과연 "평화"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려 합니다. 오늘날 평화 개념으로 첫째로, 전쟁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로 군비축소와 핵문제가 많이 거론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 평화 이해입니다. 남과 북의 대치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평화는 군사대결과 군비경쟁을 중지하여 휴전상태를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전쟁은 국가에 의해서 계획되고 조직된 것으로, 최고형태의 물리적 폭력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극복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최소한의 평화를 보장받는 조건이 됩니다.

둘째로 적극적인 평화이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창조한다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온전성과 총체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60년대 이후의 평화연구에서는 이러한 적극적 의미의 평화개념, 즉 잠재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이 극복되고 계급적/성적/인종적인 다양한 갈등이 해소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이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정의의 실현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평화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평등하고 공평해 질 때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냉전이후의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것이 강대국의 이해에 기반한 경제논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이 아세아에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나, 최근 PKO 법안통과로 부각되고 있는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 추세 역시 자국의 경제적 잇권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보호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가난한 사람들, 여성, 약소국에 대한 경제정의의 실현은 이제 평화창조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대국의 힘의 논리를 비판하는 남과 북, 일본여성들의 연대에 의미가 있습니다.

즉 "평화창조"는 생명을 사랑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 주체는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성들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며, '살림'을 책임진 여성으로서, 또한 억압받는 여성들의 현실에서 우리는 강대국과 남성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 초래된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와 역사와 분단이 낳은 여러 모순들에 대해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감으로써 아세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창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일본의 조선침략과 전후책임에 관하여

일본의 조선침략과 지배는 철저히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이해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아세아의 평화를 명분으로 한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표어는 일본의 침략적 제국주의의 속성을 은폐한 것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종군위안부 사건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본질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일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조선을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해를 위해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최근에 남한의 역사학계는 1905년 을사조약 당시, 일본측이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의 승인을 얻지 못하자 불법으로 외부인(外部印:정부의 내각 중에 대외관계를 맡아 보던 기관의 결재도장)을 탈취하여 조약문서에 찍음으로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일본의 외교문서를 통해 밝혀진 것입니

다.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며, 을사조약 자체가 무효화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선을 탈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일본의 조선지배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예측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국적은 물론이요 말과 이름까지 빼앗겼고, 전통문화는 일본인들에 의해 야만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우리 민족과 우리 땅의 모든 물질은 일본을 위해 이용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건강한 남성들에 대한 징병과 징용, 그리고 젊은 여성들에 대한 강제 종군위안부 징병을 통해 우리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정책까지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도 정신대, 종군위안부 문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악랄한 인권유린으로 기록될 사건입니다.

일본의 종군위안부 동원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아직 정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일본이 중국침략을 위해 1931년 만주사변 이후 그 이듬해인 1932년 1월 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²⁾ 만주사변에서 1937년의 중일전쟁, 1941년의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진 시기 동안에 조선은 일본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병참기지가 됩니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 내려지자 조선의 물질 자원은 물론 대규모의 징용과 징병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여성들에 대한 종군위안부 징용이 나타납니다. 여성에 대한 징용은 노동력 착취라는 차원을 넘어 성을 철저히 일본의 전쟁수행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이지만, 일본은 이것을 황민(皇民)의 의무라는 말로 정당화 시켰습니다. 식민지 여성이기에 당했던 이중, 삼중의 고통을 종군위안부 여성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군위안부는 일본군인들에게 내려진 천황의 하사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군인들을 위해 매춘여성들을 중심으로 모집했지만, 전쟁의 열기가 가열되는 과정에서 일본군대는 본격적으로 종군위안부를 관리하는 정책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1938년 1월에 이르러 상해에 주둔하던 일본 군대에는 육군위안소가 군직영으로 출현되었습니다. 이 육군위안소는 수십개의 골방을 가진 10층 목조건물로, 24명의 일본여자와 80명의 조선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³⁾ 조선 여성들은 대부분 속아서 끌려온 여성들이었습니다. 1938년부터 일본정부는 친일조선인 매춘업자를 통해 조선 여성들에게 여공, 여점원, 간호부를 모집한다고 속여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1941년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종군위안부는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종전에는 "잘 먹게 해주겠다"라든지 "돈벌게 해주겠다"라고 속여서 끌고 갔지만 이제부터는 강권을 발동하여 강제로 끌고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면직원과 경찰에 의한 종군위안부 사냥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여성들은 냇가에서, 집 앞에서 끌려갔고, 심지어는 보통학교(국민학교, 인민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근로정신

1) 정신대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종군위안부'이며, 다른 하나는 '근로정신대'이다. 일본은 이 둘을 모두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군위안부이다. 그러나 일본은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노역한 여성들에게도 임금을 떼먹었으며, 그들 중 일부분을 종군위안부로 넘기기도 하였다. 우리는 주로 종군위안부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문제해결과정에서 근로정신대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2) 중앙일보, 1984년 3월 13일자(역사학자 임종국씨의 조사), 양미강, "정신대에 대한 역사적 고찰", 『평화를 만드는 여성』 12호(1992,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에서 재인용.

3) 임종국, 위의 글.

대로 갔다가 어린 나이에 종군위안부로 끌려간 경우도 있습니다.⁴⁾ 이렇게 끌려간 조선 처녀들은 멀리 중국과 동남아세아, 남양군도 등 각지로, 일본군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끌려갔습니다.

종군위안부의 숫자는 약 17 - 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엄격히 감금된 상태에서 낮에는 탄약나르기와 빨래를 하고 밤에는 위안부 생활을 강요 당하는 등 철저히 수탈당했습니다. 일본은 전쟁에서 패하고도 이 사실을 조선인 위안부들에게 알리지 않고 내버리고 도망가거나, 집단으로 굴 속에 넣고 폭사시키거나, 바다에 빠뜨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전쟁 후 살아남은 종군위안부 여성들은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역만리에서 죽어갔으며, 돌아온 이들도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건강도 악화된 채 홀로 쓸쓸하고 가난한 노후를 보내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종군위안부들은 사람이 아니라 군수물자, 소모품 취급을 받았습니다. 전선으로 수송될 때 위안부들은 '사람 한 명'이 아니라 '탄환 한 상자' 또는 '쌀', '보리'로 서류가 작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결혼도 하지 않고, 성경험이 전혀 없었던 이 여성들은 하루 평균 30 - 40명 심지어는 100명이나 되는 일본군을 상대해야 하는 정도로 아무렇게나 취급되던 소모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장 극심한 인간존재에 대한 잔학행위이며, 인간존엄에 대한 모독이며,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파괴행위임이 명백합니다. 특히 '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에 있어 중요하며, 인격 등의 인간성에 직결하는 것에서, 강제로 하루 수십 명의 군인들에 의해 운간당하게 만든 일본 군대와 국가의 정책은 여성억압의 극치이며, 국제법적으로도 "인도(人道)에 대한 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강제매춘 금지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최근까지만 해도 종군위안부 사건이 일본군대와 정부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2차대전의 패전과 함께 일본이 종군위안부에 대한 자료들을 다른 1급 군사기밀들과 함께 폐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견되는 자료들은 군대와 정부의 관여로 종군위안부가 조직적으로 강제동원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 내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활동으로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계속되면서 일본정부는 겨우 시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일본정부 차원에서 시인은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는 종군위안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직접적인 증언과 자료의 발굴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철저한 사죄와 배상이 요구됩니다. 일본정부는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며, 이미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종군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 1990년 부터 입니다. 또한 일본정부는 종군위안부의 모집과 관리는 정부와 군대가 아닌 민간업자에 의한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다가 최근야야 관여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것은 남한과 일본의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일어나면서 감추어진 자료가 발굴되고 더우기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이 용기있게 과거의 처참했던 종군위안부 생활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전 후보상이 마감되었다고 했던 1965년의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이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4) 일제에 의한 국민학생 정신대 동원은 서울 연희국교(6명), 교동국교(4명), 덕수국교(8명)의 학적부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동아일보, 1992년 1월 14-15일자.

않았으므로,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의 사건이며, 국제법적으로도 "인도에 대한 죄"⁵⁾와 "강제매춘금지규정"⁶⁾에 반하는 것이므로 일본정부는 역사적 과오를 시인하고 사죄하며 배상을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현재 일본정부는 서둘러 진상규명 작업을 종결짓고, 법적인 차원에서의 문제해결이 아닌 '위로기금'의 형식으로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전범국가였던 독일의 태도⁷⁾와는 전혀 다르며, 국제법상으로도 위반인 동시에,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려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종군위안부 자료를 소각하고 47년간 이 문제를 은폐해 온 일본정부의 태도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정대협>은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이 문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고, 올해 8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이 의제가 채택되었습니다. 한편 과거 2차대전 당시 종군위안부의 희생을 당한 동남아세아 여성들이 8월 10 - 11 양일에 걸쳐 서울에 모여 「강제종군위안부 아세아연대」를 결성하였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종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모임에는 일본여성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북측 여성들도 이 문제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증언자를 발굴하는 일에 함께 동참으로써 다시는 과거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희망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밝혀내고 역사를 바로잡을 때 우리의 올바른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우리 자매들의 겪었던 처참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종군위안부의 역사를 철저히 규명할 때 비로소 가능해 집니다.

5) "인도의 죄"(Crime against Humanity)는 2차대전 후 독일 전범을 재판하기 위하여 제정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6조와 일본전범을 재판하기 위하여 제정된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 5항 그리고 양 군사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정립된 개념이다. 두 조례에는 "인도에 대한 죄"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전쟁 전 또는 전쟁 중 주민 일반에 대해 행해진 살인, 섬멸, 노예적 혹사, 강제이주 및 그밖의 비인도적 행위, 또는 범행지의 국내법에 저촉 여부를 불문하고 본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의 수행으로서, 혹은 이것에 관련해 행해진 정치적, 인종적 혹은 종교적 이유에 근거한 저해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강제매춘"은 1904년 백인노예 매매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정"으로부터 시작하여, 1921년 "부녀자 및 아동의 매매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1949년에 채택된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착취의 방지를 위한 협약"을 통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7) 독일은 2차대전을 전후하여 침략전쟁의 개시 및 600만의 유대인 학살 등 수많은 악행을 자행했다. 전후 뉘른베르크에 설치된 국제군사재판소와 전승연합국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한 군사재판정을 통해 중요한 사건들이 처리되었지만 서독은 서독대로 국내법의 제정을 통해 나치스 전범들에 대한 처벌에 나섰다. 이에 관한 서독의 국내법에서는 공소시효가 1969년 12월 31일로 끝나는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당시 아직도 많은 전범들이 체포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1969년 7월 3일 서독 의회는 마침내 전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인류에 대해 동일한 대죄를 범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려고 하는 일본과는 달리 스스로 속죄의 길을 택한 서독의 자세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3.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

우리는 과거 외세에 의한 민족지배로 인해 식민지 지배 당시 엄청난 고난을 겪었고, 해방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외세에 의해 분단되는 쓰라림을 겪었습니다. 이제 이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민족대단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역사를 통해 삼국시대를 제외하고는 한 민족으로 한 나라를 이루면서 이 땅을 지키고 가꾸며 살아왔습니다. 남북의 분단 47년은 우리 민족이 함께 살아온 그 오랜 기간에 기간에 비한다면 지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적 동질성은 우리를 이념과 체제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따라서 저는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하고 작년 12월 13일에 발표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역시 확인된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이야말로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한 기본명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주로 외세를 향한 민족대단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민족대단결을 통해 외세에서 자주화를 이룩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남북합의서」 1장의 내용을 잘 실천한다면 남과 북의 민족대단결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1조),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하며(2조),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으며, 6조에서 합의했듯이 국제무대에서도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남과 북의 민족대단결을 위한 바탕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족대단결’에 관한 관심이 북측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북측의 발표를 경청하고 앞으로 우리의 통일운동에 있어 민족대단결의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고자 합니다. 대신에 저는 현재 남한의 통일운동에서 ‘민족대단결’에 대해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2가지 정도로 소개하려 합니다.

첫째, 민족대단결은 다양한 갈등의 해소를 통해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민족대단결에서 간과된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계급, 계층, 성으로 분열된 ‘민족내부의 단결’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권력과 물질과 물질의 편차에서 나타난 계급, 계층간의 갈등이 어떻게 하나의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단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국가의 위기 앞에서 계급/계층/성을 초월하여 단결해야 하지만, 그 단결이 이루어지기 위한 토대, 즉 ‘소유와 권력의 평등한 분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대가 한양에 쳐들어 왔을 때 돈 있고 권세있는 양반은 피난가고 노비들은 일본군대를 막기 보다는 노비문서가 보관되어 있던 관청에 불을 질렀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갈등과 모순이 편제한 현실 속에서 단순히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순을 해소시키는 것은 지배자의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건 그 공동체 구성원의 계급, 계층, 성, 인종 간의 갈등이 해소될 때 대단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권력의 행사 역시 민족구성원의 의사에 합당하게 집행되어야만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평한 분배와 민주화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중요한 까닭은 여성은 역사적으로 권력과 물질의 분배에서 가장 소외되어온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평등한 분배는 정치적 민주화와 지방자치제를 확대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화 역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남

과 북에 각기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 조건이 마련된다면 통일을 위한 남북의 대단결도 더욱 잘 이루어 질 것이라고 봅니다.

민족구성원의 갈등을 해소하지 아니하고 민족대단결을 말하는 것은 갈라진 남과 북의 땅과 사람만을 기계적으로 합치는 것이 통일이라고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의 다양한 갈등과 모순이 해소되지 않은 채 통일 이후의 사회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측에서는 현재의 여러가지 모순이 통일 이후에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통일은 어떤 통일이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면서 통일 이후의 사회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될 때 남북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당연히 현재의 계급, 계층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종속성이 극복된 상태의 통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민족 내부의 민주주의가 신장되고 대외적인 자주성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통일은 지배자와 권력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통일이 아닙니다. 민중의 권리가 대변되고 그 삶의 질이 향상되는 통일입니다.

둘째, 민족대단결은 자주와 평화의 원칙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통일은 어떤 통일인가”라는 질문은 통일의 과정에서 민족대단결이 담보되어야 자주와 평화의 원칙이 실현된다는 주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주와 평화의 원칙은 통일의 방법론 뿐만 아니라 통일의 과정에서 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즉 통일을 통해 자주하며 평화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민족대단결입니다.

신라는 당나라의 도움을 얻어 한반도의 주인이 될수 있었지만 그 댓가로 만주까지 이어진 옛고구려의 영토를 상실함은 물론 당나라에게 예속됨으로써 자주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 통일함으로써 외세를 추방할 수 있었지만 국민들 사이의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향유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국토의 통일을 무력에 의해 이루었으나 그 이상의 것, 즉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권리를 신장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신라의 백성들과 베트남 민중들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주권, 즉 자주권이 회복되고, 국민의 권리도 향상되는, 즉 민중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통일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원칙’ 역시 통일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통일하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하고, 그 결과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서독의 경우 일찌기 기본조약을 통해 상대를 서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정치적 대화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또한 유엔에 함께 들어가 국제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동서가 화해하는 일에 동참하여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상대를 의심하거나 고립시키거나 아니면 불리한 정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에서 노력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들이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주와 평화는 통일을 위한 수단과 동시에 통일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려는 것은 민족이 외세의 지배로 인해서 분단된 것을 극복해서 하나 되어 자주화하고 또 분단으로 인해서 겪은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를 수립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자주와 평화의 원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입니다. "사상과 제도,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의 궁극적 목표는 역시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상과 제도와 이념의 문제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서간의 냉전체제 하에서의 외세와 관련에서 온 문제였습니다. 이들의 차이들로 인한 동서간의 갈등이 우리에게서 대리갈등과 대리전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족대단결의 문제가 민족의 자주화와 평화의 문제와 관련해서 고려됩니다. 자주화의 실패는 민족대단결을 깨뜨리고 이것은 곧 갈등과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민족의 자주화 없는 민족대단결은 불가능하고 민족대단결 없는 민족의 평화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7.4 공동선언」에 나타나 있는 3대 원칙들은 독자적으로는 성립될 수 없으며, 또 독자적으로 실천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여성의 평화지향성이 민족대단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성은 어머니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이 관계가 약자의 편에 서고 정의롭고 공평한 것을 지향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여성은 다양한 갈등과 분단을 화해시키는 조정자로 나설 수 있습니다. 또한 분단구조 속에서 가장 커다란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민족대단결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화해와 일치가 요구되는 이 시대에 여성들이 먼저 지금까지 서로 다른 상대방에 대해 가져왔던 적대감과 공격심을 없애고, 또한 자신과 생각을 달리 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며,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민족으로 탄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비록 그가 어디에 속해 있을지라도 지나온 삶의 경험을 나눔으로 서로 친근해 지기가 남성들에 비해 쉽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우리들이 가진 능력, 즉 상대방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능력을 개발하고 타인을 자기의 가족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마음과 개방성을 확대할 때 민족공동체의 화해와 단결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4.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

이것이 바로 평화를 창조해 나가는 데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길입니다. 평화는 맨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삶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큰 이상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 애쓰는 것은 결국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 여성들은 자기가 속한 사회만의 안보와 번영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단을 극복하고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야만 우리 모두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공동안보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먼저 반평화적인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확실히 깨달을 때 우리의 평화를 위한 여정은 시작됩니다. 남측의 여성들은 여성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평화를 이룩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결국 여성운동은 반평화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했던 평화운동이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당하는 성차별의 현실을 깨달으면서 여성들은 자신들도 평등한 인격체임을 자각하게 되었고, 이것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얻기 위한 운동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가족 내의 남녀평등 문제부

터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1950년대 초반부터 가족법 개정운동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 운동은 거의 40년에 걸쳐 전체 여성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989년 12월에 드디어 개정되었습니다. 이 운동에 남한의 전체여성단체들이 힘을 합쳤던 것은 우리의 여성운동사에 하나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1970년대에 여성들은 깨어난 의식을 가지고 우리사회의 인권향상과 민주화를 위한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1970년대의 일입니다. 1960년대부터 남한은 경제개발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삶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도록 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노동자, 농민들에 대한 공평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정치적 측면에서도 인권문제와 민주화는 여전히 요구되었기에 여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들과 함께 노력했습니다.

1980년대는 민주화/인권운동의 계속되고, 더불어 민중운동과 통일운동이 확산된 시기입니다. 분단의 세월을 통해 여성들이 가장 큰 희생자였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은 여성들로 하여금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1987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출범되면서 여성운동 단체들이 한 데 힘을 합쳐 여성운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1980년대는 다양한 형태의 평화통일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먼저, 전쟁을 반대하고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반전반핵운동이 있습니다. 남측 여성들에게 있어서 핵문제에 대한 접근은 처음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투하로 인한 한인 원폭피해자 돕기 운동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원폭피해자 진상파악, 의료지원, 원폭피해자 2세 장학금 지급, 일본정부에 보상금 요구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해 핵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반전반핵운동으로 발전되었습니다. 핵발전소 건설반대운동, 핵폐기물처리장건설 반대운동 등이 환경단체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교육과 공청회, 서명운동, 국회의원에게 항의편지 보내기, 가두시위 등이 이 운동을 전개시키는 방법들입니다.

이제 반전반핵운동은 동북아시아의 핵을 철수시키려는 "동북아시아비핵지대화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본은 전세계적인 군축과 반핵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금년 내 1 톤의 플루토늄을 반입할 것이며(이것은 나가사키형 원폭 160개를 만들수 있는 양), 2010년까지는 100-120톤을 반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핵연료 재처리시설인 고속증식로가 5년 이내에 완성된다면 일본은 장차 세계적인 핵강국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의 핵대국화 현실을 비판하면서 여성들의 평화운동을 국경을 넘어 확산시켜야 합니다.

한편 많은 여성대중을 참여시켜 통일과 평화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 운동을 확산시키려는 "평화한마당"이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작년엔 「여성평화한마당」에서는 전쟁장남감을 평화장남감으로 바꾸어 주기, 통일과 평화를 주제로 한 글짓기, 그림그리기 등을 실시했는데, 이같이 여성들의 정서에 부합한 통일운동의 내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참교육실천을 위한 학부모연대회의>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등의 교육관련단체는 '평화교육'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어릴때부터 공격성과 적대감을 갖지 않고 원수

를 사랑하는 평화지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어머니와 교사의 역할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평화교육입니다. 평화교육은 비록 오랜기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세대를 키워냄으로써 점차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주역을 탄생시키려는 것입니다. 현재 평화교육은 교회교육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그 전망은 매우 밝다고 봅니다. 지난 해 봄 걸프전이 발생하고 한국군 파병이 미국으로 부터 요청되었을 때 우리는 <걸프전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걸프전쟁을 반대하는 움직임은 여성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는데, 반전반핵운동단체, 주부여성운동단체, 학부모운동단체 등 자신이 속해 있는 각 단체의 관심사에 따라 전쟁을 반대하는 논리들을 펼치게 되었고, 이 운동을 통해 여성들은 특히 적대감과 공격성을 극복하는 평화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여성들은 또한 군사비감축운동을 통해 남북의 군사대결과 군비경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여성회>, <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등의 기독교여성단체와 <반핵평화운동연합>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평화연구소들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비록 우리사회의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으로 인한 군사비를 지출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 낮은 형편입니다. 만일 이 군사비에 들어가는 돈이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비로 전환된다면 보다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리라는 점이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군축과 여성복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군사비감축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군사비를 감축하도록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편지 보내기,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개최, 서명운동, 시위 등을 통해 전개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현재에 이르기 까지 남측 여성들에게 새롭게 제기된 운동이 바로 환경운동입니다. 지구환경오염과 생태계의 위기 앞에서 이제는 전지구적으로 이념과 체제, 경제구조의 갈등을 넘어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공존하기 위한 생태계 보전운동은 이제 우리여성운동의 중심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구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자손만대 까지 살아야 할 하나뿐인 터전입니다. 이 지구를 살리려면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인식을 통해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 개발하고 파괴하기를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생태계의 보전에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자연과 먹을것, 마실 것에 들어 있는 오염물질은 여성들의 몸을 통해 우리의 후손에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소련 체르노빌의 아이들의 모습이 장래 우리 후손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평화만들기 운동은 그 속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 마치면서

저는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여성들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은 역사를 통해 자신들의 힘의 논리를 통해 전쟁과 분열을 계속해 왔고, 또한 자연을 인간의 발전을 위한 도구로 무차별 개발하여 파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움직이던 것은 동서의 안보 중심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물러가면서 이제는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세계의 질서는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라틴아메리카가 한데 묶여지고 있고, 유럽은 유럽공동체(EC)로 결집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세아

역시 경제적으로 하나의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세계질서가 강대국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강대국은 더욱 부자가 되기 위해 가난한 나라의 1차 자원을 마구 채취하고 발굴해 갑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극히 미미한 것이 냉정한 국제현실입니다.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역시 일본의 국가이기주의 중심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일본의 군사대국화, 핵강대국화를 우려합니다. 만일 일본이 진정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려면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세계평화를 위한 기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일본이 진정으로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종군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지배를 비롯한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청산해야 합니다.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역사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평화를 논하는 것은 그 진실성이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남과 북, 일본의 여성들은 각자 자신이 속한 사회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매애는 각자 살고 있는 사회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의 입장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남성들과 지배자 중심의 힘의 논리에 기반한 것이라면 우리는 냉정하게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일본여성들이 일본의 PKO 파병을 반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선한 일이 아닐 때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평화로운 미래를 우리 스스로 창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세계에서 인류는 이념과 체제와 국적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이 일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 끝 *

이우정

들어가면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란 주제로 남과 북, 그리고 일본의 세 나라 여성들이 모여 벌써 3번째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이번 평양에서의 모임을 준비하면서 여성들이 모여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과 동북아의 평화창조의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우리의 실천과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하는 동력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각자 다른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살아왔고, 아직도 남과 북은 체제경쟁과 군사대결 상태에 있다. 또한 남한과 북조선은 일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한 지배 속에서 당한 억압과 고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외적인 현실만을 본다면 각자 처지가 다른 상황에서 우리 여성들이 모여서 평화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작년에 동경과 서울에서 만났고, 이번에는 평양에서 모였다. 남측방문단의 평양방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번 평양 토론회는 분단 47년 이후 남측 여성들, 아니 남측 민간진영의 최초의 북조선 방문이라는 점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 역사적인 만남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일까?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남측여성들이 이곳으로 오도록 한 동기는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여성들의 평화를 향한 끊임없는 열정, 통일을 꼭 이루어야 한다는 신념이라고 생각한다. 여성들의 평화창조에의 의지가 그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언제나 역사적 고난의 담지자로서 항상 억압당해온 경험을 통해 늘 평화로운 세계를 추구해왔다. 남한의 분단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가장 큰 희생자였다. 전쟁과 이산가족의 슬픔, 남북한의 군사대결과 사회의 군사화로 인한 경제적, 문화적 억압현실은 여성에게 가장 크게 작용했기에 여성들은 끊임없이 통일과 평화를 염원했고,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

나는 일본의 여성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여성으로서 남성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힘의 논리가 통용되는 강자중심의 사회에서의 억압의 경험이 바로 우리와 평화창조를 위한 연대의 길에 나란히 설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본다. 여성들은 그런 의미에서 고통과 고난, 억압의 자리에 있는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것은 남성중심의 힘의 논리가 통용되는 사회구조를 비판하고 저항하며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이것이 여성들의 힘이다.

이번 평양 토론회의 소주제는 민족대단결과 일본의 침략에 의한 전후보상, 그리고 평화창조의 문제이다. 나는 이 주제들은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남한 사회의 현실과 경험을 중심으로 말하려고 한다.

<평화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아세아의 평화”, 혹은 “평화창조”라고 했을 때 과연, “평화”의 개념을 무엇으로 상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려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쟁과 폭력의 반대개념으로(평화)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주로 군축과 핵문제를 떠올리게 된다. 특히 남과 북의 대치상황 속에서의 평화란 군사대결과 군비경쟁을 중지하여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이라는 조직화된 물리적 폭력의 극복, 이것은 인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최소한의 평화를 보장받는 조건이 된다. 더 나아가 평화를 창조한다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온전성, 총체성이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60년대 이후의 평화연구에서는 이러한 적극적 의미에서 잠재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의 극복, 계급적-성적-인종적인 다양한 갈등이 해소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이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경제적 정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평화의 문제가 놓여있다.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평등하고 공평해 질 때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냉전이후의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것이 민족에 기반한 경제논리라는 것을 보게 된다. 미국이 아세아에서 군사적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나, 최근 PKO 법안 통과로 부각되고 있는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의 논리 역시 자국의 경제적 잇권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가난한 사람들, 여성, 약소국의 경제정의의 실현은 이제 평화창조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강대국의 힘의 논리를 비판하는 남과 북, 그리고 일본여성들의 연대의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 1910년에서 1945년까지 강대국의 힘의 논리를 따른 일본에 의한 한반도 강점과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수탈, 그리고 한반도 민중과 여성들에게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강제중군위안부의 역사를 여성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이제 과거를 올바르게 청산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창조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1905년의 을사조약의 문제에 관하여>

최근에 남한의 역사학계는 1905년의 을사조약이 일본측이 당시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의 승인을 얻지 못하자 편법으로 외부인(外府印: 정부의 내각 중에 대외관계를 맡아보던 기관의 결제도장)을 탈취하여 조약문서에 도장을 찍음으로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두 나라의 과거의 역사에 있어 일본측에 저지른 과다한 국제법적 위반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일본역사학계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의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역사적 사실로 주장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일본의 조선을 식민지화 하는 과정에 있어 당시 조약체결절차를 합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데 있어 얼마나 국가이기주의적 혹은 제국주의적으로 조선을 이용해 왔는가 하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것이다.

올해 8월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정신대문제에 관한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일본정부로 하여금 과거에 대한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과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이 문제를 <UN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고 <UN인권위원회>에 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로 채택하였다. 이제 <정대협>에서 <UN인권위원회>에 낸 보고서를 중심으로 남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신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배상책임」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정신대 문제¹⁾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

일본정부는 정신대 문제에 대해, 이것이 태평양전쟁 때 있었던 일이기에 종전 후 46년이 지난 지금 ‘가슴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거론할 여지가 없다는 공식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한 일이기에 정부로서는 책임이 없다고 해왔다.(1990년 6월 일본 참의원에서 사회당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그러나 정부주도로 일이 자행되었다는 물증이 잇따라 발견되자 일본정부는 관련을 시인할 수 없게 되었다.²⁾ 이를 시인한 것이 현시점(1991년)이므로 그것은 현재의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1992년 7월 6일 일본정부는 정신대에 관한 정부차원의 조사보고를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여기서 일본 정부는 중군위안부의 모집, 위안소의 경영, 관리들에 정부가 관여하였지만 강제로 여성들을 납치하거나 연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는 대단히 부족하거나 형식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정부는 경찰청과 노동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또한 중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전혀 참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강제연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정대협>에 신고해 온 중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약 60%가 강제연행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우리는 정신대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이 이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보며, 올바른 배상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이 오고가는 차원이 아니라 왜 배상해야 하는가의 근거가 납득되어야 한다. 즉 정신대할머니들에게 어떤 잘못, 범죄를 저질렀는가 먼저 정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상규명이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바탕 위에서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가 규명되고, 이에 따라 배상의 기준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정부는 서둘러 진상규명 작업을 종결짓고, 법적인 차원에서의 문제해결이 아닌 ‘위로기금’의 형식으로 중군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이것은 국제법상으로도 위반인 동시에,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려는 태도가 아니다. 이것은 과거 정신대 자료를 소각하고 47년가 이 문제를 은폐해온 일본정부 태도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 정신대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중군위안부’이며, 다른 하나는 ‘근로정신대’이다. 일본은 이 둘을 모두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군위안부이다. 그러나 일본은 근로 정신대에 동원되어 노역한 여성들에게도 임금을 떼먹었으며, 그들 중 일부분을 중군위안부로 넘기기도 하였다. 우리는 주로 중군위안부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문제해결과정에서 근로정신대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2) 일본정부는 패전하자 정신대에 관한 자료들을 다른 1급 군사기밀들과 함께 소각명령을 내렸다. 최근 발견되는 자료들은 그나마 부분적으로 남겨진 일부 자료들이며, 당시 군인이었던 사람을 포함해 정신대의 존재를 알았던 민간인들의 증언이 물증이 되고 있다.

1.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

1) 정신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은 그것이 '인도에 대한 죄'(CRIME AGAINST HUMANITY)³⁾를 범했다는 데 있다. 일본은 약 4000년동안 독립된 국가를 형성해 온 조선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파괴하기 위하여 그들의 말과 글을 빼앗고, 그들의 성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하는 등의 민족말살정책을 폈다. 10-20만의 젊은 조선여성들을 무차별로 강제로 일본 군대의 성적 노예로 삼는 행위는 조선인에게 공포와 수치이며, 그들의 행동을 파괴하는 것(씨를 말리는 것)으로서, 가장 극심한 민족말살정책이며 인도에 대한 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2) 일본은 전장에서 위안부로 쓰여지게 하기 위해 계획적, 조직적, 강제적으로 혹은 속임수(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준다는 식)에 의해 15세에서 30대의 여성들을 고향에서 데려다 놓고 절대로 도망칠 수 없도록 감금해 놓고 군의 위안부로 일할 것을 강요하였다. 더구나 군은 패전통보를 조선인 위안부들에게 하지 않고 버려두고 도망가거나, 집단으로 굴 속에 넣고 폭사시키거나, 바다에 빠뜨려 죽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군대와 국가가 전적으로 관여하여 이루어졌다.

3) 중군위안부들은 인간이 아니라 군수물자, 소모품 취급을 받았다. 전선으로 수송될 때 위안부들은 '인간 1명'이 아니라 '탄환1박스' 또는 '쌀', '보리'로 서류가 작성되었다. 군사물자로서 수송선 등으로 운반되었다. 심지어 ()의견서에서는 "군용특수위안소는 쾌락의 장소가 아닌 위생적인 공중변소였으므로..."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대부분 결혼도 하지 않고, 성경험이 전혀 없었던 이 여성들은 하루 평균 50-60명 심지어는 100명이나 되는 일본군을 상대해야 하는 아무렇게나 취급되는 소모품이었다. 이것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장 극심한 인간존재에 대한 잔학행위이며, 인간존엄에 대한 모독이며, 인간의 교양에 대한 파괴행위임이 명백하다. 특히 '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에 있어 중요하며, 인격 등의 인간성에 직결하는 것에서, 강제로 하루 수십 명의 군인들에 의해 운간당하게 만든 일본 군대와 국가의 정책은 여성억압의 극치이며, 인도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강제매춘 금지규정'⁴⁾에 반하는 것이다.

3) 인도에 대한 죄는 2차대전 후 독일 전범을 재판하기 위하여 제정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6조와 일본전범을 재판하기 위하여 제정된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5조 그리고 양 군사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정립된 개념이다.

두 조례에는 인도에 대한 죄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전쟁 전 또는 전쟁 중 주민 일반에 대해 행해진 살인, 섬멸, 노예적 혹사, 강제이주 및 그밖의 비인도적 행위, 또는 범행지의 국내법에 저촉 여부를 불문하고 본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의 수행으로서, 혹은 이것에 관련해 행해진 정치적 인종적 혹은 종교적 이유에 근거한 저해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로 들고 있는 '정치적, 인종적, 혹은 종교적 이유에 근거한 박해 행위'라는 요건에 주의해 보면, 인도에 대한 죄가 표적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체제자 절멸을 기하고 있는 일정 이념이든 인종적 특성이든 보유자로서의 개인 또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 범죄의 목표방향이 다른 범죄와 전혀 다른 것은 단체 내지 집단, 어느 인종 내지 민족, 종교 정치 그룹에 속해 있는 인간이면 그것 만으로 대상이 되었다는 점

4) 강제매춘은 1904년 백인조에 매매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정(International Agreement

2. 법적 배상문제에 대해 일본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답변

이상의 예에서 보듯이 정신대는 명백히 인도에 대한 죄의 위반이며, 이 법에 근거하여 일본은 일본의 국내법과 상관 없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것을 위리기금이 아니라 죄에 대한 사죄를 의미하는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1) 시효가 지났다는 문제에 대하여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사건은 46년간 은폐되었다가 이제야 제기된 현안의 문제로서, 인도에 관한 죄가 국제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이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1968년 UN총회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서의 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바 있고, 1974년 1월 유럽 이사회는 자체의 '유럽협약'을 채택하여 서명에 개방한 바 있다.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서의 시효 부적용과 관련해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1969년 7월 3일 당시 서독의회가 이에 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는 점이다.⁵⁾

2) 일본 국내법 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도에 대한 죄는 확립된 국제 관습법이므로 그대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또한 현 국제법상 인권의 보호는 '강행규범'으로 되어 있으며, '대세적 의무'로 간주되고 있다.⁶⁾

(3) 1965년 6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이 문제는 한일양국간에 보상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주장

for the Suppression of White Slave Traffice)로부터 시작하여, 1921년 '부녀자 및 아동이 매매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1949년에 채택된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착취의 방지를 위한 협약"을 통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5) 독일은 2차대전을 전후하여 침략전쟁을 개시 및 300만의 유대인 학살 등 수 많은 악행을 자행했다. 전후 뉘른베르크에 설치된 국제군사재판소와 전승 연합국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한 군사재판소를 통해 중요한 사건들이 처리되었지만 서독은 서독은 서독으로 국내법의 제정을 통해 나치스 전범들에 대한 처벌에 나섰다. 그러나 이에 관한 당시 아직도 많은 전범들이 체포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1969년 7월 3일 서독의회는 마침내 전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인류에 대해 동일한 대죄를 범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려고 하는 일본과는 달리 스스로 속죄의 길을 택한 서독의 자세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6) 여기서 '강행규범'(jus cogens)이라 함은 "그로부터의 어떠한 일탈도 허용되지 않고 동일한 성격을 가진 후속하는 일반 국제법의 규범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는 규범으로 국가로서 구성되는 국제사회 전체에 의해 수락되고 승인된 규범"을 말하는 것이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 그리고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라 함은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의무를 일컫는 것이다. 대세적 의무의 특징은 그것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의무이기에 이에 대한 입안을 직접적 피해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의 관심사항이라는 데 있다.

에 대하여

이 협정은 한국국민의 대대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양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이다. 이 협정에는 정신대 문제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단 이 협정내용 중에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확인한다"는 조항(제2조 1항)이 있는데 정신대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는가? 이것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것은 새로운 쟁점이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정신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민간인들이 한 일하기에 정부로서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이 문제는 위의 한일협정의 체결 시에는 생각지 못한 일이며, 그러한 이유에서 이 협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3. UN에 바라는 조치들

- (1) 인권위원회가 이 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 (2) 그 결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관련 유엔 기구와 특별기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 사실조사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을 남한, 북한, 일본, 그리고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각국에 파견하고
 - 관련정부와 NGO(민간단체)들에 이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보낼 것을 요청하고
 - Sub-commission's Rapporteur on Compensation에 이러한 종류의 상황을 연구하여 배상과 관련한 추천장을 만들도록 하며
 - 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배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조정/중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여 인권위원회가 위의 조치들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상에서 <정대협>이 UN인권위원회에 낸 「정신대 문제에 관한 일본의 배상책임」을 살펴해보았다. 지난 8월 10 - 11 서울에서는 아세아 각국의 여성들이 모여 「정신대문제에 관한 아세아 여성연대회의」를 개최하여 아세아 여러나라에서 자행되었던 정신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함께 대응하기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아세아 여성들의 연대는 정신대 문제의 해결을 함에 있어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나는 북측 여성들도 이 「연대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정신대 문제에 관해 공동대응하기를 제언한다.

<민족대단결 문제에 대하여>

일제의 식민지 지배의 결과인 정신대 문제에 아세아 각 나라의 여성들이 연대하듯, 남과 북에게는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민족대단결이 요구되고 있다. 나는 '민족대단결'에 관한 소주제에 대한 관심이 사실상 남측 보다는 북측에 더욱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솔직히 남측 여성의 통일운동에서 '민족대단결'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남측 참석자들은 북측의 발표를 경청하고 앞으로 남측여성들의 통일운동에 있어 민족대단결의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대신에 나는 여기서 현재 남한의 통일운동에서 '민족대단결'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2가지 초점을 소개하려 한다.

1. 민족대단결은 다양한 갈등의 해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7.4 공동성명에서 발표한 "사상과 제도,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그것을 통해 주로 외세의 극복에 초점을 둔 자주성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삼아왔다. 남측의 통일운동에서는 이러한 기본동기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 목적을 실현하기 노력하고 있다. 민족은 다양하게 개념화 시킬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언어와 혈연, 지역, 역사의 공통성에 기반한다. 이러한 다양한 공통성을 지닌 민족이 특히 남북분단현실 속에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하려면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특히 남북의 분단이 외세에 의한 것이었기에 남북의 단결은 중요하다.

현재 남측에서는 민족대단결에서 거의 취급되지 않았던 '민족내부의 분열'에 대해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것을 권력과 부의 편차에서 나타난 계급, 계층간의 갈등이 어떻게 하나의 민족이라는 이름하게 단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국가의 위기 앞에서 계급/계층을 초월하여 단결해야 하지만, 그 단결이 이루어지기 위한 토대, 즉 '부와 권력의 평등한 분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대가 한양에 쳐들어 왔을 때 돈있고 권세있는 양반은 피난가고 노비들은 일본군대를 막기 보다는 노비문서가 보관되어 있던 관청에 불을 질렀던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갈등과 모순이 편제한 현실 속에서 단순히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순을 해소시키는 지배자의 이데올로기이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이건 그 공동체 구성원의 갈등이 해소될 때 대단결 할 수 있다고 본다. 권력의 행사 역시 그것이 민족구성원의 의사에 합당하게 집행되어야만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공평한 분배와 민주화라고 본다. 이것이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중요한 것은 여성은 역사적으로 권력과 부의 분배에서 가장 소외되어온 집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권력의 평등한 분배는 민주화를 통해 가능하며, 민주화 역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때 가능해진다. 이들에게 조건이 마련되고 남측 내부의 민족구성원의 갈등이 해소된다면 통일을 위한 남북의 대단결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2. 민족대단결은 자주와 평화의 원칙을 가능하게 해준다.

민족구성원의 갈등을 해소하지 아니하고 민족대단결을 말하는 것은 통일만 단지 갈라진 남과 북을 기계적으로 합치는 것으로 보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런 방식의 통일은 현재의 다양한 갈등과 모순이 해소되지 않은 채 통일 이후의 사회에서도 그것이 계속 팽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측에서는 통일은 "어떤 통일이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함으로써 통일 이후의 사회상을 모색하고 있다. 이때 우리는 당연히 현재의 계급, 계층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종속성의 극복이 담보된 통일을 상정한다. 그렇게 될 때야 내부의 민주주의가 신장되고 대외적인 자주성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런 통일은 지배자와 권력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통일이 아니다. 민중의 권리가 대변되고 그 삶의 질이 향상되는 통일이다.

"통일은 어떤 통일인가"라는 질문은 통일의 과정에서 민족대단결이 담보되어야 자주와

남과 북에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동체의 내부단결이다



평화의 원칙이 실현되다는 주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주와 평화의 원칙은 통일 방법론 뿐만 아니라 통일의 과정에서 그 목표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민족대단결이다. 신라는 당나라의 도움을 얻어 한반도의 주인이 될 수 있었지만 그 댓가로 만주까지 이어진 옛고구려의 영토를 상실함은 물론 당나라에게 예속됨으로써 자주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 통일함으로써 외세를 추방할 수 있었지만 국민들 사이의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향유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베트남 민중들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따라서 국가 주권의 신장과 더불어 국민주권의 신장도 도모되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의 원칙’ 역시 통일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통일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동서독의 경우 일찌기 기본조약을 통해 상대를 서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했고 UN에 들어가 국제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동서가 화해하는 일에 동참하여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들은 서로 상대를 의심하거나 고립시키거나 아니면 불리하게 정책을 입안하지 않고 오해려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에서 노력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들이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의 갈등들의 최소화 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주와 평화는 통일을 위한 수단과 동시에 통일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통일을 하려는 것은 민족이 외세의 지배로 인해서 분단된 것을 극복해서 하나되어 자주화하고 또 분단으로 인해서 겪은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를 수립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때 ‘어떤 통일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자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자주와 평화의 원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다. “사상과 제도,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의 궁극적 목표는 역시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까지 사상과 제도와 이념의 문제는 국내정치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서간의 냉전체제 하에서의 외세와 관련해서 온 문제였다. 이들의 차이들로 인한 동서간의 갈등이 우리에게서 대리갈등 내지는 대리전쟁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민족대단결의 문제가 민족의 자주화와 평화의 문제와 관련해서 고려되는 것이다. 자주화의 실패는 민족대단결을 깨뜨리고 이것은 곧 갈등과 전쟁을 불러왔던 것이다. 결국 민족의 자주화 없는 민족대단결은 불가능하고 민족대단결 없는 민족의 평화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7.4 공동선언에 나타나 있는 3대 원칙들은 독자적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며, 꼭 독자적으로 실천될 수 없는 것이다.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

이제 남측 여성들은 평화창조를 위해 어떤 운동들을 전개하고 있는지 소개해 보겠다. 여성들은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것은 여성들의 삶의 자리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1. 전쟁과 핵을 반대하는 반전반핵, 평화군축운동

현재 남한의 여성들이 전개하는 평화운동은 다양하다. 전쟁을 반대하고 핵무기와 핵발

전소를 반대하는 반전반핵운동운동이 있다. 남측 여성들에게 있어서 핵문제에 대한 접근은 처음에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한인 원폭피해자 돕기 운동으로부터 출발하였다. 197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처음에는 원폭피해자 진상파악, 의료지원, 2세 장학금 지급, 일본정부에 보상금 요구 등을 전개하였다. 이것들은 운동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지상에서 핵은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는 반핵(反核)의 논리는 1980년대 들면서 반전반핵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핵발전소 건설반대운동, 핵폐기물처리장건설 반대운동 등이 환경단체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교육과 공청회, 서명운동, 국회의원에게 항의편지 보내기, 가두시위 등을 통해 반핵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핵문제까지 연계.

한편 많은 여성대중을 참여시켜 통일과 평화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 운동을 확산시키려는 “평화한마당”이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작년에 연 “여성평화한마당”에서는 전쟁장남감 바꾸어 주기, 통일과 평화를 주제로 한 글짓기, 그림그리기 등을 통해 여성들의 정서에 부합한 통일운동의 내용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편 ‘참교육실천을 위한 학부모연대회의’와 전교조를 통한 ‘평화교육’의 확산도 있다. 어릴때부터 공격성과 적대감을 갖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평화지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어머니와 교사의 역할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삶 속에서 평화를 실천하도록 하는 평화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교육은 비록 오랜기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세대를 키워냄으로써 장차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주역을 탄생시키려는 것이다. 현재 평화교육은 교회교육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그 전망은 매우 밝다. 지난 해 봄 걸프전이 발생하고 한국군 파병이 미국의 것을 만들었다. 한국사회에서 걸프전쟁을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이라는 단체가 되었다. 다양한 계층의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는데, 반전반핵운동단체, 주부여성운동단체, 학부모운동단체 등 자신이 속해 있는 각 단체의 관심사에 따라 전쟁을 반대하는 논리를 펼치게 되었고, 이 운동을 통해 여성들은 특히 적대감과 공격성을 극복하는 평화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여성들은 또한 군사비감축운동을 통해 남북의 군사대결과 군비경쟁을 반대하고 있다. 광범위한 평화군축운동의 범주 아래 전개되고 있는 군사비 감축운동에 민중운동 진영에서 참여하고 있다. ‘기독교민회’ 등의 민중여성운동단체와, ‘반핵평화운동연합’ 등이 그 주체가 되고 있다. 1987년 현재 남한 정부부예산의 약 27.31%가 군사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여성과 아동, 노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비에는 단지 6.44% 정도만이 할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수치는 남한과 생활수준이 비슷한 중상위자본주의 국가들, 예를 들면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베니주엘라, 포르투갈 등의 나라들이 있다. 남한의 군사비와 복지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휴전상황 속에서 북조선과 끊임없는 군비경쟁을 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분단의 결과이며, 이 같은 파행적인 정부 예산편성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비는 감소되는 것이다. 더구나 여성들에 대한 복지예산은 적은 가운데 더욱 적게 책정되어 있어 모성 보호를 위한 탁아소 등의 시설이 절대부족한 현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분단구조 속에서 가난한 여성이 분단모순과 성차별의 모순을 1차적으로 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명제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여성들의 평화군축운동은 삶의 자리로부터 시작

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90년도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정부예산연감」에서 볼 때 군사비를 단 1%만 줄여도 직장여성들이 갈구하는 탁아소를 5배나 더 짓고 운영할 수 있다. 또 주택의 경우, 주택부족과 주거불량으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도 여성인데 군사비에서 연간 1조원씩 12년간 주택공급에 투자한다면 남한의 공식빈곤층에 속하는 계층(인구의 약 10%)의 주택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단 군비지출로 인한 사회복지비의 감소라는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여성들은 분단구조 속의 군사화된 사회 속에서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체제 속에서 최하단구조에, 경제적으로는 최저 빈곤계층에, 문화적으로는 군사문화의 심화 속에서 다양한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왔다. 특히 미군의 주둔에 의한 기지촌여성의 문제도 포함된다. 결국 여성들에게 있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여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민족사적 과제 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존권의 차원에서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이 여성들로 하여금 다양한 방식의 평화통일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력이 되었다.

2. 새롭게 제기되는 경제정의와 평화문제

소련연방의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변화로 초래된 냉전 이후의 세계는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세계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비록 미국은 유일의 초강대국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냉전 이후에 동방 진영의 몰락은 미국의 전일적 영향 아래 있던 서방진영의 힘의 분화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즉 미국과 유럽의 EC공동체, 그리고 일본으로 하는 3극 체제로 분화되고 있으며, 이 분화를 촉진시키는 일차적 요인은 경제에 있다. 이데올로기가 중시되던 냉전 시대 이후 국제질서를 규정짓는 요인이 바로 민족을 바탕으로 한 경제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전세계적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동기는 미국의 국익(경제적 이익)을 냉전시대와 마찬가지로 공고히 관철시키려는 데 있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 역시 그것이 경제대국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측이 민족대단결의 논리를 민족경제의 결합으로 발전시키면서 남한의 대재벌 기업가들과의 교류를 확대시키려는 것은 북한경제의 필연적 요구에 의한 것이다. 남측의 재벌이 정부의 강경론자들이 주장하는 경제교류와 핵문제의 연계를 비판하고 경제교류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경제교류를 통해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평화창조에 있어 군축과 핵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정의 문제가 중요함을 발견하게 된다. 강대국 이익 중심의 힘의 논리에 의해 형성되는 국제질서나 재벌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경제교류에서 우리가 관심하고 있는 민중의 경제정의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정치권력이나 자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흡수통일에 대해 비판의 경계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독일통일의 경우만 보더라도 동독지역은 통일 이후에 서독의 내부식민지가 되었다고 말할 정도의 생활수준의 격차와 불황과 공장폐쇄로 인한 실업 등의 산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실직문제가 더욱 심각하며, 동독시절에 누렸던 탁아와 가사노동의 사회화 등의 사회복지의 후퇴, 그리고 이질감과 정체성의 혼란에서 오는 여러가지 갈등상황에 놓여있어 독일통일의 최대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사회의 경우 현재 “통일 이후의 통일”문제가 전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여성들의 입장에서 통일과 통일이후의 사회에서의 경제정의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현지 진행되고 있는 가난한 여성들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여성노동자운동, 여성농민운동은 전체여성운동과 평화운동의 차원에서 연대를 이룩하여야 한다.

3. 여성들의 연대를 통한 평화운동

서론에서 나는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남, 북, 일본여성들의 아세아의 평화를 위한 연대가 이념과 체제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여 여성들의 고난과 억압의 동참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차원에서 본다면 아직도 북조선과 일본은 미수교 상태이고 남과 북 역시 군사적으로 대치상황에 있다. 이런 공식적인 갈등관계를 여성들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여성들의 평화에의 의지와 연대를 통한 자매애(sisterhood)의 회복이라고 본다. 여기서 여성의 입장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각자가 속한 나라의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의식이 탄생된다. 현실적으로 국가의 이익에 반하고 그것을 비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항상 양심적인 소수에 의해서 행해져왔다. 일본의 PKO 파병문제를 보아도 그렇다. 일본국적을 가진 여성들로서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파병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소수 양심적 지식인과 여성들은 아세아에 있어서 보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PKO 파병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가 문제시 하는 정신대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신대 문제를 피해자 당사자들이 거론하기는 쉽지만 가해자인 일본의 여성들이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죄하며 배상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여성들의 고통과 고난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결국 여성들은 억압의 경험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나라의 정책에 대한 엄중한 비판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평화운동이 전개되고 여성들의 연대가 확산될 때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앞당겨 질 수 있으리라 본다.

9.18.

글 머리에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란 주제로 남북, 일본 세 나라의 여성들이 모여 벌써 3번째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은 여성들의 연대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앞당기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한번 깨닫게 된다.

이 시간의 소 주제는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이다. 이 주제를 논함에 있어 필자는 먼저 평화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평화"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여성들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인은 이 글에서 평화가 요구되는 객관적 현실을 설명하기 보다는 주로 남한사회의 현실과 경험 속에서 여성들의 평화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1. 평화의 개념 - 적극적 의미의 평화

'평화'의 개념은 문화권에 따라 그 역점이 다르다. 고대 희랍세계에서 평화 즉 에이레네(eirene)는 질서와 정돈의 상태, 풍요한 번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유대교의 평화 샬롬(shalom)은 행복, 번영, 안전을 의미하며 그것은 정의(正義)와 반드시 결부되어 물가의 나무가 무럭무럭 성장하여 번영과 번창을 누리는 상태 처럼 인간의 삶의 온전성이 발휘되는 상태를 의미했다. 그런가 하면 로마의 평화 팍스(pax)는 정복에 의하여 실현된 전쟁이 없는 질서의 상태를 의미했다. 따라서 우리가 팍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팍스 로마나'(Pax Romana) 혹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라고 할 때는 강대국의 이해에 기초한 강대국 중심의 평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제3세계 민중의 삶의 온전성은 발휘될 수 없는 정의와 자유가 부재한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팍스 로마나 혹은 팍스 아메리카나라 불렀던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 사용된 한자의 화평(和平)은 마음의 평안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 평화를 내포하고 있다. 즉 '화'(和)라는 한자음은 '쌀'을 뜻하는 '화'(禾)와 떡을 '입'을 뜻하는 '구'(口)가 합쳐진 단어로 결국 '먹을 것이 평등해지는' 경제적 평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평화연구(peace studies)에서는 평화의 개념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평화의 반대개념으로 폭력을 생각하고 있다. 즉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없을 때 평화로운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폭력은 단순하게 설명될 수 없다. 평화연구에서는 폭력을 세가지 범주, 즉 잠재적 폭력, 물리적 폭력, 구조적 폭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물리적 폭력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폭력이다. 구타, 고문,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강간 등이 그것이며 물리적 폭력이 극대화 된 것이 바로 전쟁이다. 전쟁은 가장 큰 물리적 폭력이면서도 국가에 의해서 합의되고 조직화된 폭력이다.

한편 구조적 폭력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제도적 폭력 혹은 구조악이라 할 수 있다. 구조적 폭력이란 한 사회나 구조나 체제가 갖는 폭력성을 말하는데, 가령 한 노동자가 저임금의 구조 때문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면 그는 이 사회로부터 구조적인 폭력은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이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며 자아실현을 할 수 없는 것은 대체로 이 구조적 폭력에 의한 것이며, 실제로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땅이나 집이 없어서 굶주려 죽고, 영양실조로 죽게

되는 수천만의 사람들은 제국주의라는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라 할 수 있다.

또한 잠재적 폭력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물리적, 구조적 폭력이 전제되어 있는 삶에서 미리 짐작하여 절망과 좌절감으로 희망이나 창의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성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하자. 가부장적 문화권에서 우리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서 많은 제약을 받으며 살아왔다. “여자는 얌전해야 한다”, “정숙해야 한다” 한편으로 남성에 대해서는 “남자는 적어도 용감하고 믿음직해야 한다” 등등의 기대가 있다. 이렇게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교육받을 때 여성들은 스스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 살아갈 것을 포기하고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안주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볼 때 일제시대로부터 이어진 ‘식민사관’(殖民史觀)이란 것이 있다. 그것은 가령 “조선인은 민족성이 분열적이다”라든지 “게으르다”든지 선천적으로 조선인이 일본인에 비해 열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에서 “따라서 일본에 비해 못사는 것은 당연하며,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논리적 비약을 낳았다. 이것이야 말로 일제식민지 이후 오늘날까지 남한 사회에 남아 있는 식민사관이다.

이렇게 폭력의 개념을 다양하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평화를 단순히 물리적 폭력이나 전쟁의 반대개념으로 보아왔던 것은 소극적인 개념규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평화”란 ‘억압과 착취가 없고 인권과 사회정의가 보장된 사회에서만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이해에서 분단문제는 한국사회의 평화를 가로막는 총체적 폭력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즉 지난 40여년간의 남북의 군사대결은 전쟁이라는 최고의 물리적 폭력사용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해왔다. 이러한 분단과 휴전상태의 지속(즉 그것은 언제라도 다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이 남북한 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지었는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남한사회의 경험에서 본다면 분단현실은 냉전구조 속에서 국민들의 사상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잠재적이고도 또한 구조적 폭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결국 분단과 통일을 이루는 것은 한반도 전체의 평화정착을 위한 과정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통일과 평화의 상관관계에서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평화의 하위개념이 되며, 따라서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통일운동은 평화운동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여성운동과 평화운동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운동이 평화운동이고, 이것이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민족구성원 전체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 특히 남한사회에서 여성들은 평화운동, 즉 평화를 창조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여성들의 평화운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케 하는 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즉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서도 역시 ‘평화와 여성’이란 주제의 발표가 일본측에서 있었고, 여기에 대한 토론이 북조선과 남한에서 있었다. 북조선측의 토론에서 토론자는 여성이 본성적으로 평화지향적이라고 하면서 평화와 여성의 연관성을 설명하였다.

우리는 여성이 본성적으로 평화지향적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설명을 요구한다고 본다. 과연 여성의 평화지향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성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연유하는 것인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평화지향성은 모성에 기초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여성을 그 몸안에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여 양육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갈등과 폭력, 그리고 전쟁을 거부하는 평화를 지향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본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필요하겠지만, 여성의 모성에 기초한 평화운동의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의 고정화를 수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여성의 모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여성의 역할을 제한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모성에 기초한 평화지향성은 한편으로는 여성과 가족의 이기주의로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면만을 지닌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남한의 여성들의 평화운동을 통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지난 해 봄 걸프전이 발생하고 한국군의 파병이 미국으로 부터 요청되었을 때 우리는 “걸프전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한국사회에서 걸프전쟁은 반대하는 움직임은 여성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다양한 계층은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걸프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있었지만 혹시 자신의 남편과 아들이 그 전쟁터에 끌려갈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만 격렬해졌을 것이다. 이 운동은 통해 우리는 자식을 잉태하고 낳고 키우는 여성들의 평화지향성이 남성들에 비해 월등함을 깨닫게 되었다.

한편 한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여성운동, 주부운동 가운데 환경운동이 있다. 여성들은 ‘공해추방운동연합 여성위원회’, ‘환경을 살리는 여성들’, ‘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등 수 없이 많은 소모임을 통해 무공해농산물 먹기운동, 쓰레기 줄이기 운동,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 등을 펼치고 있는데 이 운동에서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1차적 요인은 역시 여성들이 가정의 식탁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통해 질병에 걸리고 또 그것은 유전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후손들이 기형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이 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자극하고 있다.

여성의 모성으로부터 출발한 평화지향성에 기초한 평화운동의 전개는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차원으로 떨어질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 즉 “내 자식은 전쟁터에 보내서는 안된다”라든지, “내 가족만은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는 안된다”라는 식의 이기주의를 전개될 위험성도 있다. 무공해농산물은 농약을 치지 않아 소규모로 생산되기 때문에 일반농산물 보다 가격이 높다. 따라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느정도 생활수준이 안정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한편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들 가운데 통일운동, 군축운동, 반핵운동, 환경운동은 자신들의 삶과 거리가 있다고 주장하곤 한다. 즉 이들 운동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당장 노동현장의 불평등한 임금 구조와 열악한 작업환경에 시달리는 상황, 그리고 여성농민의 경우 미국에 의한 농산물 수입 강요와 농업차별정책이 농민들의 생존의 기반을 와해시키고 있는 마당에 통일, 군축, 반핵, 환경의 문제는 강건너 불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 가난하고 억눌리는 여성들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통일운동, 군축운동, 반핵운동, 환경운동은 소수의 남성들과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그들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평화의 열매만을 기다릴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여성운동과 평화운동의 내적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에 있어 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기초한 평화지향성을 넘어선 보다 포괄적인 내적요인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한국여성들의 평화운동에 있어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즉 여성의 억압의 경험이 평화의 잠재적 가능성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왔지만 특

히 반평화적인 분단현실 속에서 여성들은 1차적인 희생자가 되었다. 반평화적인 상황에서 비롯되는 피해자적인 자질은 평화지향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희생적 관용성과 순응성이라는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화지향성인지 그 반대되는 희생적 관용성 혹은 순응성의 성향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여성의 억압상황을 드러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성향을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비판, 지양, 발전시켜 나간다면 현재에 존재하는 억압, 반평화를 해소할 수 있는 힘 내지는 대안이 된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모든 여성이 체험하고 있는 억압과 반평화적 상황에서의 경험은 이들로 하여금 다른 억압과 반평화적 상황에 대하여 감성적으로 쉽게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이다.

3. 여성들의 연대를 통한 평화운동

여기에서 우리는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남, 북, 일본여성들의 아세아의 평화를 위한 연대의 역할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차원에서 본다면 아직도 북조선과 일본은 미수교 상태이고 남과 북 역시 군사적으로 대치상황에 있다. 이런 공식적인 갈등관계를 여성들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여성들의 평화에의 의지와 연대를 통한 자매애(sisterhood)의 회복이라고 본다. 여기서 여성의 입장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각자가 속한 나라의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의식이 탄생된다. 현실적으로 국가의 이익에 반하고 그것을 비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항상 양심적인 소수에 의해서 행해져 왔다. 일본의 PKO 파병문제를 보아도 그렇다. 일본 국적을 가진 여성들로서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파병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소수 양심적 지식인과 여성들은 아세아에 있어서 보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PKO 파병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가 문제시 하는 정신대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신대 문제를 피해자 당사자들이 거론하기는 쉽지만 가해자인 일본의 여성들이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죄하며 배상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여성들의 고통과 고난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결국 여성들은 억압의 경험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나라의 정책에 대한 엄중한 비판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인식은 여성들의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이 중산층 중심의 운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즉 민중여성, 민중여성운동과의 연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내적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현재 남한사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평화군축운동에 민중운동 진영에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여민회'라는 민중여성단체는 이 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987년 현재 남한정부예산의 약 27.31%가 군사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여성과 아동, 노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비에는 단지 6.44% 정도만이 할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수치는 남한과 생활수준이 비슷한 중상위자본주의 국가들, 예를 들면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베니주엘라, 포르투갈 등의 나라들이 군사비에는 평균 12.41%, 사회복지비에는 평균 22.37%를 지출하는 것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 남한의 군사비와 복지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휴전상황 속에서 북조선과 끊임없는 군비경쟁을 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분단의 결과이며, 이 같은 파행적인 정부 예산편성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비는 감소되는 것이다. 더구나 여성들에 대한 복지예산은 적은 가운데 더욱 적게 책정되어 있어 모성 보호를 위한 탁아소 등의 시설이 절대부족한 현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분단구조 속에

서 가난한 여성이 분단모순과 성차별의 모순을 1차적으로 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명제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여성들의 평화군축운동은 삶의 자리로부터 시작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90년도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정부예산연감」에서 볼 때 군사비를 단 1%만 줄여도 직장여성들이 갈구하는 탁아소를 5배나 더 짓고 운영할 수 있다. 또 주택의 경우, 주택부족과 주거불량으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도 여성인데 군사비에서 연간 1조원씩 12년간 주택공급에 투자한다면 남한의 공식빈곤층에 속하는 계층(인구의 약 10%)의 주택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단 군비지출로 인한 사회복지비의 감소라는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여성들은 분단구조 속의 군사화된 사회 속에서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체제 속에서 다양한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왔다. 특히 미군의 주둔에 의한 기지촌여성의 문제도 포함된다. 결국 여성들에게 있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여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민족사적 과제 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존권의 차원에서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이 여성들로 하여금 다양한 방식의 평화통일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력이 되었다.

4. 새롭게 제기되는 경제정의와 평화문제

소련연방의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변화로 초래된 냉전 이후의 세계는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세계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비록 미국은 유일의 초강대국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냉전 이후에 동방 진영의 몰락은 미국의 전일적 영향 아래 있던 서방진영의 힘의 분화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즉 미국과 유럽의 EC공동체, 그리고 일본으로 하는 3극 체제로 분화되고 있으며, 이 분화를 촉진시키는 일차적 요인은 경제에 있다. 이데올로기가 중시되던 냉전 시대 이후 국제질서를 규정짓는 요인이 바로 민족을 바탕으로 한 경제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전세계적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동기는 미국의 국익(경제적 이익)을 냉전시대와 마찬가지로 공고히 관철시키려는 데 있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 역시 그것이 경제대국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측이 민족대단결의 논리를 민족경제의 결합으로 발전시키면서 남한의 대재벌 기업가들과의 교류를 확대시키려는 것은 북한경제의 필연적 요구에 의한 것이다. 남측의 재벌이 정부의 강경론자들이 주장하는 경제교류와 핵문제의 연계를 비판하고 경제교류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경제교류를 통해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평화창조에 있어 군축과 핵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정의 문제가 중요함을 발견하게 된다. 강대국 이익 중심의 힘의 논리에 의해 형성되는 국제질서나 재벌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경제교류에서 우리가 관심하고 있는 민중의 경제정의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정치권력이나 자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흡수통일에 대해 비판의 경계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독일통일의 경우만 보더라도 동독지역은 통일 이후에 서독의 내부식민지가 되었다고 말할 정도의 생활수준의 격차와 불황과 공장폐쇄로 인한 실업 등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실직문제가 더욱 심각하며, 동독시절에 누렸던 탁아와 가사노동의 사회화 등의 사회복지의 후퇴, 그리고 이질감과 정체성의 혼란에서 오는 여러가지 갈등상황에 놓여있어 독일통일의 최대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사회의 경우 현재 "통일 이후의 통일"문제가 전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여성들의 입장에서 통일과 통일이후의 사회에서의 경제정의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현지 진행되고 있는 가난한 여성들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여성노동자운동, 여성농민운동은 전체여성운동과 평화운동의 차원에서 연대를 이룩하여야 한다.

마치면서

현재 남한의 여성들이 전개하는 평화운동은 다양하다. 전쟁을 반대하고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반전반핵운동이 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원폭피해자 돕기운동으로부터 출발하여 보다 궁극적으로 핵과 전쟁을 반대하는, 그리하여 통일된 평화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평화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다. 또한 많은 여성대중을 참여시켜 통일과 평화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 운동을 확산시키려는 "평화한마당"이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작년에 연 "여성평화한마당"에서는 전쟁장남감 바꾸어 주기, 통일과 평화를 주제로 한 글짓기, 그림그리기 등을 통해 여성들의 정서에 부합한 통일운동의 내용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편 '참교육 실천을 위한 학부모연대회의'와 전교조를 통한 '평화교육'의 확산도 있다. 어릴때부터 공격성과 적대감을 갖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평화지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어머니와 교사의 역할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삶 속에서 평화를 실천하도록 하는 평화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교육은 비록 오랜기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세대를 키워냄으로써 장차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주역을 탄생시키려는 것이다. 현재 평화교육은 교회교육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그 전망은 매우 밝다.

이렇게 다양한 평화운동이 전개되고 여성들의 연대가 확산될 때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앞당겨 질 수 있으리라 본다.

한반도와 일본의 핵 어떻게 볼 것인가

조임숙(반핵평화운동연합 사무국장)

세계는 이제 핵전쟁의 악몽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과거 핵강대국이었던 미국이 소련의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폐기하고 있고 치열했던 핵경쟁은 이제 가라앉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 지역은 핵무기 철폐 문제가 아닌 오히려 핵개발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뿐더러 이러한 핵개발문제는 이 재역에서 심대한 정치, 군사적인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북한과 일본이 바로 핵개발의 의혹을 하고 있고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지역이지만 그에 대한 반향은 사뭇 대조적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미국과 그 동맹국인 남한, 일본 등 서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애초에 북한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금지라도 북한이 핵을 갖게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그들이 가장 혐의를 두고 있는 영변지역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말하자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EP)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바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냐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의 주된 요구사항은 북한이 IAEA의 사찰에 응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각종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는 영변핵시설에 대해 군사적 공격까지를 공공연히 거론하고 나섰다. 갈수록 미국의 정가에서 북한 핵시설을 차라리 폭격함으로써 문제의 근원을 뿌리뽑자는 강경파들이 득세하게 되었고 이에 놀란 북한은 세계적인 집단 안보체제인 유엔의 우산 안으로 피하기 위해 유엔에 가입하였고 이후 IAEA의 핵사찰을 수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북한에 사찰을 실시한 결과 미국의 기대에 어긋나게도 IAEA 사찰결과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은 또다시 북한이 어딘가 핵물질을 빼돌려 은닉할 수도 있다며 북한의 군사기지 사찰과 함께 상대방이 지적하면 24시간 내에 어디든 개방해야 한다는 특별사찰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상호사찰'을 새로운 요구조건으로 들고 나왔고 남한 정부와 일본도 '상호사찰'이란 새로운 주문사항을 합창하고 있다. 남한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은 이러한 핵문제가 요구대로 안될 경우 북한과 외교적, 경제적 관계 또한 진진시킬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상호사찰 문제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치, 외교적 압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합리적이라기 보다는 확고한 힘의 우위에 선 미국이 이 지역 동맹국들과 함께 뭉쳐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고 굴복을 요구하는 강대국의 오만한 모습이 두드러지는 것이었다. 한때 미국의 전략가들의 반응은 미국의 주요한 적이었던 소련이 갑자기 사라지자 적을 이제 누구로 하여 세계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을 까 당혹하였고 그들의 전략수립에 혼선을 빚는 모습이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대 군부정권이 그랬듯이 '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끊임없이 써먹으면서 지배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 적을 잃어버린 미국은 그리하여 적을 찾아서라도 주변약소국과 동맹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찾아낸 적은 '제3세계의 말쑥꾸러기'들이었다. 소위 지금까지 미국에 '땀보인 반항아'를 대상으로 한 지역분쟁개입을 자신의 주요한 군사적 목표로 삼고 있다. 예전처럼 소련의 눈치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군사적 '독무대'가 보장된 만큼 망설일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게다가 미국의 전략산업인 군수산업은 세계적 군축추세로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내외적 사정으론 극

도로 호전적으로 된 미국은 이라크를 대상으로 걸프전을 치렀고 리비아에 경제제재를 가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영변 폭격론으로 압력을 가할 뿐 아니라 미사일 생산, 인권 문제 등까지 트집잡고 있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이라크에 무기사찰을 응하지 않는다며 군사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사찰이 진행되었고 기실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든 안하든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이 명료해졌다. 그리하여 최근들어 미국은 애당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요구사항이었던 IAEA 핵사찰이 이루어지고 핵개발의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게 되자 이제 IAEA 사찰결과를 의심한다든가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CIA 국장인 게이츠 같은 사람은 IAEA 사무총장인 한스 블릭스가 북한의 숙임수에 넘어갔다는 식의 억측도 서슴지 않았다. 게다가 핵기지도 아닌 일반군사시설의 사찰 그리고 특별사찰은 미국이 아직도 남한의 핵무기에 대해 NCND(핵무기가 있는지 없는 지 말할 수 없다는)을 견지하고 있음과 견주어 볼 때 형평에 어긋나고 무리한 요구라 아니할 수 없다. 즉 이미 미핵무기가 지금까지 남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데도 미국은 있는지 없는 지 여부조차 말할 수 없다는 오만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순전히 추측만으로 일반 군사시설까지 다 까발려야 한다는 '상호사찰'이란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어려운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상호사찰압력은 미국의 진의가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있다기 보다 핵카드를 이용하여 북한의 완전한 굴복을 꾀하는 것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핵사찰 압력을 통한 대북 강경정책은 남북한간의 자주적인 통일과 교류의 움직임마저 가로막는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한의 이산가족을 비롯한 많은 민중들이 북한과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을 바라고 있고 남한의 기업가들은 북한의 싸고 양질의 노동력을 겨냥해 한시 빨리 북한으로 진출하고 싶어 안달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심지어 미국은 지난 해 말 남북간에 성사된 합의서 채택에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핵문제를 트집삼아 남한당국이 북한과 '너무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싸인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 사뭇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본의 핵개발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이다. 일본은 걸선중인 핵재처리 시설, 완공된 핵농축시설과 함께 핵연료사이클 완성을 서두르고 있고 2010년까지 플루토늄 100톤을 수입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30년 안에 세계 최대의 핵대국으로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위협적인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일본은 핵무장 운운하는 것은 억측이라면서 이 모든 것들은 평화적 이용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두가지 점에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미국 언론의 지적처럼 미국이 일본 원자로에 쓰이는 우라늄을 충분히 공급하는 상황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대량 도입하려는 의도는 그것만으로는 명쾌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 등이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려는 상황에서 농축우라늄 보다 비싼 플루토늄을 굳이 도입하려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일본의 핵 잠재력 확대는 현재 정력적으로 추진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과 떼어 놓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은 군사력 세계 제3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자위대의 해외파병 추진,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한 외교공세 등 군사대국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있는 핵잠재력의 확대는 곧 핵무장 징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일본의 핵무장 징후는 세계적인 군축과 비핵의 추세에 압적 요소가 될 뿐 아니라 동북아 안정을 저해하는 커다란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북한의 핵이 아니라 일본의 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몇 그램의 플루토늄량 밖에 추출한 적이 없는 북한에 대해서 국제여론은 당장 폭격해 버리겠다는 강경발언까지 서슴없이 나오는 분위기이며 아이러니하게도 옆에 있는 나라인 일본 - 향후 20년 이내 100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게 될 - 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너그러운 방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이젠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 아닐까. 불품없는 약소국과 든든한 파트너의 차이랄까.

일본의 핵대국화는 과거 군국주의자인 레이건과 나카소네 사이에서 항해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와서 미국은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어정쩡한 입장이다. 또한 플루토늄 수출 당사자인 영국과 프랑스도 자신의 이해가 걸려 있으므로 침묵을 지킬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북한에 둘러지고 있는 국제적인 여론재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북한 완전굴복 시키기'라는 의도 외에도 한가지가 더 있다고 보여지는 데 그것은 북한을 응징함으로써 일본에 대해 간접적 경고를 하자고 하는 미국의 의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장기적으로 보아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북한에 대한 핵압력 여론에 편승하여 모든 주의와 관심이 북한의 핵으로 둘러져 있는 호조건을 이용하여 거대한 핵잠재국이 될 준비를 소리없이 착착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3위의 군사력에다 핵무기까지 갖춘다면 일본의 위협은 가공할 만한 것이 될 것이며 동북아 뿐 아니라 세계 평화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이 불러 일으킬 주변국가들에 미치는 핵군축의 파급효과를 생각했을 때 이는 이 지역 및 세계 질서의 불안정으 리 물고 올 태풍의 눈이 될 것에 틀림없다.

참으로 씁쓰레한 일이다. 철저한 반공교육 아래 자란 필자로서 비로 동족이 북한이 강대국의 협잡과 놀음에 놀아나는 것에 빠져린 분노까지 느끼지 못한다 할 지라도, 적어도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놀음을 바라볼 때 같은 약소국으로서 설움에 공감할 수 밖에 없다.

북한에 대해서 국제여론은 '마녀재판'을 하면서 공통처럼 커가는 일본의 핵잠재력에 대해서는 서로 양해하는 '차별대우'를 볼 때 국제정치는 역시 힘을 가진 자들의 것임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핵문제를 둘러싼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진다 하겠다. 더군다나 북한 핵시설 폭격론은 남북한 전역을 방사능재로 뒤덮이게 할 극도로 위험한 계획이고 제2차 한국전을 도발하게 될 정도의 모험적인 계획인데 이땅의 군 통수권이 미국에 있는 관계로 그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발언권도 행사할 수 없는 삭, 르픈 현실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 이러한 냉혹한 국제질서의 논리는 우리에게 역시 우리 민족의 권리와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민족끼리 뭉칠 수 밖에 없다는 평범한 명제를 절감케도 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날 핵 확산 움직임을 막고 이 지역이 핵폭풍에서 영구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비핵지대화를 이룩해야 하며 이는 이 지역 평화우등 세력들의 연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핵지대화의 내용 또한 보다 포괄적으로 되어 아예 플루토늄과 같은 핵물질은 보유와 도입이 규제되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두리에게 두가지 방향의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첫째, 남북한과 미국, 독립국가 연합(CIS), 중국 등이 핵불사용과 한반도 핵반입금지를

약속하는 비핵지대화 협정을 체결하고 이 국가가 핵의 불사용을 약속하는 '비핵지대'의 창설이 우선되어 한반도가 안정화 되어야 한다. 미국과 정부가 합창하고 있는 상호사찰의 핵압력으로는 결코 문제를 풀 수 없다. 남북한 관계가 진전되는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문제를 엉키게 할 뿐이다. 둘째, 일본의 핵무장 준비 움직임에도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것이 국제적 여론화가 되어 사전에 경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한반도의 평화 및 우리민족의 자주의 성취, 통일이 더 빨리 올 것은 틀림 없다.

UN에서의 정신대문제 제기와 일본의 태도

신 해 수 (정대협 국제협력위원장)

1. 왜 정신대문제를 UN으로 가지고 갔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처음으로 UN에 정신대문제를 제기한 것은 작년 3월이었다. UN 사무총장에게 정신대문제의 개요에 대한 설명문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 이후 작년 8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인권소위원회에 정신대할머니 한분과 함께 정대협 대표 3명이 참석하여 소위원회에서 공식적 발언을 2번 했고, 민간단체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NGO 브리핑)에서 정신대할머니의 증언이 있었다. 12월 11-13일에는 UN인권소위원회의 배상문제특별보고관인 반보벤교수를 한국에 초청하여, "국제인권협약과 정신대문제"라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비록 반보벤교수가 개인자격으로 방한한 것이지만, 9일과 10일에 여기 동경에서 있었던 일본전후문제에 관한 국제공청회와 심포지움과 더불어, 정신대문제를 보다 더 국제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금년 2월에는 본인이 다시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민간단체 대상 설명회에서 한국 스트렐리아, 네델란드, 뉴질랜드의 전쟁포로피해자들과 함께 네델란드의 정신대피해자인 Ms. Ellen van der Ploeg가 증언하였다.

정신대문제가 한일간에 해결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국제여론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다.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 온 일본 여성들, 인권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정신대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 왔다. "65년의 한일협정때 이미 해결된 것이라 법적 책임이 없다", "민간업자가 한 것이지 정부나 군은 관여하지 않았다", "군이 일부 개입된 것은 인정하나 강제성은 없었다" 등으로, 우선 부인해 놓고 보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날 때마다 마지못해 조금씩 인정해 왔다.

2. UN인권위원회에서의 일본

이러한 일본정부의 회피적 태도는 제네바의 일본대표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두번의 NGO 브리핑에 일본대표부는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작년 8월에는 일본 사회당의 모토오카의원 이 참석하여 그 모임에서 인사말을 하였는데, 일본대표부의 그러한 무성의에 분노하여 일본대표부의 식사약속을 취소해버리고 말았다. 작년의 그 사건의 여파로 올해에는 아예 일본정부에서 NGO 브리핑에 참림 참석해서 듣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2월의 인권위원회에서 일본의 행동은 하나의 까ship거리로 등장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장 자리를 놓고 일본이 제3세계, 특히 아프리카 국가대표들을 매수한 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캄보디아에 파견된 PKO에게 정신대를 보내자는 한 일본지식인의 발언과 더불어, 이러한 언행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과연 리더의 역할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또 하나의 미스테리는 UN주재 일본언론의 태도이다. 마이니찌신문과 지지통신만 조금 관심을 보였을 뿐, 6개나 되는 UN주재 일본언론사들이 최소한의 취재활동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신대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때까지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정신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본이 국제평화를 논의할 자격도,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리더로 행동할 도덕적 기반도 없다. 정대협을 비롯해서 여러 민간단체들이 일본의 UN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회원국이 되는 것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아직도 나치전범을 처벌하고 있는 독일의 예에서 일본은 배워야 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범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신대희생자들의 원혼이 언제까지고 일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까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

- 여성의 참여를 위해서 -

- 북 여성 - 인권 관련 제정함으로써 issue가 중요해짐
- 이제까지 108-208의 인대들이 상하로 강연 해주었음
-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차였음
- 108, 208의 제로 참여하고
- 최저이로 개인적 강제성 주장 풀 정책은 국민
- 여성도 국제여성으로 되어야 함
- 한국정치의 이상 상황 - 통합 지인. 그러나 일본정치의
- 미 국제적 여성 인권
- 그러나, 민간조직의 운영은 강제성 있음
- 총체적 진상 규명도 공식 사적 기반에 배치되어
- 최저로 여성 인권 → 국제여성도 여성이 인권
- (108, 208의 이상) - 진상 규명 기반의 공식적 국제적
- 여성회
- 남측에서 인권 120, 208 내의 모든 여성으로 여성
- 여성의 인권은 문제 안함 - 진상 규명
- 위임서. 여성 인권
- 책이나 자료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

1. 북측에서 이 주제를 제안한 동기

- 최근 북한에서는 민족대단결의 문제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 과거 7.4 공동성명의 3대 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70년대에 양 정권에 의해 거의 휴지화 되었고, 더우기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민주의 원칙'으로 슬그머니 바꾸었다. 민주의 원칙은 명분으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통일 성취를 표방하고 있으나, 그것은 엄밀하게 보면, 선거에 의한 통일 방식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남측 자본주의 중심이 흡수통일을 상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왔다. 그러다가 지난 연말에 이루어진 남북합의서의 전문에 다시 양측이 '7.4 공동선언의 3대 원칙을 재확인 한다'라는 문구가 넣어짐으로써 북측의 비판은 정당성을 확인받게 되었고, 남측은 자신의 입장을 어느정도 제한해야 하게 되었다.

- 지금까지 북측에서는 민족대단결을 통해서 민족자주화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해왔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남한사회에서의 국가보안법 등 북을 적대시 하는 법률 등을 폐기를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해 왔다.

최근들어 북측은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에 47년의 분단사는 1%도 안되는 기간이다"라는 전제 아래 민족개념에 입각한 통일논의를 펼치고 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92년의 신년사에서 민족대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기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 맞게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 위업에 특색있는 기여를 하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며, 전국적 범위의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여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겨레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간부들과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북쪽 인사들에게 한 담화에서 한 말)

'민족의 혈맥'은 최근 남한을 방문한 북의 김달현 부총무의 입을 통해 '민족경제의 혈맥'으로 발전한다. 즉 북한은 최근들어 남북간의 경제교류 문제에 핵문제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관심하면서, 민족대단결의 문제를 민족경제의 측면까지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 따라서 북측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시한번 남한 정부의 통일방안에 표명된 '민주의 원칙을 폐기하는 효과를 거두고,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최근의 남북 핵사찰을 둘러싼 갈등을 민족대단결의 원칙 속에서 완화시키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2. 남한측의 민족대단결 논쟁에 대하여

그런데 남측 여성들의 통일논의에서 이 주제는 사실상 한번도 진지하게 취급되지 했던 점을 우선 솔직히 북측 여성들에게 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남측여성들은 이 주제를 여성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

는 북측 여성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미 남한의 통일운동권에서는 '민족대단결의 문제'에 대하여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과거 통일이 모든 진보적인 것을 담보하던 시절에는 '통일세력', '반통일세력'을 엄밀하게 구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권의 적극적 통일공세를 통한 6공화국 집권세력의 태도 변화와 관련하여 남한의 통일운동에서 '대단결'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자기들 나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정군담당자나 재벌들이 '진정한' 통일운동세력을 통일논의에서 배제할 뿐만 아니라 탄압하는 현실 속에서 이들과 포괄하는 민족대단결을 통일운동의 원칙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는 문제제기이다.

민족문제나 분단문제 보다는 남한 내부의 민주적 또는 민중적 변혁의 문제를 더 중시해 왔던 PD(민중민주주의) 진영에서 처음에 이 원칙을 문제삼았을 때에는 민족대단결론이 통일운동 세력 내에서 (자유주의)부르조아지의 헤게모니를 허용함으로써 '계급화해주의적 관점' 또는 '물계급적 관점'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통일운동 주류에서는 사상과 계급 혹은 과거의 전력을 따지지 말고 민족 구성원이 모두 단결해야만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권력의 일각을 구성하고 있는 자들이나 일부 (매판)자본가까지 통일운동에 끌어들이는 것이 ...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민족대단결은 통일운동의 핵심이다", 『경제와 사회』, 92년 여름 224면)

이것은 민족대단결에 자주나 민주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통일을 바라는 사람까지(즉 통일에 대해 동상이몽을 하고, 흡수통일을 바라는 사람까지도), 참여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결국 이 논리는 통일운동의 중립적 성격을 내세우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통일운동은 글자 그대로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합치는 운동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통일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진보에 기여할 지는 몰라도, 그 자체로는 진보나 보수나 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간에 통일운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앞글, 222면)

그런데 문제는 통일운동세력이 집권세력과 대단결해야겠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집권세력은 통일운동세력과 다른 꿈을 꾸면서라도 단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단절하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통일운동 세력의 대중적 영향력이 아직 미미한 상태에서 대단결의 주장은 착사랑이며, 흡수통일론의 들러리가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정대화, 「민족대단결론의 허구를 극복하자」, 『사회평론』 92년 4월호; 고세현, 「통일운동론의 몇가지 쟁점에 대하여」, 『창작과 비평』, 92년 가을호)

현재 이 논쟁은 진행 중에 있어 어떤 결론을 맺을 것인가를 추측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이같은 논쟁을 통하여 '어떤 통일이나'라는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른다. 통일이 그 자체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급모순, 민족모순과 불가분으로 얽혀 있는 분단모순을 해결함으로써 분단체제를 허물어 버리는 일이라면, 애당초 '어떤 통일'과 무관하게 설정된 통일세력, 반통일세력 구분의 형식논리는 무의미할 수 있다.(고세현)

3. 자주와 평화의 원칙을 담보해 주는 민족대단결의 원칙

'통일은 어떤 통일인가'라는 질문은 통일의 과정에서 민족대단결이 담보되어야 자주와 평화의 원칙이 실현된다는 주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위의 논쟁에서 민족대단결을 남한내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범주화 시킬 것인가의 문제와는 좀 다른 방향의 것으로, 민족대단결의 내용이 무엇이나는 것을 중심물음으로 한다. 통일신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주와 평화의 원칙은 통일의 방법론 뿐만 아니라 통일의 과정에서 그 목표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민족대단결이다. 역사적 경험을 예로 들어본다면, 신라는 당나라의 도움을 얻어 삼국을 통일하여 한반도의 주인이 될 수 있었지만 그 댓가로 만주까지 이어진 옛고구려의 영토를 상실함은 물론 당나라에게 예속됨으로써 자주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통일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자주권이 강화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보장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자주화의 원칙'은 국권론적 관점 뿐만 아니라 민권론적 관점에서도 이해되어야 한다. 베트남의 경우 통일함으로써 외세를 추방할 수 있었지만 국민들 사이의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향유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베트남 민중들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의 원칙' 역시 통일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통일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동서독의 경우 일찌기 기본조약을 통해 상대를 서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했고 UN에 들어가 국제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동서가 화해하는 일에 동참하여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들은 서로 상대를 의심하거나 고립시키거나 아니면 불리하게 정책을 입안하지 않고 오히려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에서 노력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들이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의 갈등들의 최소화 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주와 평화는 통일을 위한 수단과 동시에 통일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통일을 하려는 것은 민족이 외세의 지배로 인해서 분단된 것을 극복해서 하나되어 자주화하고 또 분단으로 인해서 겪은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를 수립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때 '어떤 통일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자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자주와 평화의 원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다. "사상과 제도,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의 궁극적 목표는 역시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까지 사상과 제도와 이념의 문제는 국내정치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서간의 냉전체제 하에서의 외세와 관련에서 온 문제였다. 이들의 차이들로 인하여 동서간의 갈등이 우리에게서 대리갈등 내지는 대리전쟁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민족대단결의 문제는 곧 민족의 자주화와 평화의 문제와 관련해서 고려되어야 한다. 자라서 민족의 자주화 없는 민족대단결을 깨뜨리고 이것은 곧 갈등과 전쟁을 불러왔던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 자주화 없는 민족대단결은 불가능하고 민족대단결 없는 민족의 평화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7.4 공동선언에 나타나 있는 3대 원칙들은 독자적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며, 꼭 독자적으로 실천될 수 없는 것이다.

4. 민족대단결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1) 갈등으로 가득찬 현실에서 화해를 위한 노력들

- (2)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노력들
- (3)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려는 노력들

글 머리에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란 주제로 남북, 일본 세 나라의 여성들이 모여 벌써 3번째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은 여성들의 연대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앞당기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한번 깨닫게 된다.

이 시간의 소 주제는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이다. 이 주제를 논함에 있어 필자는 먼저 평화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평화"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여성들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인은 이 글에서 평화가 요구되는 객관적 현실을 설명하기 보다는 주로 남한사회의 현실과 경험 속에서 여성들의 평화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1. 평화의 개념 - 적극적 의미의 평화

'평화'의 개념은 문화권에 따라 그 역점이 다르다. 고대 희랍세계에서 평화 즉 에이레네(eirene)는 질서와 정돈의 상태, 풍요한 번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유대교의 평화 샬롬(shalom)은 행복, 번영, 안전을 의미하며 그것은 정의(正義)와 반드시 결부되어 물가의 나무가 무럭무럭 성장하여 번영과 번창을 누리는 상태 처럼 인간의 삶의 온전성이 발휘되는 상태를 의미했다. 그런가 하면 로마의 평화 팍스(pax)는 정복에 의하여 실현된 전쟁이 없는 질서의 상태를 의미했다. 따라서 우리가 팍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팍스 로마나'(Pax Romana) 혹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라고 할 때는 강대국의 이해에 기초한 강대국 중심의 평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제3세계 민중의 삶의 온전성은 발휘될 수 없는 정의와 자유가 부재한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팍스 로마나 혹은 팍스 아메리카나라 불렀던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 사용되는 한자의 화평(和平)은 마음의 평안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 평화를 내포하고 있다. 즉 '화'(和)라는 한자음은 '쌀'을 뜻하는 '화'(禾)와 '먹을' '입'을 뜻하는 '구'(口)가 합쳐진 단어로 결국 '먹을 것이 평등해지는' 경제적 평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에서
한. 전쟁
↓
반대 개념

현대의 평화연구(peace studies)에서는 평화의 개념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평화의 반대개념으로 폭력을 생각하고 있다. 즉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없을 때 평화로운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폭력은 단순히 설명될 수 없다. 평화연구에서는 폭력을 세가지 범주, 즉 잠재적 폭력, 물리적 폭력, 구조적 폭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잠재적, 잠재적
해설

물리적 폭력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폭력이다. 구타, 고문,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강간 등이 그것이며 물리적 폭력이 극대화 된 것이 바로 전쟁이다. 전쟁은 가장 큰 물리적 폭력이면서도 국가에 의해서 합의되고 조직화된 폭력이다.

한편 구조적 폭력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제도적 폭력 혹은 구조적이라 할 수 있다. 구조적 폭력이란 한 사회나 구조나 체제가 갖는 폭력성을 말하는데, 가령 한 노동자가 저임금의 구조 때문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면 그는 이 사회로부터 구조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이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며 자아실현을 할 수 없는 것은 대체로 이 구조적 폭력에 의한 것이며, 실제로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땅이나 집이 없어서 굶주려 죽고, 영양실조로 죽게

되는 수천만의 사람들은 제국주의라는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라 할 수 있다.
 또한 잠재적 폭력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물리적, 구조적 폭력이 전제되어 있는 삶에서 미리 짐작하여 절망과 좌절감으로 희망이나 창의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성의 예를 들면 설명해 보기로 하자. 가부장적 문화권에서 우리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서 많은 제약을 받으며 살아왔다. "여자는 얌전해야 한다", "정숙해야 한다" 한편으로 남성에 대해서는 "남자는 적어도 용감하고 믿음직해야 한다" 등등의 기대가 있다. 이렇게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교육받을 때 여성들은 스스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 살아갈 것을 포기하고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안주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볼 때 일제시대로부터 이어진 '식민사관'(殖民史觀)이란 것이 있다. 그것은 가령 "조선인은 민족성이 분열적이다"라든지 "게으르다"든지 선천적으로 조선인이 일본인에 비해 열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에서 "따라서 일본에 비해 못사는 것은 당연하며,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논리적 비약을 낳았다. 이것이야말로 일제식민지 이후 오늘날까지 남한 사회에 남아 있는 식민사관이다.

이렇게 폭력의 개념을 다양하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평화를 단순히 물리적 폭력이나 전쟁의 반대개념으로 보아왔던 것은 소극적인 개념규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평화"란 '억압과 착취가 없고 인권과 사회정의가 보장된 사회에서만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이해에서 분단문제는 한국사회의 평화를 가로막는 총체적 폭력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즉 지난 40여년간의 남북의 군사대결은 전쟁이라는 최고의 물리적 폭력사용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해왔다. 이러한 분단과 휴전상태의 지속(즉 그것은 언제라도 다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이 남북한 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지었는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남한사회의 경험에서 본다면 분단현실은 냉전구조 속에서 국민들의 사상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잠재적이고도 또한 구조적 폭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결국 분단과 통일을 이루는 것은 한반도 전체의 평화정착을 위한 과정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통일과 평화의 상관관계에서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평화의 하위개념이 되며, 따라서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통일운동은 평화운동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여성운동과 평화운동 여성운동의 역할과 여성의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운동이 평화운동이고, 이것이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민족구성원 전체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 특히 남한사회에서 여성들은 평화운동, 즉 평화를 창조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여성들의 평화운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케 하는 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즉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서도 역시 '평화와 여성'이란 주제의 발표가 일본측에서 있었고, 여기에 대한 토론이 북조선과 남한에서 있었다. 북조선측의 토론에서 토론자는 여성이 본성적으로 평화지향적이라고 하면서 평화와 여성의 연관성을 설명하였다.

우리는 여성이 본성적으로 평화지향적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설명을 요구한다고 본다. 과연 여성의 평화지향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성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연유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평화지향성은 모성에 기초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여성을 그 몸안에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여 양육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갈등과 폭력, 그리고 전쟁을 거부하는 평화를 지향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요/주
 군사주
 2/7

평화 032
 이기주의 022
 반핵 022
 여성 053
 반핵 022
 평화 022
 이 022

본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필요하겠지만, 여성의 모성에 기초한 평화운동의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의 고정화를 수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여성의 모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여성의 역할을 제한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모성에 기초한 평화지향성은 한편으로는 여성과 가족의 이기주의로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면만을 지닌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남한의 여성들의 평화운동을 통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지난 해 봄 걸프전이 발생하고 한국군의 파병이 미국으로 부터 요청되었을 때 우리는 "걸프전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한국사회에서 걸프전쟁은 반대하는 움직임은 여성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다양한 계층은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걸프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있었지만 혹시 자신의 남편과 아들이 그 전쟁터에 끌려갈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만일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한국군 파병까지 갔더라면 여성들의 전쟁반대운동은 더욱 더 격렬해졌을 것이다. 이 운동은 통해 우리는 자식을 잉태하고 낳고 키우는 여성들의 평화지향성이 남성들에 비해 월등함을 깨닫게 되었다.

한편 한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여성운동, 주부운동 가운데 환경운동이 있다. 여성들은 '공해추방운동연합 여성위원회', '환경을 살리는 여성들', '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등 수 없이 많은 소모임을 통해 무공해농산물 먹기운동, 쓰레기 줄이기 운동,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 등을 펼치고 있는데 이 운동에서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1차적 요인은 역시 여성들이 가정의 식탁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통해 질병에 걸리고 또 그것은 유전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후손들이 기형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이 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자극하고 있다.

여성의 모성으로부터 출발한 평화지향성에 기초한 평화운동의 전개는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차원으로 떨어질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 즉 "내 자식은 전쟁터에 보내서는 안된다"라든지, "내 가족만은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는 안된다"라는 식의 이기주의를 언제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남한사회에서 중산층 중심의 운동으로 전개될 위험성도 있다. 무공해농산물은 농약을 치지 않아 소규모로 생산되기 때문에 일반농산물 보다 가격이 높다. 따라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느정도 생활수준이 안정된 사람들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한편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들 가운데 통일운동, 군축운동, 반핵운동, 환경운동은 자신들의 삶과 거리가 있다고 주장하곤 한다. 즉 이들 운동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당장 노동현장의 불평등한 임금구조와 열악한 작업환경에 시달리는 상황, 그리고 여성농민의 경우 미국에 의한 농산물 수입 강요와 농업차별정책이 농민들의 생존의 기반을 와해시키고 있는 마당에 통일, 군축, 반핵, 환경의 문제는 강건너 불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 가난하고 억눌리는 여성들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통일운동, 군축운동, 반핵운동, 환경운동은 소수의 남성들과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그들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평화의 열매만을 기다릴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여성운동과 평화운동의 내적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에 있어 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기초한 평화지향성을 넘어선 보다 포괄적인 내적요인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한국여성들의 평화운동에 있어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즉 여성의 역할의 경험이 평화의 잠재적 가능성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왔지만 특

2/7 이 2

2/7

히 반평화적인 분단현실 속에서 여성들은 1차적인 희생자가 되었다. 반평화적인 상황에서 비롯되는 피해자적인 자질은 평화지향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희생적 관용성과 준응성이라는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화지향성이라는지 그 반대되는 희생적 관용성 혹은 순응성의 성향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여성의 억압상황을 드러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성향을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비판, 지양, 발전시켜 나간다면 현재에 존재하는 억압, 반평화를 해소할 수 있는 힘 내지는 대안이 된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모든 여성이 체험하고 있는 억압과 반평화적 상황에서의 경험은 이들로 하여금 다른 억압과 반평화적 상황에 대하여 감성적으로 쉽게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이다.

3. 여성들의 연대를 통한 평화운동의 필요성

여기에서 우리는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남, 북, 일본여성들의 아세아의 평화를 위한 연대의 역할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차원에서 본다면 아직도 북조선과 일본은 미수교 상태이고 남과 북 역시 군사적으로 대치상황에 있다. 이런 공식적인 갈등관계를 여성들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여성들의 평화에의 의지와 연대를 통한 자매애(sisterhood)의 회복이라고 본다. 여기서 여성의 입장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각자가 속한 나라의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의식이 탄생된다. 현실적으로 국가의 이익에 반하고 그것을 비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항상 양심적인 소수에 의해서 행해져 왔다. 일본의 PKO 파병문제를 보아도 그렇다. 일본 국적을 가진 여성들로서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파병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소수 양심적 지식인과 여성들은 아세아에 있어서 보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PKO 파병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가 문제시 하는 정신대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신대 문제를 피해자 당사자들이 거론하기는 쉽지만 가해자인 일본의 여성들이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죄하며 배상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여성들의 고통과 고난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결국 여성들은 억압의 경험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나라의 정책에 대한 엄중한 비판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인적은 여성들의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이 중산층 중심의 운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즉 민중여성, 민중여성운동과의 연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내적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현재 남한사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평화군축운동에 민중운동 진영에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민회'라는 민중여성단체는 이 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987년 현재 남한정부예산의 약 27.31%가 군사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여성과 아동, 노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비에는 단지 6.44% 정도만이 할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수치는 남한과 생활수준이 비슷한 중상위 자본주의 국가들, 예를 들면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베니주엘라, 포르투갈 등의 나라들이 군사비에는 평균 12.41%, 사회복지비에는 평균 22.37%를 지출하는 것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 남한의 군사비와 복지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휴전상황 속에서 북조선과 끊임없는 군비경쟁을 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분단의 결과이며, 이 같은 파행적인 정부 예산편성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비는 감소되는 것이다. 더구나 여성들에 대한 복지예산은 적은 가운데 더욱 적게 책정되어 있어 모성 보호를 위한 탁아소 등의 시설이 절대부족한 현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분단구조 속에

고관운동

서 가난한 여성이 분단모순과 성차별의 모순을 1차적으로 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명제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여성들의 평화군축운동은 삶의 자리로부터 시작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90년도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정부예산연감」에서 볼 때 군사비를 단 1%만 줄여도 직장여성들이 갈구하는 탁아소를 5배나 더 짓고 운영할 수 있다. 또 주택의 경우, 주택부족과 주거불량으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도 여성인데 군사비에서 연간 1조원씩 12년간 주택공급에 투자한다면 남한의 공식빈곤층에 속하는 계층(인구의 약 10%)의 주택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단 군비지출로 인한 사회복지비의 감소라는 경제적인 측면 만이 아니라 여성들은 분단구조 속의 군사화된 사회 속에서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체제 속에서 최하단구조에, 경제적으로는 최저 빈곤계층에, 문화적으로는 군사문화의 심화 속에서 다양한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왔다. 특히 미군의 주둔에 의한 기지촌여성의 문제도 포함된다. 결국 여성들에게 있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여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민족사적 과제 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존권의 차원에서 요구된다. 이러한 인식이 여성들로 하여금 다양한 방식의 평화통일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력이 되었다.

4. 새롭게 제기되는 경제정의와 평화문제

소련연방의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변화로 초래된 냉전 이후의 세계는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세계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비록 미국은 유일의 초강대국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냉전 이후에 동방 진영의 몰락은 미국의 전일적 영향 아래 있던 서방진영의 힘의 분화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즉 미국과 유럽의 EC공동체, 그리고 일본으로 하는 3국 체제로 분화되고 있으며, 이 분화를 촉진시키는 일차적 요인은 경제에 있다. 이데올로기가 중시되던 냉전 시대 이후 국제질서를 규정짓는 요인이 바로 민족을 바탕으로 한 경제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전세계적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동기는 미국의 국익(경제적 이익)을 냉전시대와 마찬가지로 공고히 관철시키려는 데 있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 역시 그것이 경제대국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측이 민족대단결의 논리를 민족경제의 결합으로 발전시키면서 남한의 대재벌 기업가들과의 교류를 확대시키려는 것은 북한경제의 필연적 요구에 의한 것이다. 남측의 재벌이 정부의 강경론자들이 주장하는 경제교류와 핵문제의 연계를 비판하고 경제교류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경제교류를 통해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평화창조에 있어 군축과 핵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정의 문제가 중요함을 발견하게 된다. 강대국 이익 중심의 힘의 논리에 의해 형성되는 국제질서나 재벌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경제교류에서 우리가 관심하고 있는 민중의 경제정의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정치권력이나 자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흡수통일에 대해 비판의 경계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독일통일의 경우만 보더라도 동독지역은 통일 이후에 서독의 내부식민지가 되었다고 말할 정도의 생활수준의 격차와 불황과 공장폐쇄로 인한 실업 등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실직문제가 더욱 심각하며, 동독시절에 누렸던 탁아와 가사노동의 사회화 등의 사회복지의 후퇴, 그리고 이질감과 정체성의 혼란에서 오는 여러가지 갈등상황에 놓여있어 독일통일의 최대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사회의 경우 현재 "통일 이후의 통일"문제가 전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여성들의 입장에서 통일과 통일이후의 사회에서의 경제정의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현지 진행되고 있는 가난한 여성들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여성노동자운동, 여성농민운동은 전체여성운동과 평화운동의 차원에서 연대를 이룩하여야 한다.

마치면서

현재 남한의 여성들이 전개하는 평화운동은 다양하다. 전쟁을 반대하고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반전반핵운동이 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원폭피해자 돕기운동으로부터 출발하여 보다 궁극적으로 핵과 전쟁을 반대하는, 그리하여 통일된 평화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평화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다. 또한 많은 여성대중을 참여시켜 통일과 평화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 운동을 확산시키려는 "평화한마당"이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작년엔 연 "여성평화한마당"에서는 전쟁장남감 바꾸어 주기, 통일과 평화를 주제로 한 글짓기, 그림그리기 등을 통해 여성들의 정서에 부합한 통일운동의 내용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편 '참교육 실천을 위한 학부모연대회의'와 전교조를 통한 '평화교육'의 확산도 있다. 어릴때부터 공격성과 적대감을 갖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평화지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어머니와 교사의 역할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삶 속에서 평화를 실천하도록 하는 평화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교육은 비록 오랜기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세대를 키워냄으로써 점차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주역을 탄생시키려는 것이다. 현재 평화교육은 교회교육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그 전망은 매우 밝다.

이렇게 다양한 평화운동이 전개되고 여성들의 연대가 확산될 때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앞당겨 질 수 있으리라 본다.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에 관한 제3차 평양도론회 기 조 보고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

1992. 9. 2

여러분!

나는 남조선과 해외의 우리 자매들 그리고 일본의 여성들이 함께 참가한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이번 토론회의 첫째의제인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초보고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언어와 피부색, 풍습을 달리 하는 수백수천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는바와 같이 민족이란 피줄과 언어, 령토와 문화, 심리적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사회적집단입니다.

이렇게 정의되는 민족은 고립무원하게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의 관계속에서만 생존하게 되는것으로 하여 어느 민족이든지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단합을 도모하고 민족전체의 재능과 슬기를 한데 모아야 하는것입니다.

하기에 지나간 인류력사를 돌이켜보면 대소의 차이를

막론하고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의 존엄과 발전을 위해 민족의 단합을 자기의 생존적요구로 내세웠던것입니다.

더우기 이러저러한 요인으로 하여 수난과 곡절을 겪는 민족일수록 민족의 단합을 특별히 강조하고 절절히 호소해 왔다는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 역사의 갈피속에서도 오늘 우리 민족에게서처럼 민족의 대단결이 초미의 시대적중대사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제기되어본적이 없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사실상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대단결을 이룩하느냐 못하느냐 하는것은 민족의 존망을 좌우하는 절박하고도 중대한 문제로 되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이 이토록 중요한것만큼 북과 남, 해외의 녀성대표들이 자리를 같이 한 이번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것은 참으로 의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20세기의 마지막 분단민족으로 되어 민족의 대단결을 논의하지 않을수 없게 된것 자체가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타고 태어나 같은 언어와 같은 풍습을 이어오면서 대대손손 화목하게 살아온 세상에 보기도문 순결한 단일민족입니다.

지난날 우리 민족은 외세의 거듭되는 침략을 받아왔고 그 과정에 일부 지역이 일시적으로 강점된 때도 있었지만 언제한번도 하나의 모습을 잃은적이 없었습니다.

유구한 세월 우리 민족은 한산의 세모시와 길주의 마포, 녕변의 약산단과 전주의 창호지를 바꾸고 함경도처녀와 서울 총각, 전라도처녀와 평안도총각이 서로 시집장가를 오고가면서 의종게 살아왔습니다.

임진왜란때에는 부산의 동래산에서 봉화를 올리면 련이어 함경도의 무산과 웅기에서 타올라 온 겨레가 왜적치는 싸움에 떨쳐나서군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은 외세에게 국권이 강탈당한 이후 일제의 간악한 민족리간책동에 의하여 민족안에는 친일 매국세력이 생겨나 민족의 단합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으며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열된 이후 47년동안이나 격폐되어 남남처럼 살아오는 과정에 불행하게도 우리 민족안에는 서로 오해하고 불신하는 풍조가 생겨나고 심지어는 피줄을 같이한 겨레이면서도 적대시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분열시켜 통치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수법입니다.

미국이 남조선에 들어온 이후 시종일관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아왔으며 이른바 《공산주의위협》이라는 허위적인 선전으로 민족내부를 리간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여왔는데 대해서는 더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외세에 명줄을 건 민족안의 일부세력이 미국의 민족리간정책에 편승하여 민족내부에 반목과 대결을 고취하여 온것만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외세에 의해 강요되고 외세와 그에 추종하는 일부세력때문에 오래 지속되고 있는 나라의 분열을 끝장내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이 것처럼 절박하고도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민족대단결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조국통일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새삼스럽게 생각할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정립해보면 민족대단결이란 근 반세기동안의 민족분열과정에 생긴 오해와 불신을 가지고 한 피줄을 나눈 겨레로서 사상과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화해하고 단합하여 단일민족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것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다시말하여 민족대단결은 사상, 리념보다 전민족적 리익과 요구를 더 우선시하며 사상과 리념을 민족공동의 리익에 복종시켜나가는 풍조가 민족안에 지배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민족간에 오래동안 쌓이고 쌓인 오해와 불신, 갈등과 대립을 없애고 서로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며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어 우리 민족을 본래의 상태, 즉 하나의 유기체로 되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숭고한 의미를 가지는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과 떼어 놓을 수 없이 밀접히 련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모두가 입을 모아 한결같이 민족지상의 과제라고 하는 조국통일은 반드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해야 하며 그러자면 조국통일이 외세의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조건에서 7천만 겨레가 서로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이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통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외세와의 관계에서 북과 남을 포괄하는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며 민족내부적측면에서 보면 북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놓고보면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근본전제이자

곧 그 본질적내용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자면 반드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야 하며 그것을 떠나서 조국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대표 여러분!

지금 북과 남사이에는 역사적인 북남합의문건들이 채택 발효됨으로써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길에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습니다.

북남합의서는 본질에 있어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하고 협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서약한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남합의서의 구절구절마다에는 민족대단결의 사상이 관통되어 있으며 매조항들은 민족대단결과 직결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남합의서에 밝혀진 화해조항은 그 자체가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불가침조항과 협력, 교류

440

조항도 민족내부에 존재하는 《남침》과 북침에 대한 위구심을 없애고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것으로서 결국은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 문제와 직결된것입니다.

이처럼 북남합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민족대단결사상이 관통된 역사적인 합의문건으로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서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아니라 그자체가 현실이 아닌것처럼 가능성이 조성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저절로 현실로 전환되는것은 아닌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이제부터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현시기 우리 여성들앞에 나선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데 대한 의견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통일의 주체는 7천만 우리 민족이며 여기서 여성이 그 절반을 차지하고있는 이상 우리 여성들은 응당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앞장서야 하며 우리는 능히 그렇게 할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여성이 남성과 다른것은 체질적으로 부드럽고 다감

하며 이해심과 동정심이 많은것으로 하여 서로 싸우는것을 바라지 않는것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여성의 이러한 타고난 성품은 가정과 이웃, 나아가서 북남사이에서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합을 지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민족의 분렬로 인하여 남자들보다 더 가슴아픈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기때문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누구보다도 절절히 바라며 그 실현을 위한 실천투쟁에 적극 나설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여성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것입니다.

첫째로,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가는것입니다.

북과 남의 여성들의 경우를 놓고보더라도 신봉하는 사상

과 리념, 정견과 신앙이 같지 않으며 각자 그것을 귀중히 여기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상과 리념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그것은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형성되고 공고화된 우리 민족의 리익보다 귀중할수는 없습니다.

민족은 사상, 리념 이전의 존재이기때문에 민족이 있고서야 사상, 리념이 있을수 있으며 또 사상과 리념은 반드시 민족의 리익을 위해 복무하여야 하는것입니다.

민족의 리익을 저버린 그 어떤 사상과 리념이 있다면 엄격히 말해서 그것은 존재가치가 무의미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사상과 리념은 선택할수 있지만 민족은 선택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러한 리유로 하여 리념은 달라도 형제는 여전히 형제이듯이 리념을 같이 한다고 다른 민족이 같은 민족으로 될수 없고 리념이 다르다고 하여 하나의 민족이 다른 민족

으로 될수도 없는것입니다.

민족은 이렇게 사상, 리념 이전의 존재이고 그보다 귀중하기때문에 우리는 사상과 리념의 차이를 반드시 민족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하는것입니다.

현시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문제는 다름아닌 조국통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보다 더 중요한 민족적과업은 없으며 조국을 통일하는것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이제 더이상 하루도 지체시킬수 없는 가장 절박한 민족적과제이며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것과 직결된 최대의 과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구성원으로 살려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사상과 리념 그리고 정견과 신앙을 신봉하던 관계없이 그 차이를 덮어놓고 서로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만일 그 어떤 사람이나 세력이 자기들이 신봉하는 사상과 리념을 절대화하면서 다른 사상과 리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배척할래기를 한다면 후세에 가서 자기의 협소한 주의 주장에 포로되어 민족의 리익을 저버린 사람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민족적으로 단합하여 통일된 민족을 먼저 찾아야 하며 또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인정합니다.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고있으며 한집안속에서도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으며 또 아버지는 민족주의사상을 신봉하지만 아들은 다른 사상을 신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배척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가정으로 같은 민족으로 공존해나가고있습니다.

문제는 민족을 더 중시하고 민족적리익을 첫자리에 놓는 립장에 확고히 서는데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벌써 오래전부터 사상과 리념을 뛰어넘어 민족공동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한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조국의 광복을 위해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종교인들, 량심적인 민족자본가들을 포함한 각계 각층의 반일애국력량이 모두 단결하여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을 벌린것은 민족대단결의 훌륭한 모범으로 됩니다.

1948년에 평양에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가 성대하게 소집되고 훌륭한 결실을 맺은것도 민족대단결의 립장에서 통일협상의 첫 발자국을 땀 력사적인 사변이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나라와 민족이 하나로 되는 길을 찾으려는 일념에서 70고령의 문익환목사가 평양을 방문하여 훌륭한 공동성명을 낸것이나 1990년부터 3차례에 걸쳐

범민족대회가 성대히 개최된 사실 그리고 범민족통일음악회와 통일축구경기, 특히 북과 남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년 축구선수권대회에 유일팀을 이룩하여 공동으로 출전한 사실들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에 기여한 훌륭한 선함으로 됩니다.

그러한 실례를 더 이상 들지 않아도 우리가 《아세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를 3차례나 가진 것도 북과 남의 녀성들이 마음과 힘을 합쳐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려는 숭고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 민족은 비록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능히 단결할 수 있고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북과 남의 녀성들이 북남합의서의 정신에 맞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일을

공동으로 벌리는 것입니다.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북과 남이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같은 역사적인 민족대단결선언을 발효시킨 상태이며 쌍방이 다같이 지난날의 대결정책을 끝장내고 화해하고 단합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선언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북과 남이 실지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당면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애하는 근본요인들을 대담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랭정히 고찰해보면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는 북남 합의서의 실질적인 리행문제가 일정에 오른 마당에서까지 대결정책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으며 혈육들사이에 담을 쌓게 하고 민족의 혈맥을 차단하는 《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일부세력들은 외세와 함께 동족

을 적으로 하여 벌리는 대규모군사연습도 중지되지 않고 계속되고있습니다.

지어 일부세력은 동구라파사태에 현혹되어 상대방의 제도를 제압하고 자기의 체제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통일》하려는 《제도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집요하게 추구하고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을 사상, 리념이 다르다고 적대시하고 동족을 《승인》없이 만나고 해외에 나가 자기의 동포들과 통일론의를 했다고 하여 잡아가두고 처형하며 동족과 승패를 겨루려는 행위가 계속되는 조건에서는 합의서의 원만한 리행을 기대할수 없으며 민족대단결을 이룩할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민족의 단합을 원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북과 남 그리고 사상과 리념, 주의주장의 차이를 초월하여 어떤 세력도 민족의 단합을 가로막는 대결정책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사회적운동을 광범히 벌려야 할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보다도 우리 여성들이 동족을 적으로 대하

는 대결시대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인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철폐하며 동족을 적으로 하여 벌리는 위험한 전쟁연습을 중지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것은 오늘의 현실적조건을 고려할때 위험이 뒤따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살이와 지어는 생명까지도 내달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일이라는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아무리 어렵고 위험하다 하더라도 우리 여성들이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언젠가도 단합될수 없으며 결국 통일을 이루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호소는 다른 사람들의 호소보다 더 힘이 있으며 여성들의 애국운동은 다른 사회성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민족대단결을 위한 애국운동에 앞장섬으로써 가정과 이웃 그리고 온 민족이 그에 합류해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북과 남, 해외동포 여성들이 자주 만나야 한다고 봅니다.

혈육도 서로 자주 다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만나면 민족의 절반이 만나는 것으로 됩니다.

여성들이 만나면 서로 이해를 도모하기 마련이며 통일을 위한 길에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행동의 일치로 보게 되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3차례에 걸치는 이 토론회의 과정과 결과가 그것을 실증해준다고 봅니다.

북과 남의 여성들이 이렇게 마주 앉기전에는 오해도 많고 불신도 없지 않았으나 여러차례 만나는 과정에 많은 오해들이 풀렸고 마음도 뜻도 하나로 합쳐지고있음을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확인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성들의 마음에서부터 오해와 불신이 가셔지게 되면 인구의 절반이 오해와 불신을 가지고 단합하는 것으로 되며 점차 온 겨레의 마음속에서도 장벽이 허물어지고 민족의 대단결이 이룩되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북과 남의 여성들이 민족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개별적으로도 만나고 집체적으로도 만나며 토론회형식으로도 만나고 공식 회담의 형식으로도 자주 만날것을 주장합니다.

넷째로, 현시기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북과 남, 해외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들을 망라하는 공동의 여성조직을 내오는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통일의 길에서 사상과 리념을 초월하여 단합하자면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민족대단결에 대해서 말만 하고 호소나 해서는 실지로 대단결을 이룩할수 없습니다.

우리모두가 조국해방 50돛이 되는 1995년을 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확약한 이상 이제는 민족대단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행해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의 견지에서 보아도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여성단체들을 망라하는 통일적인 조직을 내오는것은 이미 성숙된 문제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토론회를 세번에 걸쳐 진행하고 여기에서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에 대해 흥금을 터놓고 의견을 나누었을뿐아니라 많은 문제들에서 견해의 일치를 본만큼 발전적견지에서 보아도 이제는 통일을 원하고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북과 남, 해외의 여성단체들을 망라하는 통일적인 조직을 내오는것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나는 북측여성대표단의 이름으로 이번 토론회에 북과 남, 해외 여성대표들이 광범히 참가한 이 기회에 나라의 통일과 민족대단결을 위한 북과 남, 해외 여성단체들의 협의기구로서 가칭 《민족통일여성단체협의회》와 같은 공동의 조직을 내올

것을 정중히 제기하는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은 결코 민족수난의 단순한 목격자, 무책임한 방관자로 남아있을수 없습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듯이 우리 민족의 존망과 관련되는 통일위업의 실현도 우리 민족 특히는 우리 여성들의 투쟁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시대와 민족앞에 지니고있는 중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같이 자각하고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민족 단합을 도모하고 나라의 통일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한 애국애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서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기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平壤 滯留 日程

日 字	時 間	日 程
9.1 (火)	10:00 오 후 저 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문점 통과 ○ 고려호텔 도착 ○ 평양산원, <u>탁아소</u> 참관 ○ 연회 (북측 준비위원회 주최)
9.2 (水)	오 전 오 후 저 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회 ○ 토론회 ○ <u>교예공연</u> (서커스) 관람 <u>학생소년공전</u>
9.3 (木)	오전(06:30) 오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 출발 ○ 금강산 등산 (구룡령, 옥류정)
9.4 (金)	오 전 오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 등산 (삼연대, 만수대, 삼연정) ○ 금강산 출발 * 20:30 경 평양도착
9.5 (土)	오 전 오 후 저 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u>참관</u> 서커스 평양소년공전 ○ <u>좌담회</u> <u>방직사</u> 학생소년공전 ○ <u>학생소년공전</u> 참관 ○ 연회 (북측 준비위원회 주최)
9.6 (日)	오 전 13:30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수대 창작사 <u>참관</u> (학생소년공전) 방직사 ○ <u>좌담회</u> <u>방직사</u> <u>학생소년공전</u> ○ 평양 출발 (2:30) ○ 판문점 통과 (5pm)

이민이 - 김근환